

第238回國會 (臨時會) 政務委員會會議錄 第 1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4月14日(月)

場 所 政務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 · 답변서】

(질의서)

(국무조정실)

○金允式 委員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제도, 정책조정 있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제도와 관련하여 비금융사를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부채비율이 작년말 기준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면 국내 대기업 순위 1위(공기업 포함시 2위)인 기업집단이 규제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유로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삼성을 계속 제한 대상으로 묶어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과 1년 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조항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대기업 순위 6위인 롯데와 7위인 포스코가 이미 2002년부터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정위가 동 제도(부채비율 100% 미만)를 개편하여 시행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면, 특정기업에 엄두에 둔 표적성 규제로 비칠수 있음은 물론, 정부정책을 믿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전경련 조사에 의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IS : Business Survey Index)는 90. 2로 계절적요인에 의해 회복세를 보인 3월의 109.0보다 18.8포인트 하락하여 향후 심한 경기부진이 예상되고, 2003년 1/4분기 외국인투자도 1998년 1/4분기의 5억 72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11억 800만 불로 전년동기(21억 4900만 불)에 비해 48.4% 감소함은 물론, 작년 4/4분기에 이어 감소세가 지

속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종합경기 BIS 추이

구분	9	10	11	12	2003. 1월	2	3	4
(전망)	118.5	115.1	98.6	95.6	91.9	89.3	109.0	90.2
(실적)	106.2	102.7	99.6	91.9	90.2	798	89.3	-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2년					2003년
	1/4Q	2/4Q	3/4Q	4/4Q	연간	1/4Q
금액 (증가율)	2,149 (39.3)	2,635 (20.0)	2,459 (1.0)	1,858 (△63.7)	9,101 (△19.4)	1,108 (△48.4)

얼마전 대통령께서 주관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소비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기인하여 1/4분기 성장률이 4%대로 낮아질 전망”이라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는 각종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때 정부 부처에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운용방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던 재벌의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국내·외 시장 구분이 없어지는 글로벌시대에 국내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외국기업들과 비교하면 역차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정부의 정책 조정능력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체도와 관련한 제도개편은 2002년 제도개편 후 기업집단의 출자동향·출자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편 후의 부작용과 긍정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신중히 검토해야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지난 4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용허가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음은 물론 국민들의 찬반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속 성장과 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는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원의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중소기업의 54.2%가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2002년 8월과 9월, 대학교수 등 각계전문가 161명과 국내 의사 343명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한 사례를 들어 고용허가제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많은 국민들이 조속한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2003년도에 실시된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약 70% 정도는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6082명중 69.4%인 4221명이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된 매일경제의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6.8%가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합뉴스를 통해 진행 중인 여론조사에서도 4월 10일 현재 전체응답자의 70.7%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매일경제가 중소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3%가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은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CEO들의 경우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인건비 부담의 경감 △노사분규 요인의 감소 △보다 많은 기업에게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제공 △불법체류자 고용시스템의 근절 △송출비리의 근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보장 △반한감정의 해소를 통한 우리 기업이미지의 향상 △외국의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꼽고 있습니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과 숙식비가 16만 3000원 감소하는 등의 효과로 인해 월 6만 4000원의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의 경우 법적지급의무는 없으나 내·외국인 지급 차별시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위반으로 동법 제115조(벌칙)에 의해 고용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고>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인건비 상승의견 비교(1인당, 월평균)

(단위 : 천원)

구 분		중소기업계	노동부
임금	상 여 금	+ 195	-
	퇴 직 금	+ 78	+ 78
	연·월차수당	+ 57	+ 53
	국민연금	+ 42	-
	소 계	+ 372	+ 131
부대비용	연수관리비	-	- 32
	숙 식 비	-	- 163
	소 계	-	- 195
합 계		+ 372	- 64

또한 숙식비의 경우 국내거주비용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 거액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인건비는 노동부의 자료처럼 1인당 6만 4000원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37만 2000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내국인대비 생산성은 76%에 불과하나 임금은 84%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이상의 인건비 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의 공동화와 붕괴가 우려됩니다.

일례로 지난 2002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지역 제조업체 2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4.1%의 기업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겼으며, 33.8%가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사 대상의 77.9%에 달하는 제조업체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력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 역시 제도의 탓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외국인력의 출입국 및 노무관리가 허술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혹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검토했다가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도입치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과 사회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4월 법무부는 고용허가제로 인한 정주화 등을 이유로 동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역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현재 정부부처간에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이견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국무조정실의 이견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아직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간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철저히 수렴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앞서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 등의 경영애로 요인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미국의 이민청처럼 외국인력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訓平 委員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조정역할 강화와 관련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3개의 법률에 근거한 국가유공자단체는 모두 19개인데 단체마다 지원혜택이 달라 국가유공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취업, 의료, 기타보호 등 구체적인 지원혜택을 명시하고 있지만 부처간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우법’에 근거한 ‘보철용차량지원’의 경우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4개 관련기관의 조정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1. 유공자를 지원함에 있어 부처간 이견은 국무조정실이 적극 간여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법률에 근거한 혜택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유공자지원혜택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편의 경우 할인혜택이 있지만 철도 ‘새마을호’의 경우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항공편에도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새마을호’에 대한 운임할인도 철도청과 협조해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3. 아직까지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이면서 유공자로서 보장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언제쯤 유공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는 990원짜리 ‘세녹스’라는 기름이 인기상한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휘발유보다 리터당 400원 이상 싸기 때문인데, 현재 이 연료를 판매한 중소기업대표는 산자부에 의해 ‘석유사업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이고 이 회사가 추가로 도입하려는 석탄액화연료는 산자부가 교통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 때문에 행정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애초에 이 연료가 ‘자동차 연료용 다목적 첨가제’로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추가로 도입하려는 석탄액화연료 역시 과학기술부로부터 대체에너지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4. 세계 각국이 이미 대체에너지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내년에 대체에너지 개발예산으로 9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부처간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부처간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국무조정실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이라크전쟁과 관련

이라크전쟁이후 세계경제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다시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민간연구소의 연구보고서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1.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해외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SK 분식회계’, ‘가계대출’ 등으로 야기된 국내 경제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로드쇼’등 다양한 대외신인도 개선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분야별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 이라크전쟁의 장기화를 실물경제가 위축될 경우 대중동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강화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3. 이라크에 파병이 예정된 우리나라로서는 전쟁 중은 물론이고 전쟁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테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4. 이라크에 대한 국내기업의 미수금이 현대건설

을 비롯한 4개업체에 총 15억 3백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경우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미수금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가능하다면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나라가 이라크파병결의안을 승인한 상황에서 전후 복구사업의 프로젝트참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예방대책과 관련

2001년 재난발생건수는 총 30만 1663건으로 사망 9854명을 포함해 40만 명 이상의 인적피해와 700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자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108명의 관련자중 징계 받은 인원은 21명, 19%에 불과했고 지난해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욱 낮아져 81명중 9명(10%)만이 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198명이 사망하고 14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구지하철사고 이후에도 서울, 부산 등에서 모두 11건의 전동차관련사고가 났지만 역시 관계자가 책임진 것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1. 더 이상 안전사고가 정부의 잘못에 의해 발생하는 ‘관재(官災)’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는 관련자 뿐 아니라 책임있는 자에 대한 엄중문책이 반드시 이루어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1982년 152량, 1983년 278량, 1984년 428량의 차량도입이 이루어져 상당수의 전동차가 노후하여 아무리 점검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이 25년으로 되어있지만 지하철이 서울에만 하루 600만 명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관련예산확보를 통하여 차량전체에 대한 정밀합동점검과 이에 따른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嚴虎聲 委員

정책혼선으로 국민혼란 가중시키는 「따로국밥식」 참여정부

- 참여정부 정책 혼선 사례
  - 대기업 내부거래조사

- 3월 12일 국무총리는 대기업에 대한 내부 거래조사를 연기하겠다고 하였으나 3월 13일 공정거래위원장은 2/4분기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적자재정 고려
  - 3월 12일, 기획예산처장관은 적자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으나, 3월 13일 경제부총리는 적자재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대북쌀지원 혼선
  - 3월 14일, 농림부 장관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올해 300만 섬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3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3월 15일, “결정된 정책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하였습니다.
- 법인세 인하
  - 3월 26일,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였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반대
- 고용허가제 문제
  - 3월 19일, 노동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정부안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4월 10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 시 2004년까지 공무원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기획예산처 박봉흠장관이 “한정된 정부예산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박 장관의 말이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중앙인사위 보고에서 이 부분은 외부에 발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타난 정책 혼선이 극심함에 따라 국민, 기업, 시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일관성을 잃어 경제주체들이 예측할 수 없으면 효과는 커녕 악영향만 나타날 뿐인데, 왜 이런 정책혼선 사례가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 이러한 정책혼선은 결국 국무조정실이 정책조정 역할을 제대로 안했거나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무총리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각 부처별로 제각각 중구난방식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 이런 정책혼선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특히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은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경제팀을 보면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등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시장은 출렁거리고 국민들만 속이 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부처 조정기능과 총리를 보좌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 역시 그 책임이 있지 않은가?
  - 노무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따로 국밥식”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가?
  - 참여정부가 국민을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 부처간 이견 조정, 오히려 감사원이 해결
  - 아직까지도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 부처간 이견 내용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자격기본법 개정 관련,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제정 관련,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관련 등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인인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오히려 감사원이 지난해에 감사를 통해 부처 및 지방단체 간 이견 조정을 완료한 것이 무려 17건이나 됩니다.
  - 도대체 본연의 업무가 부처간 조정업무인 국무조정실은 무엇하는 기관인가?
- 감사원이 나서서 각 부처간, 지자체간 정책조정을 완료한 사안
  1. 압축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시책 업무협조(환경부-산자부)
  2. 경춘선 광역전철화 사업(예산처-건교부-경기도)
  3. 재외국민2세 병역부과기준 관련(외교부-병무청)
  4. 경원선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철도청-의정부시)
  5. 동대구 입체교차로와 화랑로 연결공사(건교부-대구시)
  6. 철도위 교량(홍안과선교) 교통안전 시설(철도청-남양주시)

7. 철도소음 피해학교 방음벽 설치(철도청-서울 동부교육청)
8. 영광-해보간 상수도관로 이설사업추진(영광군-익산지방국토관리청)
9. 폐국도 관리 이관사업 추진(서울지방국토관리청-남양주시)
10.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 설치(안양시-의왕시)
11. 수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용인시-경기도)
12.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제천시-영월군)
13. 행정구역 경계조정(동대문구-성북구)
14. 시화방조제 도로 사용개시(시흥시-수자원공사)
15. 경부고속도로 대전남부연결선 건설(옥천군-고속철도공단)
16. 환경기초시설 광역화(화성시-오산시)
17. 조도대교 관리이관(국립공원관리공단-진도군)

규제개혁, 체감도 아직도 미흡하다.

-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과 기업은 미흡하다고 평가
- 규제개혁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정부에 의한 규제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론조사를 행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7%가 미흡하다고 평가
  - 매우 잘 되었다. 5%
  - 잘되었다. 8%
  - 보통이다. 10%
  - 미흡하다. 77%
- 그리고, “앞으로 어느 분야의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24%), 보건(23%), 환경(21%), 금융(19%), 토지(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98. 8. 31일 당시 등록 규제 수는 총 1만 716건이었으나, 4732건이 폐지되고, 1533건이 새로이 신설되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규제 수는 7675건입니다.
-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높다고 생각하는가?
- 규제개혁위원회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 동안 규제개혁을 단행했다고 답변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건수 면에서도 많은 규

제를 폐지했고,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국민과 기업들이 생활현장과 기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규제개혁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것이 아닌가?

- 각 부처별로 규제를 등록할 당시인 98년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 규제 수는 75건이었으나, 현재 등록 규제 수는 161건으로 오히려 86건의 규제가 증가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에도 98년 8월 31일 당시 548건이었으나 지금은 541건으로 거의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기업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기업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체감지수가 높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 규제개혁은 규제개혁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의 질, 즉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더욱이, 기업의 대주주나 최고 경영자들은 공정위와 금감위를 ‘시장의 조정자’ 또는 ‘시장의 감시자’로 여기기보다는 징벌과 제재를 휘두르는 ‘징벌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들 위원회가 행사하고 있는 규제가 증가하거나 별다르게 완화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규제개혁과 관련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현 정부, 경제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

- 국무조정실장, 현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위기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3개월여 동안 국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 <참고 :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 경제지표 비교>
  - 물가는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
  - 경상지수는 작년 12월 이후 내리 적자를 기록
  - 주가지수는 급락했고, 청년실업은 심각한 지경에 이름
- 5.7%로 예상됐던 경제성장률도 이미 4.1%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지요?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요?
-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북핵사태, 이라크전쟁 탓으로만 돌리고 “잠시 어려울 뿐 위기상황은 아니다”는 식의 안이한 태

- 도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민생경제문제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무현 정부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비판 언론을 향해 소위 ‘오보와의 전쟁’이라는 말로 언론통제와 언론 길들이기, 정계 개편 등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 경제지표 비교

구 분	당선 당시 2002. 12월말	취임 당시 2003. 2월말	최근 2003. 3~4월
소비자물가상승율 (삼성경제연구소)	3.7%(12월)	3.9%(2월)	4.5%(3월)
소비자평가지수 (통계청)	81.2(12월)	73.5(2월)	63.9(3월)
소비자기대지수 (통계청)	94.8(12월)	96.1(2월)	90.4(3월)
실업률 (통계청)	3.1%(12월)	3.7%(2월)	3.6%(3월)
20대 청년실업률 (통계청)	6.7%(12월)	8.5%(2월)	8.0%(3월)
대졸이상 실업률 (통계청)	3.0%(12월)	4.9%(2월)	5.3%(3월)
주가 지수	709.44(12. 20일)	592.25(2. 25일)	582.97(4.11일)
코스닥 지수	51.76(12. 20일)	42.43(2.25일)	41.08(4. 11일)
환율 (한국은행)	1204.7원(12. 20일)	1185.1원(2. 25일)	1229.6원(4. 11일)
경상수지 (통계청)	- 646백만달러 (12월)	- 21.9백만달러(2월)	3월 경상적자 크게 늘 것으로 추정
2003년 예측 경제성장률 (KDI)	5.7%(12월)		4.1%(4월)

- 정부의 불안한 리더쉽과 정책혼선으로 인해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국민과 기업은 경제가 어렵고, 위기상황이라고 아우성 쳐도 외면하는 것이 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 따라서, 국무총리의 정책보좌와 부처간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별로 국민들의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중요 현안사항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청년실업 심각, 청년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

- 청년실업률이 올 1/4분기 3개월 연속 8%대에 이르는 등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실업자 2.2명당 1명꼴로 37만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전체 실업률은 3.6%(80만7000명)
  - 전체 실업자 80만 7000명중 37만 5000명(46.0%)이 청년실업
-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실업률이 1% 포인트 증가하였고, 경제협력기구(OECD)가 채택한 실업률 기준으로는 12.3%에 달해, OECD국가 중 실업률이 꼴지에서 두 번째입니다.
- 특히 대졸 여성의 취업난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대졸 이상 여성실업률의 경우 1998년 18.9%에서 올 2월 36.8%로 급증하였습니다.
-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 20대의 60%가 “가능하면 이민을 가겠다”고 까지 답변해 내일의 주역이자 국가와 민족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 극심한 경기불황에다 북핵문제, SK글로벌 사태 등 잇따른 한국경제의 악재로 인해 투자심리는 극도로 위축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난해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대졸자 평균 취업경쟁률이 70대 1에서 경기가 더 나빠진 올해에는 120대 1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수십번 이력서를 내도 취업에 실패한 대졸자들이 단순 사무직과 서비스 직종으로 하향 지원하면서 고졸자들의 실업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이공계 기피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문사회계의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어 졸업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질과 기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 청년실업이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그런데, 정작 정부는 실업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아니라고 하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예산을 지난해 보다 750억원이나 삭감한 1550억원을 책정한 것에서 보더라도 정부가 청년실업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 보고서에는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부가 3월 19일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한 업무보고서입니다.
- 국무조정실장도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를 읽어 보셨나요?
- 국무조정실장!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쯤이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청년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방향이나 대책이 담겨 있어야 하겠지요?
- 그런데, 노동부가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한 업무보고서의 그 어느 페이지에서도 청년실업 문제해결의 정책방향이나 대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심지어는 ‘청년실업’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조차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 설령, 노동부 등 정부부처에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해결책을 세운다 해도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놓았다고 하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책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인데, 연수지원제와 취업지원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3개월인데 최대 6개월까지 임시적으로 운용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이 아닌가?  
- 연수지원제 : 연수에 참가한 청년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 6개월간 근무경력을 쌓도록 함.  
- 취업지원제 : 인턴사원을 고용한 기업은 매달 50만 원, 연수 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3개월분을 지원 받음.
- 이공계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문사회계의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고, 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졸업자들의 자질과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급위주의 인력정책을 지양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생산하는 소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이공계를 선호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결국, 청년실업의 문제는 경기가 나쁘면 신규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데다 숨가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학교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시스템과 맞춤형 교육을 마련하는 등 정부, 기업, 교육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런 대책기구를 마련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는 참여정부, 고위직에 인플레 현상

- 올해 들어, 각 부처들이 인수위 보고 때 요구한 인원은 거의 1만명이 넘는 수치이며,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3월 25일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에 접수된 각 부처의 증원 신청이 벌써 3000여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 국무조정실장!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커다란 패더다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참여정부 들어 지나치게 정부의 몸집이 불어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참여정부의 인원 및 직위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고위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대통령 비서실 : 장관급인 정책실장, 국가안전보좌관/ 차관급인 인사보좌관, 국민참여수석을 신설해 국민의 정부보다 장차관급 4명이 신설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장, 중앙박물관장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  
- 신설된 대통령 소속 행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장관급  
- 국무조정실 : 차관급 차장 신설 검토 중
-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책보좌관 설치 및 운용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장관급 국무위원이 기관장인 19개 중앙부처에 2~4급 정책보좌관 2~3명씩 총 41명을 두게 되며, 또한 지난 4월 7일, 노 대통령은 「기관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도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고위직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국무조정실장! 현 정부 들어, 이렇게 많은 고위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참여정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 아



년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여론수렴없이 결정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말로만 참여정부 사례

□ 허수아비 총리에 짓대 없는 국무조정실

-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가 끝난 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업무 주관부처 이관에 관한 토의 결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보육관련 업무의 여성부 이관·통합에 별 이견이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후 논란 지속
-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조정실장 역시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지요?
- 당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토의 결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들이 별 이견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인가?
- (별 이견이 없었다라고 하면)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장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가?
- (크게 반론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난 80년대부터 보육업무에 대한 부처 이관 문제는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던 것이지요?
- 지난 20년 전부터 보육업무는 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그리고 다시 복지부로 왔다가 정권이 바뀌자 교육부로, 그리고 또 다시 복지부로 이관되어 온 역사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 그 혼돈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이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한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 적어도 과거에 제기되었던 문제라도 언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문제는 3월 25일,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전에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던 사항 아닌가?

- 3월 18일, 한겨레신문 보도

□ 중요 정책과정에 복지부 실무자조차도 몰라, 말로만 참여정부 사례

- 더욱이 이번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문제 결

정은 국민은 물론이고, 실무자들이나 학계에서도 일체 논의된 바 없었습니다. 참여 정부의 슬로건을 내건 현 정부에게 더욱더 요구되고 중요한 이러한 민주적 절차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바로 말로만 생색내는 참여 정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보건복지부 직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3월 26일, “복지부 내부는 물론, 보육전문가나 보육사업 종사자 등 누구에게도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발표

- 사회복지 단체 성명서 발표

3월 26일,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는 업무 이관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의 보육시설이 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

□ 선진 복지 체계에 역행

- 선진복지국가의 복지 행정구조는 단일화 집중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반대로 복지부의 업무를 양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영국 : 보건복지성을 보건성과 복지성으로 나누어 복지성의 위상을 높였음.

- 일본 : 후생성(우리 나라의 복지부)에 노동성을 합쳐 후생노동성으로 통합

□ 부처 본질과 불일치

- 지난 3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 참여라는 국가 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아는가?
- 정부부처의 설립 목적 상, 복지부는 국민복지를 위한 부처이고 여성부는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부처입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아동을 주체로 보고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데 반해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가져오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아동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부처의 본질에 맞다고 생각되는가? 본질에 어긋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혼란 초래 우려

-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관계 공무원을 거쳐 지역 사회복지

지 전담공무원이 담당함. 지금도 현장에서는 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느라 업무 혼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여성부까지 등장하면 현장 실무자들의 행정업무는 더욱 혼란해 질 것인데, 국정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차라리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자는 견해도 있어
  - OECD국가의 대부분이 만 0~2살, 3~5살 등 연령별로 이원화하는 체제지만, 최근에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경우 보육업무가 과연 어느 부처가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중고 예체능과목 평가 및 수능시험 방식의 학력 평가 논란

- 중고 예체능 과목 평가방식 논란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나 4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중고교의 예체능 과목 평가 방식을 서열식에서 서술식이나 학업성취도 도달 여부만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평가방식 변경 이유
    1. 사교육비에서 예체능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심 <2000년 사교육비 규모는 7조 1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1.4%,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전체의 52% (3조 7000억 원)이고 이중 예체능교육비가 41%(1조 5000억 원)임>
    2. 내신 비중이 절대적인 일부 특수목적고 입학 위한 중학생들의 예체능 과외와 부유층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액 예체능 과외 성행
  -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일부에서는 「전인교육이나 체험학습을 강조하는 교육 당국의 기본 정책 방향과 거리가 멀다, 「일부 계층의 고액 예체능 과외만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 예체능 교육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본 위원은 지금도 학생들의 국영수 편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체능 평가 방식을 바꿔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이들 과목

에 대해 등한시하는 현상은 더욱 가중되리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체능 평가 방식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들로부터 줄어드는 사교육비가 국영수 등 주요과목 과외에 더 많이 투자하는 현상을 빚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말하는 절대 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수능시험 체제 반대 논란
  -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전문직 종사자의 39%가 수능시험 운영체제에 대해 반대해 찬성 1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4월 1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표
  - 해마다 수능시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수능시험 체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유관기관들이 전면적인 검토를 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장은 이를 제안할 의사가 있는가?
    - 적어도 수능시험을 연 2회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함.

공직(公職)으로 나간 교수로 인해 대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

- 참여정부 공직교수 11명,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만 돌아와
  - 참여정부 들어서 장·차관으로 발탁된 교수는 모두 11명
  - 공직 교수 모두 학교에서 휴직 허용을 받은 상태이며, 갑작스런 교수들의 공직 진출로 인한 피해는 교수도 학교도 아닌 학생에게만 적용
    - 학생 피해의 예 : 폐강, 시간강사 대체로 인한 강의의 질 저하, 지도교수의 공백으로 인한 논문준비학생 및 졸업예정자들의 혼란 등
  - 현 정부 들어 공직으로 진출한 교수는 11명에 달하며, 이들 공직 교수 문제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최근 들어 강하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노무현 정부에 참여한 교수들은 2월말이 돼 서야 학교 측에 이를 통보, 신학기를 앞둔 학교 측이 급하게 대체 시간강사를 구하거나 아예 폐강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공직을 가게 될 교수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은가?

<예>

- 운영관 외교부장관 : 6학점 중 대학원 강의 1개는 폐강, 학부강의는 시간강사에게 전가
-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 15학점 중 2과목 폐강, 나머지 3과목은 동료 교수나 시간강사에게 전가
- 탁병오 국무총리비서실장 : 9학점 모두 1명이 시간강사에게 전가

□尹 장관, 서울대 관례까지 깬 휴직 허용은 참여정부의 특혜

○1996년 12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 공직 임용 교수에게도 휴직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후 서울대 사회대 교수회의에서는 「정·관계 진출 교수에게 가능하면 사직을 권고한다」라는 윤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97년 3월, 중앙노동위원장에 내정된 배무기 교수도 사직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8일, 서울대 사회대는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외교부장관에 임명된 운영관 교수의 휴직 건의안을 통과시켜 관례를 깬습니다.(찬성 : 38명, 반대 : 17명)

○국무조정실장! 운영관 외교부장관이 서울대 사회대 윤리지침을 깨면서까지 휴직 허용을 받은 것은 지난 16대 대선 당시의 공로(외교정책자문)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본 위원은 서울대 사회대는 과거부터 유난히 정치바람이 센 곳이므로, 이번에 유독尹 장관만을 휴직 허용하게 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정치권과 학자들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학문연구 풍토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趙在煥 委員

재난관리기구와 관련

- 지난 3월 3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선진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회의’에서 민방위 재난국

장만 참석하고, 소방국장은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이런 이유 때문에 재난관리청 신설 방침과 관련, 소방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출발부터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여기에 참여한 소방관련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왜 언론에서는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청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발족시켜 가동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화재, 지진, 홍수, 가스폭발 등에 관해서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축학이나 안전관리학, 토목학, 화학 등을 전공한 위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재해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방재계획, 지리학 등을 전공한 의원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무엇입니까

-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이 두 분야의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무조정실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관련법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각각 있는데 이들 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3조에 보면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기본계획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전에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세우느라고 부산을 떨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이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재난관리 부처의 규모를 확대했지만 단지 행정기구의 확충이라는 양적인 대응 수준이어서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실장은 미국의 대통령 직속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는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관련기

- 관에 권고하는 기능까지 담당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조사는 철도사고는 철도청, 항공사고는 건교부, 해난사고는 해양수산부, 도로사고는 경찰청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의 경우에도 사고수습과 정부지원이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경찰청, 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신속한 지원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조사 기관이 사고발생과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이어서 객관적인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엔 어떤 의견입니까
  -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재난관리청은 이름만 그럴싸한 자리를 만들어 전문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는 이들에게 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安大崙 委員

대미 정책 관련

- “건강한 한·미 동맹관계회복 급하다”
- 금년은 한미동맹이 체결 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미묘하고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반세기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사 속에서 그리 흔치 않다고 합니다.
1. 지난 50년간 한·미 동맹이 이룩한 성과는 가장 성공적인 국가간 관계라는 평가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2.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구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러함에도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대상자 1200명 중 41.9%가 미국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는 통계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3.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 부정적 대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 반미 기류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서 남북 화해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켜 건전한 동맹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한·미 정책 당국자들의 시급한 과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반미 기류가 미국에서 부메랑처럼 반한 감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야 에서 공연히 미군철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지난 9일 끝난 「제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 협의회」에서 미군 측이 맡아오던 “선택된 일부임무”에 대한 책임을 한국 측이 맡는다는 내용의 협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택된 일부임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7.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 문제도 논의되었습니까?
  8. 경기도 동두천 일대에 배치된 주한 미 2사단의 병력은 전체 주한 미군 병력의 몇 %에 해당하니까?  
※ 40% = 1만 5000명 (주한미군전체 = 3만 7000명)
  9. 그렇다면 주한미군 2사단은 사실상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한반도 안보의 피뢰침 역할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미 2사단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것은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 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 논의 문제가 거론되었다면 한·미 동맹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10. 미 2사단 한강이남 배치 문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 시기상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전후 복구사업 참여와 이라크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유대강화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11. 실장께서는 최근 오카모토 유키오 일본 외교

담당 고문이 이라크 과도정부 수반 내정자인 제이 가너 미 예비역 소장과 회담한 사실과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2. 이처럼 이라크 종전이 임박하자 세계 여러 나라가 전후복구사업 참여를 통한 자국 이익 확보를 위해 한발 앞서 뛰는데 우리는 이라크전쟁 파병 결정을 해 놓고도 명분론 운운하며 아직도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 참여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13. 그 동안 대미 외교는 주로 행정부에 집중되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 의회와 미국의 싱크탱크 계층 등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대미 외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핵관련

“북한의 NPT 탈퇴 발효...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라크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라크에 이은 다음 목표가 어디냐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은 지난 9일 “대량살상 무기 개발의도를 가진 이란, 시리아, 북한 등은 이라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특정국가를 거명했다는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1. 「이라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는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의 경고성 발언은 「당사국은 전쟁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는 북한 핵 문제가 「이라크 문제와는 다르므로 북핵 문제는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침」이라는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의견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북한 핵과 관련된 미국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NPT 탈퇴 발효일인 지난 10일부터 북핵 문제는 유엔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은 「유엔에서의 북핵 논의는 전쟁전주곡」이라며 「유엔안보리의 어떤 결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일 고압적인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3. 지난 10일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되던 유엔안전

보장 이사회가 열릴 때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4. 그리고 북한의 NPT 탈퇴 발효에 즈음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공식 성명 발표라든가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5. 바로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북한의 NPT 탈퇴 발효일인 10일부터 북한의 핵 활동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요 유엔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마로 우리 민족생존의 문제요 한반도의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면 서도 북한에 어떤 메시지 한장 전하지 않은 것은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6. 중국의 고위 관리마저도 “북한은 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핵 시위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7. 북핵 문제 해결 없이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조국통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노무현 참여정부가 견지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8.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확고한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9. 결국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0. 본 위원도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적 해결이 어려워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때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외국인 고용 허가제 도입관련

“외국인 고용허가제 충분한 검토 후 입법화하는 것이 순리다”

1. 지금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관계부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면도입방안을 확정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주무장관인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지난 9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초 방침대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경제계와 중소기업 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하루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7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빼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2.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할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구 국제보상공원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290만 중소기업 장례식”까지 치른다고 난리인데... 이런 문제를 각 부처와 조율해 나가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업무 아닙니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무조정실장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3. 우리의 경제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침체 국면에 처해 있어 외국인 고용허가제까지 도입할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인데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4.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산업연수생들의 노동 생산성은 우리 국내 근로자의 76%선에서 머무는 반면 임금은 80%선이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국내 근로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생산성은 떨어지는 대신 임금부담은 20%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5.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노동 3권이 주어진다면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생기게 될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법쟁의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까?
6. 불법쟁의 때는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범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불법체류자 28만 7600여명이 법이 없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도 기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은 물론 불법체류 문제와 인력송출 비리 등을 해소하려는 교육지책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꼭 추진해야만 하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7. 따라서 업계와 좀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특정 업종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후 입법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타 세부적인 내용질의는 다음 회기 때 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 관련

- 한미간에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지난주 토요일 북한 외무성은 “만일 미국이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 조선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한다면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 1.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고집하던 북한이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라고 발표한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하던 다자간 협상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북한이 이러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인 배경은 무엇이라 판단하십니까?
- 2. 북핵 문제는 북미간의 양자간이나, 다자간이나는 협상의 형식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그 동안 대화의 자리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대화의 물고가 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진전된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 3.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 그리고 북한과의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한미간에 협상 방식에 관한 공동된 전략 마련이 성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앞으로 다자간 회담에는 한·미·북한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EU까지 가담하여 복잡한 국제적 게임의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 5. 이 경우 우리의 확고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崔在昇 委員

양성자가속기 유치후보지는 투명성과 재원확보 우선  
- 2012년 7월까지 10년간 1200여억 원 투입하는 대형사업

- 당초 일정대로 4월 중 적지 선정 차질없이 추진해야
- 평가과정의 투명성 및 투자 재원의 확보도 중요한 기준

일반적으로 양성자가속기는 「양성자를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해 원자핵 등과 충돌시켜 깨뜨리는 대형 핵물리 연구 장치로 생명기술(BT), 전력반도체(IT), 나노기술(NT) 등에 필수적인 설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 2012년 7월까지 10년간 1200여억 원 투입하는 대형사업

정부는 21세기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양성자가속기 개발 사업을 금년 7월부터 시작해 오는 2012년 6월까지 10년 간 1286억 원(정부 1157억 원, 민간 1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하는 대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성자가속기 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성자가속기가 설치될 부지 및 부대시설, 연구시설의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28일까지 사업유치기관을 공모한 결과 익산시, 철원군, 춘천시, 영광군, 경북대학교 등 5개 기관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4월 중 당초 추진일정대로 적지 선정 차질없이 추진해야

정부(과학기술부)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지난 3월초부터 현장 실사 및 발표, 폐널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말경이면 최종 후보지를 선정,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일정에 맞춰 적정지역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 정부 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적정지역 선정이 어렵게 되자 각 부처의 주요 지역사업(예: 과기부의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을 유치지역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요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4월말 적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양성자가속기 유치지역 선정이 일정기간 미뤄질 수도 있겠다는 성급한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국무조정실장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과정의 투명성 및 투자 재원의 확보도 중요한 기준

지난 11일 현재 5개 유치신청 기관별로 2차 평가를 마쳤고 마지막 3차 종합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유치기관 공모 시 발표한 사업 유치요건을 살펴보면 최소 10만평 이상의 부지제공은 물론 입지조건 및 시설확장성 등이 전체 배점 기준의 45%, 전력 및 용수공급 부대시설에 15%, 연구지원 시설을 위한 200억 원의 기본금 부담 등에 25% 등, 항목별 배점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평가위원들이 각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겠지만 그 과정의 투명성과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의 재원확보 가능성, 주변 지역민들의 민원제기 여부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언론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 기인한 국민 알권리 제한 우려
- 통합 브리핑 실시 전 기반조성이 우선 고려돼야
  - 중앙 정부청사 통합 브리핑 룸 별관 설치, 취재제한 비판
  - 균형감각 상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키는 정책 제시해야

최근 정부는 기존의 기자실을 폐쇄하고 국내외 모든 언론매체가 출입등록만 하면 취재활동을 할 수 있는 통합 브리핑 룸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언론 개혁이라는 대의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안으로 판단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찬반양론이 맞서는 등 사회적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통합 브리핑 실시 전 기반조성이 우선 고려돼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언론정책 현안에 대해 한국언론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의 신문, 방송, 통신사 기자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청와대와 정부 브리핑을 모든 매체에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58.7%로 그저 그렇다 28.6%, 반대 10.6%로 긍정적인 대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출입기자실 폐지 및 브리핑제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 40.3%, 그저 그렇다 32.1%, 반대 24.6%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아무리 올바른 국가 정책이라 하더라도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중앙청사 통합 브리핑 룸 별관 설치, 취재제한 비판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언론정책들이 가장 현관하게 쏟아졌습니다. 지난 2월 인수위 시절 청와대 기자실 운영방안 발표를 필두로 신문가판구독 금지, 3월 14일 문화관광부의 기자실 폐지와 브리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홍보 운영방안 발표, 3월 27일 국정홍보처의 사무실 방문취재 금지 및 장·차관 주1회 이상 정계 브리핑 실시 등 정부 부처 기자실 운영제도 방안 확정 발표, 4월 9일 청와대의 언론보도 내용 5가지 분류보고지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국정홍보처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정부 중앙청사의 통합 브리핑 룸 별관 설치 문제와 관련, 충실한 브리핑의 제공, 추가 취재에 대한 편의성, 취재원의 소극적인 협조 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부 부처에서는 업무 성격상 별도 기자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충분히 조율되지도 않은 정책들을 앞 다투어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제 도입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새로운 사회적 갈등만 노출시킨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정책들의 발표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감각 상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키는 정책제시 해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브리핑 룸 실시는 정보공개라는 대의에는 충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식적인 브리핑을 제외한 취재원의 접촉이 사실상 봉쇄된 통합 브리핑 룸 운용방침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업무 태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과소평가한 결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생명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공간에서 조작과 왜곡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론직필, 불편부당, 시시비비의 중심에 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언론정책은 부담스런 보도나 비판적인 접근에 대해 방어가 쉬운 언론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정부는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대립관계 형성과 인위적인 언론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과 기능, 성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 선임을 미루는 것은  
국정의 방기(放棄)다  
- 할 일 '태산' 방송위원회 '개점휴업' -

지난 2월 11일로 1기 방송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차기 방송위원들의 선임지연에 따라 방송정책이 난맥상을 보이며 방송계 현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KBS이사 추천과 MBC이사 임명 선임, EBS의 사장과 이사 임명은 물론 우리나라 방송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또한 현재 산적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디지털 전송방식 문제 등 방송계 현안의 조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방송대란이 우려되며,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방송위원은 방송법의 취지에 맞게 임명하면 될 문제입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안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흔들렸던 것은 방송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송위원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방송위원 선임이 필요하며, 선임과정에서 투명한 인사 절차와 검증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방송에 대한 전문성, 정치적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갖춘 인사가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위원 선임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은 국정의 방기나 다름없으며, 따라서 방송위원 선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  
 - 우리 문화 진흥과 발전위한 문화정책  
 - 국제사회의 문화 다양성 지켜낸 모범 사례

최근 정부 일각에서 한미투자협정 (BIT, 양자 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하면서 협정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제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들의 뜻이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적 합의사항이고,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문화정책 ‘스크린쿼터 현행유지’에 대해 ‘축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스크린쿼터제는 우리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문화정책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고유한 주권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회에서도 15대, 16대 두 번에 걸쳐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스크린쿼터는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낸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가 자유무역의 대상의 대상이 됨으로 인해 각국의 문화 정체성과 인류의 문화 다양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 할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 영화시장의 85%이상을 장악하여 수많은 나라들의 영화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무책임한 외화직배 허용으로 90년대 중반 한국영화가 고사의 위기를 맞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국영화의 약진은 한국영화의 유통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스크린쿼터제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개방을 통해 경쟁력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화정책

을 지켜나갔기에 한국영화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자국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문화정책이 자유무역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것의 출발은 무역협정에서 문화에 대한 개방요구를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문화적 예외’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문화적 예외’원칙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화적 예외는 무역협정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라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들의 정부와 세계 문화계는 문화를 무역협정에서 제외시키고, 국제법적 강제력을 갖는 ‘문화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47개국 문화부장관들이 참여하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와 세계 문화NGO들의 총회인 ‘문화다양성을 위한 네트워크(INCD)’는 ‘문화협약’의 초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화협약’은 각국의 문화정책 확대와 다른 문화를 침해하지 않는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을 파괴하는 자유무역의 위협을 극복하고 ‘공존과 교류’라는 문화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안을 현실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역시 시청각 서비스는 WTO, DDA 양허안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의 국제통상협정에서도 문화적 예외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방침을 지지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문화협약’ 체결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제가 GATT(관세·무역·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 4조가 인정하는 국제경제법상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자국의 재화와 용역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양자간 투자협정의 표준 문안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정부부처의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주권과 정체성을 한미투자협정(BIT)과 더 이상 흥정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李性憲 委員

“관(官)은 다스리기(治) 위해서 존재한다”

#### 1. 관치하려면 떳떳하게 문서로 남겨야

제정경제부에서 오랜 경제관료 생활을 하신 바 있는 국무조정실장께 물겠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든 카드채 문제로 인한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을 두고 관치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음. 정부는 지난 4월 3일, 시중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카드채를 떠안도록 하는 이른바 <4·3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 놓은 바 있음. 이 조치에 대해 금융계와 학계에선 “은행에 부실을 떠넘긴 부당한 조치”라며 비판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죽은 시장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맞서고 있는 국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한경와우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폴 그룬왈드 IMF 서울사무소장은 ‘비은행권은 재벌위주, 관치금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15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선진국형 금융개혁을 추구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감독당국은 정부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IMF는 그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선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이 은행의 카드채 매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석동국장은 ‘관은 다스리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호언하며 관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부 당국자들이 관치의 정당성을 그나마 살리려면 국무총리 훈령 408호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보장에 관한 규정>에 밝히고 있듯 문서에 의해 관치의 흔적도 분명히 남기고 책임도 지는 정직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IMF 구제금융사태까지 야기한 97년

의 외환위기시에 책임을 진 정부관료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고(故) 김성인 전 제주은행장은 고려무역 등에 대한 부당여신 지급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2년 4월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제주은행 창업자의 아들인 김 전행장은 제주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된 후 주식이 전량 소각돼 지분과 경영권을 모두 잃은 데다 연이은 문책경고 조치, 재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극심한 심적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의 부실책임 여부에 대해서 재판중이었습니다. 최근 사후재판에서 무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뇌물수수나 위법사실 등은 없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린 결정은 없었다는 게 법원과 금융계의 판단입니다.

최근 정부의 카드채 매입 강요에 따라 카드채를 매입한 은행 중 우리은행은 카드채 4923억 원을 인수했는데 채무구조가 나쁜 카드사의 채권을 매입하면서 담보나 지급보증도 없이 채권을 매입한 것입니다. 만약 카드사가 도산에 카드채가 휴지조각이 된다면 이덕훈 행장에게 똑 같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정부 보증을 요구한 은행장들을 ‘어르고 달래’서 강압적으로 무려 4조 6000억 원어치나 채권을 인수시킨 감독당국은 아무런 기록에 남지 않고 오직 결재서류에는 은행장과 담당임원의 결재만 남게 돼 이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강요한 것이 바로 관치입니다.

1. 정부는 금융기관 등의 경영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이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 408호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알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훈령 3조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관은 법령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문서나 회의로 절차에 따라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및 금융사업자 단체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카드채를 떠안도록 하는 이른바 <4·3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각 은행들에게 동훈령 5조의 지침대로 문서에 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의하지 않았다면 동 훈령 위반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의했다면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4월 9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시 우리 당의 김항식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4월 3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연합회에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금감위 모 국장이 노란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행별로 인수해야 하는 카드채가 할당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치의 전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카드채 문제의 수습과정을 보면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무려 85조 원에 육박하는 카드 관련 각종 채권의 규모가 어떻게 발급됐으며 그 동안 이것이 어떻게 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카드채 대란은 정책실패의 결과

1998년부터 시작돼 결과적으로 159조 원이나 투입된 금융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경제팀은 묘안을 냈는데 은행들이 공적자금 투입과 대량의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풍부해진 현금을 가지고 있고, 현재 6%대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경영정상화의 성과를 낼 수 없는 바, 카드사가 7~10%대로 발행하는 카드매출채권을 인수하여 위험 부담없이 앉아서 돈장사를 하는 한편 카드사들은 7~10%에 자금을 조달하여 23%대의 고율의 현금서비스를 운용하게 한 것입니다. 이른바 이자스프레드를 만들어 카드사와 은행 등 인수기관이 수익을 서로 챙기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상 카드남발로 인해 카드사용과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대출을 통해 내수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놓고 이것을 통해 IMF 외환위기의 극복과 구조조정의 성공으로 위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본 위원의 주장이 타당한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화되지 않은 가운데서 대출에 의한 소비촉진이 2년 정도 이뤄진 오늘에 있어서는 가계가 대출금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여신전문업감독규정에는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적은 자본금을 갖고 영업을 해야 하는 카드사로서는

아무리 높은 고율의 후순위채를 신용보강차원에서 발행해서라도 자금을 조달하려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 행태가 이 같은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한 카드사의 경영정상화는 쉽지 않으며 결국 금감원이 감독규정과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으로 카드 영업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모순적인 자금 조달 형태를 감독차원에서 건전화시키지 않으면 카드사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것입니다.

카드사의 엄청난 이익구조 그 배후에는 은행들의 경영정상화와 수익을 내는 구조를 조기에 가시화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이라는 정책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현 정부 경제팀의 노림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최대 피해자는 카드를 사용하는 국민들인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분노해야 할 것이며 결국 국민을 불모로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을 과시했던 경제팀은 그 책임을 통탄해야 할 것입니다.

가. 급격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확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신용카드와 관련된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금감원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무려 8번의 대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중 종합대책은 2002년 2월의 감독강화방안이 나온 이후 5월 종합대책, 2003년 3월과 4월의 종합대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이 종합대책이 한달 사이로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시장이 정부의 종합대책을 믿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급격한 카드감독 규제 대책으로 인해 카드회사들의 경영이 망쳐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대표적인 규제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강화에 있습니다. 충당금적립규모의 강화는 결국 은행들이 재무제표상 손실을 기록하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LG카드의 경우에는 1조 8000억 원을 충당금으로 더 쌓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영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규제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카드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량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규제까지 이뤄졌습니다.

나. 부대사업 축소가 신용불량회원 급증 야기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카드채 및 카드ABS(유동화채권)의 투신권 등 금융기관의 인수거절이나

환매요구는 카드회사의 유동성위기를 반영한 것인데 그 유동성위기는 카드사가 실제 손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카드사의 영업규모에 있어서 현금서비스 영업규모를 50%이하로 축소해야 하는 규제정책에 따라 이뤄진 회원의 거래한도 축소에 따른 신용축소로 이를 결제하지 못한 신용불량회원의 급증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의 카드대란은 가계의 신용위험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감독 당국이 규제를 만들어 규제 때문에 생겨난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시장의 안정화 대책은 감독당국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적정선으로 하향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금융 유관기관 사장단

마찬가지로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금융사업자단체의 장들을 교체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훈령위반은 물론 관치금융의 전형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증권전산 사장과 코스닥위원장, 증권금융 사장, 저축은행연합회장이 연쇄적으로 재정경제부 인사들로 자리바꿈을 했는데 임기가 남아있던 사장들에게 문서로 사퇴해 줄 것을 요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동 훈령 위반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재정경제부의 인사적체 해소와 자기식구 챙기기가 계속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 관련기관의 조직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세대가 바로 서야 조국이 산다!  
 청년세대가 '희망 그리고 미래'를 클릭할 수 있도록 청년세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시 적극적인 '국가간 벤치마킹'과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1. (가칭)국가인턴쉽제도의 도입을 왜 주저하는가?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통계청·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여성부가 공동 주관하는 (가칭)청년세대 노동력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청년세대 실업 문제를 계획적, 실무적으로 접근하라!

3. 청년실업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연계되어 '청년세대 편입 협의체'를 신설하라!

1. (가칭)국가인턴쉽제도의 도입을 왜 주저하는가?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본 위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당국의 통계 수치로는 설명이 안될 만큼 매우 심각한' 청년세대 실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국가 인턴쉽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정부가 먼저 매년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시켜 1년 1만 명씩 평균 2000만 원을 지급, 세계 각국의 경제현장에 내보내 세계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한국 청년세대 매년 양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로 청년세대 실업 해소는 물론 정보화·글로벌화되어가는 세계경제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김석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당시 국무총리의 답변과 관련하여 어떤 후속조치를 시행했는지 답변바랍니다. 후속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청년실업문제는 특히 대학졸업 고학력자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대학졸업장이 실업증명서가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정부가 반기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가칭)국가인턴쉽제도'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1998년 12월 당시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이 작성한 '정부지원 인턴제 운영안내'자료에 '해외인턴제 실시 계획'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본 위원의 제안 내용과 유사한 청년세대 실업 해소 방안을 정부에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른 점은 이때 해외인턴사업의 주체가 전경련의 회원사이고, 노동부가 보조금으로 해당 기업에게 1인당 최대 1년까지 84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지난 1999년 1월에 노동부의 '99년 종합 실업대책 해설 및 문답자료'에도 "해외인턴제 간접비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2000년 3월에는 재정경제부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1만 명 정도의 청년층을 해외에 보

내 무역 역군을 키운다”는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견해 표명에 따라, “54만 명에 달하는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자질이 우수한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기간 인턴사업 등으로 해외에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청이 추진 중이었던 해외창업개척요원 양성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청년 위주로 100~200명을 내보내고 그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사관 등 해외 공공기관과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등에 수개월간 인턴사원 형식으로 파견하는 방안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인력 소요 계획의 파악 등을 내용으로 그 구체적 계획까지를 검토했었습니다.

본 위원의 (가칭)‘국가인턴십 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이미 국무조정실장은 김석수 전 국무총리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고, 과거 지난 3년간 정부도 노동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해외인턴제’라는 이름으로 소요예산, 구체적 실행방안 등 다양한 세부계획까지 수립한 바 있어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년세대 실업 해결의 의지가 없음’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4대 의무를 다해야 국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세대들에게는 “취직, 결혼, 출산, 육아”라는 4대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터넷 세대’의 출현은 현실화되었지만, 정작 100만 명이 넘는 청년세대들이 취업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을 헤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청년세대들에게 국가가 ‘희망을 클릭할 수 있는 미래의 창을 열어주는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계속 ‘희망’을 클릭하지 못하고 ‘취직’의 검색어 앞에서 무너지다면 이들에게는 ‘절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상황으로 몰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미래와 세계속의 한국은 “폐쇄된 사이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시장이 청년세대의 직업관과 근로의식의 변화를 청년세대에게 먼저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노력이 먼저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은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제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인 노동부와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2.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통계청·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여성부가 공동 주관하는 (가칭)‘청년세대 노동력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청년세대 실업 문제를 계획적, 실무적으로 접근하라!

- 이를 통해 (가칭)‘Vision2020 - 1535 청년세대 고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 실시하라!

현재 청년세대 실업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세대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 현상’입니다.

공급측면에서는 △대학졸업자 급증, 낮은 경쟁력 등 대학의 구조개혁 지연 △대학졸업장 따기 등 학벌 선호 경향 △3D업종, 중소기업 기피 등 청년세대 직업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요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신규채용 억제 등 경제성장의 둔화△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낮은 고용창출 등 산업구조의 변화 △경력직 선호, 상시구조조정 등 기업의 인력 정책변화를 주된 요인으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청년세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야기시켰으며 청년세대 실업의 증가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세대들은 12년간 공교육 체계속에서 배우고 그 후 대학에서 4년간, 최근에 2년간 더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교육비를 지불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취업 과외비를 수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취업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년세대 실업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이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땀질 처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계획적이고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년세대 실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부의 청년세대 실업률 통계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의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고 청년세대 실업 문제는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데드락(Dead Lock)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대처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통계청·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여성부가 참여하는 ‘(가칭)청년세대 노동력 수급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청년세대 실업 문제를 계획적, 실무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직까지 청년세대 실업의 해결 방향에 대한 가치 선택에 대한 방침이 부재한 조건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위원회 제도를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노동력 수급관리계획을 벤치마킹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년실업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들이 연계된 ‘청년세대 편입 협의체’를 신설하라!

현재 청년세대 실업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졸업자 이상의 고학력 실업 문제’ 말고도 △15세 이상의 무취학, 무취업 청소년층의 실업문제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적 실업 격차 문제 △지방대학과 비 명문대 졸업자와 고졸자의 실업 문제 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되지 않아 반강제적으로 사회에서 낙오자로 취급받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해하고 가족·또래집단·지역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을 각 부처의 단편적인 예산 편성과 대응만으로는 이러한 ‘청년세대 실업자 층’을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업, 교육, 복지, 지역사회로 그 분야를 나눠 이들을 종합적이고 섬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칭)

이를 위해 청년실업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노동부·교육인적자

원부·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연계된 ‘(가칭)청년세대 편입 협의체’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미 프랑스, 독일에서는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협의체를 통해 종합적인 청년실업 정책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이를 관련 부처와 협의, 검토해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지난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긴장의 국면으로 밀어 넣은 이후 그간에 있었던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 과정을 반추해 보면 미국은 핵 협상을 통해 북한 핵에 대해 투명성이 아니라 동결에 중점을 둔 것이었고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한국정부를 배제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전략목표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핵의 동결과 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뤄진 협약사항은 사실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시간 벌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인 2002년 10월 3~5일,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미국 특사의 방북시 북한의 우라늄 핵폭탄 개발계획이 드러남으로써(10월 16일 미 국무부가 공식확인), 확인된 것입니다. 이로써 1994년부터 작동해온 북·미 제네바합의문(Agreed Framework)의 존속이 불투명해지고 북한 핵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부터 대북 중유제공 중단을 단행하자 북한은 이를 일방적인 제네바합의의 파기 움직임이라고 비난하고, 이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에는 외무성 대변인의 특별담화를 통해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결정에 대응, “전력시설에 필요한 핵 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한다”고 밝혀 제네바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어 12월 22일에는 핵 관련 시설 네 곳의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 카메라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했고, 23일에는 폐(廢)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재처리시설인 방화화학실험에 대한 봉인을 제거했으며, 25일에는 새 연료봉을 5MW급 원자로 시설로 옮기는 등 원자로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27일에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관 추방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IAEA의 핵

동결 감시에서 벗어났고, 2003년 1월 10일 전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공식선언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를 본격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핵 카드를 앞세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체제생존을 모색하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무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 중앙 통신사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만일 미국이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조선 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자대화 수용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동안 강력 거부해 온 다자 대화 수용 가능성을 비친 것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사태 진전으로 파악되며 이것은 아마도 이라크 전쟁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북한이 다자대화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대담한 전환’을 내건 데 반해 미국은 ‘핵 동결이 아닌 핵 포기’를 대화의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은 최소한 북한의 핵 포기 의사표시가 있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 북한은 먼저 미국의 입장 천명을 요구하는 형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전히 명분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전이 종전 국면을 맞음에 따라 북한 핵 문제가 국제 이슈로 다시 전면에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사국들의 의중 타진용 제스처 빈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장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 일본 간 공조협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언론의 싸움 국무조정실이 조정해야**

국무조정실은 각종 국정운영 회의체를 통해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조정하기 위해 △국무회의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 △당면현안 대처를 위한 관계장·차관회의 활성화 △국무조정실장 주재 주무차관회의, 전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 정례화(월

1회) △범정부적, 중장기적 주요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비 등을 국정운영의 활성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현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오보(誤報)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방송사를 제외한 언론사들과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국정홍보처내에 <오보대응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놓고 정부 각 부처로부터 매일 오전 10시만 되면 오보와 문제보도에 대해 일일보고를 받고 있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도경위, 언론사의 정보입수경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국정홍보처는 지난 4월 9일, 정부중앙청사 5개 부처기자실을 모두 없애고 별관인 외교부 청사에 통합브리핑 룸과 기사송고실을 만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의 공보관회의를 소집해 통보했으며 각 부처 공보관은 이에 대해 반대를 표시하자 설득 중에 있다고 합니다.

1. 국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정홍보처가 이 같이 각 부처에 일일보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고 아울러 국무조정실과 사전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정홍보처의 이러한 조치는 고건 총리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는 사전에 보고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난 4월 10일, 청와대 정책상황비서실에선 각 부처에 신문기사를 5지선다형으로 평가해 일일보고 하라는 구두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국정홍보처의 일일보고 시달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청와대를 비롯한 현 정부의 일부 부처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마녀 사냥 식으로 언론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더 늦기 전에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

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건 총리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 종합청사 기자실 폐쇄작업을 지난 11일 재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리의 구두 지시가 있는 후 청와대와 국정홍보처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청와대의 5지선다 보고지침, 문화관광부의 홍보 업무 운영방안, 정부 5개 부처의 기자실 폐쇄와 통합 브리핑룸, 오보대응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판단합니다. 헌법 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진실만을 쓰라고 하면서 진실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려 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준수조항’ 하나없는 국무회의규정 개정안  
- 민간부문 참여시 ‘정보유출’ 등 부작용을 막아야 -

지난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무회의 규정중개정령안’을 보면, 제8조제2항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1963년 12월 31일 국무회의규정이 최초로 제정된 지 40년 만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국무회의규정 [제정 1963.12.31 대통령령 제 1592호])

이 민간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신설은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테마 국무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대통령인 국무회의 의장이 행정부문의 공무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민간인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이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시각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행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뿐만 아니라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등 국가안보와 군사 그리고 행정부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외 중요정보 분석상황,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현황,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책의 추진현황 등 국가안보와 군사 그리고 행정부 전체 및 각 부처의 의사결정과정 상 중요 정보들이 보고(국무회의규정 제3조(의안제출)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이를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되고 공유되는 자리입니다.

국무회의가 민간부문 전문가를 배석시켜 소위 ‘토론형 국무회의’의 모델을 만들고 ‘국민참여형 국무회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시도해 볼만한 일이지만, 정부의 국가안보와 군사 그리고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고하는 중요한 정보사항과 관련하여 비밀준수 조항 등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통일정책에 관련된 대통령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정책 건의를 수행하는 ‘통일고문회의’도 민간부문 사회각계의 대표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규정에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통일고문회의규정 제10조(비밀보호)고문회의의 고문과 연구위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해 비밀보호 조항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성격상 민간부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원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국무회의에 민간부문 전문가들을 참여시키자는 취지는 좋으나, 민간부문 전문가들에 대한 비밀준수 조항을 국무회의 규정에 신설해 ‘각종 국무회의때 다뤄지는 내용’에 대한 사적 이용이나 정보 유출 등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었던 사실 등 노무현 정부 관련자들의 보안의식이 취약한 점을 지적)

또 법제처에서 심사까지 마친 국무회의 규정인 민간부문 참석자에 대한 비밀준수 조항 하나 제



대로 스크린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답변바랍니다.

혹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문제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책임총리제'를 모토로 하는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영성하게 입안, 집행되지 않을까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 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국무회의규정 제3조 (의안제출)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이를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중요정보 분석상황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현황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책의 추진현황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행하여 할 중요한 사항
5. 부처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전문개정 1982.9.18]

○金富謙 委員

1.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하여

- 한·칠레 FTA협정체결 이후에 추가적으로 2개 국가와 FTA협정 추진 중
  - 본 위원이 외교통상부에 알아 본 바로는 일본과 싱가포르와 FTA협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인가?
  - 또한 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파나마, 페루, 이스라엘,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0여국이 우리나라에 FTA 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
- (EFTA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 무역연합)
- 이들 국가의 제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응답을 하였는가?

- FTA체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농업현실이 큰 장애물인데 농업분야를 어떻게 대비하면서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가?
- 이미 추진 중이거나 제의를 받은 국가 외 우리와 경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중국, EU가 빠져 있는데, 이들 국가와의 FTA체결에 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2.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 청소년 정책의 일원화에 대한 대책은?
  - 정부내 청소년 보호정책기구를 보면 보호정책의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 보호위원회(1급)와 육성정책의 문화관광부(청소년국, 2급)로 이원화되어 있고,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등 18개 전부처에 청소년업무가 산재되어 있어 총괄·조정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정권부터 계속 지적되어온 것입니다.
  - 신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지하철 안전사고 중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70%에 달함

- 최근 3년간 지하철 공사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95건 중, 고장에 의한 사고가 총 66건으로 70%나 됩니다.

- 사고 내역별로는 운전사고(열차탈선) 1건, 차량탈선 1건, 차량고장 40건, 신호장치고장 12건, 전기고장 12건, 선로고장 2건, 취급부주의 10건, 기타 17건입니다.
- 하루에도 수천만 국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잦은 고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난번 대구 참사 이후로는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차량고장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정기 점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처럼 잔 고장이 잦은 까닭은 무엇인가?
-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향후 관리 및 조치가 책임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련 당국의 조치내역을 보면 한가롭기 짝이 없습니다.
  - 대부분이 기계에 책임을 묻는 “정비철저”나 사후약방문식 “승무원교육”인데, 전담 부서 및 윗선 인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최근 3년간 지하철공사의 안전사고 현황
  - 서울지하철공사(43건)
    - 노선별 사고 발생건수가 많은 순으로 2호선(21), 3호선(11), 4호선(8), 1호선(3)
  - 서울도시철도공사(28건)
    - 노선별 사고 발생건수가 많은 순으로 5호선(18), 7호선(7), 8호선(2), 6호선(1)
  - 부산교통공단(17건)
    - 1호선(12) - 열차탈선('00.6.2), 승무원 음주운전('00.10.31)
    - 2호선(5)
  - 대구지하철공사(5건)
  - 인천지하철공사(2건)
- 4. 장·차관 당연직 이사들의 대리참석으로 총리실 산하 연구회 이사회가 형식적인 회의로 추락
  - 국무총리실 소관 5개 연구회의 최근 2년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공기술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연구회의 이사회 경우 관련 부처 기관장들의 대리 참석율이 99.9%에 이릅니다.
  - 대리 참석은 당연직 이사에 재직 중인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며, 이들 대부분이 5개 연구회에 전원 또는 2개 이상의 겸직중인데 대부분이 대리 참석으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2년간 기초기술연구회는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만 단 1번씩 참석하였습니다.
-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우 전체 18회의 임시 및 정기회의 개최 총 과기부는 절반 출석(9번), 산자부는 1/3출석(6번)함으로써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조차 대리참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정부부처 주요 당연직 이사들이 거의 대부분 대리참석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각 부 장·차관들의 경우 당연직 이사로 중복 임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의 고유업무상 이사회 참석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내실 있는 이사회 운영을 위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기타 업무의 과중함을 고려할 때 참석 유무에 매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또한 이해되기도 하는데, 중복 이사직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朴柱千 委員**

1. 이라크전 및 북핵 문제 관련

지난 3주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이라크 전쟁은 며칠전 바그다드 함락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종결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세계경영전략이 노골화된 현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은 우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북미 또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긴장 해소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자원부는 지난 9일 현재 전쟁발발 17일간 수출차질은 건수로는 454건, 금액으로는 5953만 불에 달하고, 유형별로는 상담중단, 선적중단, 대금회수 지연의 순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를 비롯한 국내에너지 수급에는 원유가 안정세 등에 힘입어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실질적 피해는 대금회수 지연과 선적중단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운영자금 압박이 심해진다는데 있으며, 모건 스탠리의 지적대로라면 선진경제의 침체로 인해 아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석유수급등 에너지분야 대책, 중동을 비롯한 권역별 해외시작대책, 수출기업 애로 해소방안등 분야별로 일사분란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덧붙인다면 KOTRA에서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대중동 수출이 오히려 26.4% 증가한 사실을 들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후복구사업을 포함해 이라크경제 재건에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불안요인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라크전 이후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의 완화 내지 해소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이라크전이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UN 안보리의 의결 없이도,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결정적 위협이 된다는 뚜렷한 물적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소위 자위를 위해 선제공격을 불사한다는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비롯된 전쟁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프리 존스 같은 사람이 기고를 통해 주장하고 있듯이 9·11테러 이후 미국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고로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자위와 방어를 명분으로 선제공격을 통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공공연히 북한에 대해 무릎을 꿇던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북한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엔 한반도가 불행한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너무나도 절박한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국론을 통합하는 한편 북미대화의 고리역할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군부대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확연하게 양론으로 나뉘지는 과정을 보았듯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새로 출범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수준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위원회 운영 관련

감사원에서는 지난 3월 12일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정부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를 정비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별반 달라진 점이 없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를 요약해보면 97년말 451개였던 정부위원회가 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99년말 420개까지 감소했지만 2002년 4월말 현재는 517개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의 증가에 따라 사무조직도 확대되었고 부령, 훈령 등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2년마다 하는 위원회 정비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97년말 71개였던 것이 2002년말 현재는 134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여전하다는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을 장관급등 고위직 위주로 함으로써 불참석 또는 대리참석이 빈번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나 전문가가 배제되는가 하면, 법정 심의대상 안건을 아예 심의하지 않는 등 위원회 설치목적에 무색한 경우가 상당수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정부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위원회 정비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행자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감사결과에도 있지만 부령, 훈령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정비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사례가 그렇고 전체 정부기관이 해당되는 사안을 정부조직, 인력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자 부에 맡기는 것은 너무 기능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단기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던가 해서 정부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더욱 명

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측 위원을 실무적, 전문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국과장, 실무자급을 포함해 구성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517개중 18.8%인 97개 위원회의 위원이 장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위원이 장관급이 52개 위원회는 회의소집 곤란 등을 이유로 운영실적이 거의 없거나 서면심의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바뀌어나가야 할지를 그 자체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격년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 정비시 운영실적에 따라 예외 없이 위원회 폐지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필요해서 만든 위원회라 할지라도 활동이 없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정말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다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제기이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삼아 정부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관련

정부는 지난 3월 17일 국무총리 훈령 제437호 국가재난 관리시스템기획단 운영규정안에 의해 행사부내에 동기획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기획단의 주요임무로는 부처별 재해재난 관련 기능분석, 재난관리청 설립을 위한 기구, 정원안의 준비와 관련 직제의 제, 개정안 마련, 재난관리기본법안 마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주장되어 왔지만 대구참사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재난관리청 설치를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해야할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기획단 인적구성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재난관리청 설립에 있어서 기능의 집중이나 효율적인 분산이나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목적하는 재난관리청의 역할은 이중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동기획단 구성과 운영과정에 재난현장경험이 풍부한 소방관계자가 배제되고 일반직

공무원 일색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보면 인명구조는 물론 현장수습 전반에 걸쳐 소방관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재난관리기구의 정점에 소방관계자가 위치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지휘와 사태수습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재난관리청의 체계는 기민한 현장지휘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조직으로 구성되어야만 기관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답변바랍니다.

### ○田瑢源 委員

신용불량문제는 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회사들의 이익만 산출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한 회원확보 경쟁과, 업계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외면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함께 빛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을 눈감아 주는 느슨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금융난을 소비자의 과소비행태와 카드업계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정책을 지나치게 단기적 안목으로 적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떠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제완화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그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제 완화만을 위한 규제완화는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전자메일이나 이동전화를 통한 과다경품 제공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형태의 변칙적인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정착시키는 중장기적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며 기존의 규제대책 중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우선 이렇게 신용불량자를 무더기로 양산한데는 카드회사와 판매업자들의 무리한 영업활동의 책임이 큼니다. 카드사용자들은 그간 가두에서 행해지는 신용카드 가입 권유행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등의 판매활동, 과잉여신행위 등으로 수입을 넘는 지출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인식 및 사회적 여건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하고 계도할 법·제도적 장치가 미처 따르지 못해 현재의 신용사회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과연 카드사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혹시 걸림돌 역할을 해온 것은 아십니까?

지난 2001년 7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카드회사의 과당경쟁을 막고자 마련한 ‘가두판매’ 금지조치에 규개위는 이 조치가 공공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감독의 사항이기에 금지자체를 규정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덧붙여 이 가두모집행위가 도로교통법 등에 위반될 경우에 한해서 관할관청 등에서 단속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규정의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2001 12월 역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카드발급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카드발급시 소득이 있음에 대한 증빙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규개위는 이를 수정하여 카드신청인이 카드를 발급받을 의사 및 소득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규정으로 완화,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개위의 규제완화 조치는 카드업계의 경영난과 가계부채의 급증을 우려한 금감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현재의 신용불량문제에 대한 사전조치를 어렵게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라는 단기적 안목의 조치는 결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의 건전성을 해치고 신용위기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불가피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규제들이 단기적 안목으로 완화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서)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金富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외교통상부에 알아본 바로는 일본과 싱가포르와 FTA협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또,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각각 산관학 공동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 결과에 따라 우리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부간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일본 : '02년 7월~'03년 4월 산·관·학 공동연구회 5차례 개최

- 싱가포르 : '03년 3월 산·관·학 공동연구회 발족, 6개월간 운영 예정

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파나마, 페루, 이스라엘,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0여국이 우리나라에 FTA 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이들 국가의 제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응답을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 그러나 제안 경로는 공식적인 제안 외에 비 공식적인 실무자급 회의나 서신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개별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대상국별로 FTA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 우리산업의 경쟁력 여부, 정치·외교적 고려, 국내적 개방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FTA체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농업현실이 큰 장애물인데 농업분야를 어떻게 대비하면서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칠레 FTA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한·칠레 FTA와 향후 추가적인 FTA체결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 이행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간에 특별기금 설치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추진중이거나 제의를 받은 국가의 우리와 경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중국, EU가 빠져 있는데 이들 국가와의 FTA체결에 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미국, 중국, EU와는 경제적·전략적 차원에서 FTA를 체결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 다만, FTA는 상대국이 있는 개별적인 협상

체결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적인 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공식적으로 FTA 체결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우리측 으로서도 농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정책의 일원화에 대한 대책과 신정부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정부의 청소년정책이 육성부문은 문화관광부가 보호부문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 이 문제와 관련 새로 구성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하철 안전사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① 최근 3년간 차량고장에 의한 사고가 70%나 되는데, 차량고장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정기점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많은 이유를 물으신 데 대하여 지하철 운행과정에서 출입문 고장 등으로 승객을 하차시키고 다음열차로 수송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전동차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이나, 출입문 레일에 볼펜·신문지 등 이물질이 끼어 일어난 사고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전동차 사전점검 및 정비시 철저히 기함은 물론, 지하철이용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② ③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한 정기보고 및 책임 있는 향후 관리와 조치여부 등을 물으신데 대하여 도시철도 운영자는 운영과 관련하여 열차가 다른 열차와 충돌하거나 접촉하는 등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고 즉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열차가 탈선하여 30분 이상 열차의 운전이 지장을 준 때
  - 화재발생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손실이 발생한 때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시에 5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때 등

- 정부에서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지하철 사고예방을 위하여 전동차 및 시설 등의 점검·정비 등을 철저히 하도록 긴급 지시한 바 있으며, 이행상태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3. 6~10)을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 아울러 건설교통부내에 지하철안전기획단(3. 10)을 구성하여, 시설·운영 등 지하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5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 연구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  
 - 정부부처 당연직 이사들이 대부분 대리참석하는 이유  
 - 각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이사로 중복 임명되고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참석이 어려운 데, 내실있는 이사회 운영을 위한 대책과 중복이사직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 현재 연구회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는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의 차관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정현안 업무 수행일정 등으로 부득이 이사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의거 차관의 위임을 받은 국장이상이 참석하여 연구회 현안업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일부부처 차관은 당연직 이사직을 중복으로 맡게되어 직접 참석률이 낮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와 같은 당연직 이사의 중복은 감독관청, 정책업무 관련부처 등 연구회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중복 이사직 문제 해소와 참석률 제고를 위해 당연직 이사를 현재 차관에서 하위직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위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이사회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등 당연직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金允式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편은 2002년 제도개편 후 기업집단의 출자동향·출자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편 후의 부작용과 긍정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신중히 결정되도록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정위에서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입니다.

- 2002년도 출자동향을 제출받아 분석한 뒤, 민·관합동 TF(5월중 구성)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앞으로 개선방안 마련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투자 활성화 측면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 등 문제 발생시 적극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부처간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이견은 없었는지 밝히고 만약 있었다면 그 이견조정 과정은

○ 정부는 그 동안 단순기능인력의 부족현상과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수차례의 공식·비공식회의, 민·관 합동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 그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나 토론과 조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정부는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현행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일부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고용허가제 도입자체의 반대는 아니었고,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산자부, 중기청)과 고용허가제 도입시 외국인력의 정주화 등 부작용 방지대책과 함께 검토(법무부)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 향후 고용허가제 세부시행 방안 논의과정에서 각계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에 관한 국민여론을 철저히 수렴하고 검토하였는지?

○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국인력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실무작업, 워크숍, 각종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력 정책 및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 특히 동 기획단에는 관계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민간부문에서도 참여하였습니다.

○ 고용허가제 도입의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로서

도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이전에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와 경쟁력 제고 방안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미국의 이민청과 같은 외국인력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각계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근무지도 등 외국인력 관련 제반사업을 담당시킬 예정입니다.

- 향후 고용허가제를 시행해 가면서 필요할 경우 외국인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朴柱千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이라크전 및 북핵문제 관련,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이라크 문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라크전이 북핵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관련국들과 남·북 대화 채널을 활용, 적극적인 대북 설득 노력을 전개 중입니다.

지난 3월 12일 감사원의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삼아 정부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기능이 중복되거나 기능강화가 필요한 위원회는 기능을 조정하고,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4월 7일 출범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연계하여 위원회의 기능이나 조직 정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 위원회 정비 실적 : '00~'02년 총 50개소 정비  
- '00년 15개, '01년 15개, '02년 20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 및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① 현재까지 기획단 인적구성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
  - i) 기획단 인적구성 현황 : 별첨 1
  - ii) 기획단의 업무추진 현황
-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안전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 재난관리 체제 개편을 위하여 각 부처에 분산관리 운영되는 재난관련 기능의 총괄 조정 등 통합기능 확보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난수습 및 복구 등 집행총괄을 위하여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지난 3. 17 행정자치부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을 설치하고 각 계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② 재난관리청 설립에 있어서 기능의 집중이나 효율적인 분산이나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에서 목적하는 재난관리청의 역할은 이중 무엇이나고 물으신데 대하여 재난단계별·기능별로 재난관리 기능을 적절하게 집중하거나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조화되도록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예를 들어 각부처가 평시 수행하는 소관 재난분야의 예방업무는 각 부처별로 그 고유기능과 연계하여 분산·관리하면서 신설되는 재난관리기구는 사태발생시 현장대응과 사고수습업무를 집중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③ 일부에서 동 기획단 구성 운영과정에서 재난경험이 풍부한 소방관계자가 배제되고 일반직 공무원 일색이라는 지적에 대한 사실여부를 물으신데 대하여 지난 3월 17일 발족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은 업무별 기능과 성격에 따라 “소방대책반” 등 10개의 반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소방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방분야 전문교수를 민간부단장으로 위촉하는 한편, 10개의 모든 반에 1~2명의 소방공무원들을 배치하여 신설기구의 개청을 위한

- 준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 소방공무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총 구성원 60명중 소방공무원 11명 참여)
- ④ 재난관리청 체계는 기민한 현장지휘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조직으로 구성되어야만 기관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소방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 국민의 안전의식고취, 사전예방·대응 및 복구기능 강화를 비롯하여 재해보험 등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기능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앞으로 신설될 재난관리기구는 재해·재난관리가 사전예방에서 수습·복구까지 기능상 다양하고 폭넓게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재난의 체계적 관리와 현장 대응기능이 동시에 강화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별첨 1> :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인적 구성 현황

기 관 명	현원(명)	비 고
총 원	60	
서울시립대	1	부단장
국 방 부	1	
행정자치부	21	
산업자원부	2	
정보통신부	1	
보건복지부	1	
환 경 부	1	
노 동 부	2	
건설교통부	3	
해양수산부	1	
법 제 처	1	
비상기획위원회	1	
경 찰 청	1	
산 립 청	1	
해양경찰청	1	
지방자치단체	2	
국립방재연구소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	
한국전기안전공사	1	
교통안전공단	1	
한국산업안전공단	1	
한국가스안전공사	1	
한국전산원	1	
소 방 관	11	

※ 14개 부처, 7개 민간기관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지난 50년간 한·미 동맹이 이룩한 성과는 가장 성공적인 국가간 관계라는 평가와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구조라는데 대해 동의하십니까?

-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한·미 동맹관계는 5월중에 열릴 예정인 양국정상회담 및 정·관계·학계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계속해서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대미감정 확산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서 남북 화해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서 남북 화해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최근 일부 부정적 대미감정은 한·미 관계의 보다 성숙하고 균형된 발전을 기대하는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앞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상호협력과 존중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끝난 제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약」에서 미군측이 말아오던 “선택된(선정된) 일부임무”에 대한 책임을 한국 측이 맡는다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택된 일부임무”가 어떤 내용인지?

-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약」 1차 회의(4. 8~9)시 한·미 양국은 향후 한국의 군사능력 발전에 따라 선정된 일부임무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한국의 군사능력을 고려, 한국군의 임무 및 역할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기본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 문제도 논의되었는지?

-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약」(4.8~9)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논의는 있었으나, 주한미군 기지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참고로 회의 시 미국측은 2사단을 포함한 주한 미군의 기지조정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일대에 배치된 주한 미2사단의 병력은 전체 주한미군 병력의 몇 %에 해당하는지?

- 동두천 일대에 배치된 주한 미2사단의 병력은 약 1만 4000명이며, 이는 전체 주한미군 병력(약 3만 7000명)의 38%에 해당합니다.
  - 동두천(과주포함) 지역 : 약 8700명
  - 의정부지역 : 약 5300명

주한미군 2사단은 사실상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한반도 안보의 피뢰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지?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전체가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한·미양국군은 평상시 연합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전시대비 연합작전계획을 수립·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2사단 한강이남 배치 문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 시기상조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 현재 주한미군 기지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기지조정 문제는 양국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 과정에서 연합군사능력과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오카모토 유키오 일본 외교담당 고문이 이라크 과도정부 수반 내정자인 제이 가니 미예비역 소장과 회담한 사실과 내용을 알고 있는지?

- 지난 4월 7일 쿠웨이트에서 오카모토 유키오 일본 외교담당고문이 제이 가니 미예비역 소장과 만나 이라크 전후 처리문제 등에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 회담에서 가니 소장은 이라크 복구지원 상황을 설명했고, 오카모토 고문은 이라크 복구에 유엔의 참여를 중시하는 등의 일본정부

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부는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 참여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우리 기업의 전후복구 사업참여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입니다.
  - 이라크 난민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1천 만불을 제공하는 등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국무조정실, 재경부,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민관합동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경쟁력 상위분야 중심의 수주활동을 강화하고,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 우리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외교적 통로를 통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의회와 미국의 싱크탱크 계층 등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대미 외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미외교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며 정부는 미국의 정·관계뿐 아니라 의회·학계·언론계 및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여론형성층과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 대미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중입니다.

「이라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는 미 국무부 차관의 경고성 발언은 「이라크문제와는 다르므로 북핵문제는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침」이라는 국무부 차관보의 의견과 배치된다고 보는데, 북한 핵과 관련된 미국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 미국은 여러차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3월 13일, 4월 4일 양국정상간의 전화통화와 3월 28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핵문제가 논의되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릴 때 우리정부가 취한 조치는?

-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모든 외교적 노력이 소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검토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보리 의장국, 안보리내 6

개 비상임 이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가졌으며, 안보리 조치가 상황 악화 방지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4월 10일 유엔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는 의장성명과 같은 공식적인 조치 대신에 대언론 구두발표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다자대화 실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NPT 탈퇴 발효에 즈음해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공식성명 발표라든가 조치를 취한 내용은? 북한에 어떤 메시지 한 장 전하지 않은 것은 국가 안보정책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 정부는 03년 1월 10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직후에 아래 내용의 우리정부입장(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북한이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 우리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
  - 정부는 이러한 조치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NPT 탈퇴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응해 올 것을 촉구
  -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주요 관련국들 및 IAEA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정부는 북한이 NPT 탈퇴 성명을 철회하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발표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북한의 핵시위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는지?

- 북한은 핵동결 해제조치(02.12.21) 및 NPT탈퇴 선언(03.1.10) 등을 통하여 대미 압박을 함으로써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확고한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결국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의 안보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북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은 용납하지 아니하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한·미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측과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해결이 어려워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때의 대안은 무엇인지?

-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우선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미간의 공통된 입장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의 비상대책에 대한 논의는 현 단계에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고집하던 북한이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라고 발표한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하던 다자간 협상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북한이 이러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인 배경은 무엇이라 판단하는지?

- 북한의 태도변화는 이라크전을 조기에 마무리한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시위효과와 다자대화 수용을 위한 우리정부 및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핵문제가 대화의 물고기가 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진전된 상황인데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정부는 북한이 ‘미국이 대북정책을 바꿀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핵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다자대화의 참석자·개최시기·개시방식 등에 대하여는 주변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자대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북한 핵문제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면서 대화참여자, 대화시기, 방식 등에 대하여 관련국들의 견해가 약간씩 다를 수도 있겠으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원칙은 관련국 모두가 동의한 사항이므로 위기가 심화된다고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부는 한·미·일간 긴밀한 사전협의를와 한·중간 협력을 통해 대화전개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회개최 시 한국의 참여를 우선사항의 하나로 다루어 나갈 것이며, 한국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 사안에 관한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한미간에 협상방식에 관한 공통된 전략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 우리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협상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다자대화 개최시 한국의 참여를 우선사항의 하나로 다루어 나갈 것이며, 한국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 사안에 관한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자간 회담은 복잡한 국제적 게임의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핵문제와 체제보장의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나라도 있고 다른 기여를 해야 할 나라도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과의 다자대화 틀속에서 진행될 것이나, 우리정부가 참여하지 않고는 실질적 진전이 없을 것이므로 대화전개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도 한국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 결론 도출이 어렵고, 우리의 대화참여를 위해 북한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 역시 남북대화채널을 통한 대북 설득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면도입 방안을  
확정한 것인가, 아니면 검토 중인 것인가?

- 정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관련부처 협의, 민·관 합동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현행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된다면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될 경우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생산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임금지급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중소기업의 우려에  
대한 대책

-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면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적절한 인력을, 적기에 합법적으로 공급받기를 바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게 됨에 따라 임금상승이 우려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숙박비 또는 연수관리비 등이 감소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또한 장기적 측면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노동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에 골고루 적정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고,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 하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인건비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 앞으로 고용허가제의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동 문제가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시 외국인에 대해 노동3권이 부  
여될 경우 복수노조 설립우려와 불법쟁의시 대책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차원에서 국내의 노동3권 관련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새로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경우에도 연수취업기간  
2년간은 이미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노조활동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적용을 받게 되고 고용허가제 도입 시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함에 따라 불법쟁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28만 8000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는 법  
이 없어 불법체류하고 있다고 보는가?

-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은 국내에 단순기능 외국인력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도입·공급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체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업계와 충분한 협의 후 특정 업종에 시범실시  
하고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입법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대한 견해

- 그 동안 단순기능인력의 부족현상과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수차례의 관계부처 실무자간 공식·비공식회의, 민·관 합동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 이러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현행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 및 입법후 시행과정에서 각계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여러차례 분권형 대통령  
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곧 책임총리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무조정  
실장께서는 책임총리의 핵심기능이 어떤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책임총리란 헌법상 규정된 권한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책임총리의 핵심기능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헌법 제87조) 및 해임건의권(헌법 제94조), 행정각부 통할권(헌법 제84조) 및 총괄조정권(정부조직법 제19조의2)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각 부처 업무의 통합·조정은 국무조정실에서 전담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앞서 말씀드린 핵심기능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내각에다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또 각 부처 장관들 앞에서 “이제 수석 시어머니는 없다” “총리가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가며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고건 총리에게 그러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 총리께서는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와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총리의 내각에 대한 관리·통할권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정가에선 ‘그림자 총리’, ‘책임총리 공수표’ 지적이 많습니다. 왜 이런 소리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건 총리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를 지근거리기에서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리께서는 헌법상 부여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한 각오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 다만 일부에서 책임총리 실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신정부 초기에 각 부처가 의욕적인 업무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 이제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국정운영의 틀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리의 역할이 보다 커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이 자기머리 못 짚는다고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 고건 총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책임총리제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 대통령께서는 4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시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부처정책과 국정조정은 총리실에 맡길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저도 책임총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嚴虎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참여정부 출범초기부터 나타난 정책혼선이 극심함에 따라 국민, 기업, 시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아무리 좋아도 일관성을 잃어 경제주체들이 예측할 수 없으면 효과는커녕 악영향만 나타날 뿐인데, 왜 이런 정책혼선 사례가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정책혼선은 결국 국무조정실이 정책조정 역할을 제대로 안했거나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채 각 부처별로 제각각 증구난방식으로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정책혼선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최근 일부정책이 사전에 관계부처 협의없이 언론 등에 발표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선으로 비춰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는 신정부 출범초기에 각부처가 의욕적인 업무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 이제 각 부처의 연두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체계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혼선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리실에서는 관계 장·차관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부처간 사전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피부에 직접와 닿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경제팀을 보면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등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시장은 출렁거리고 국민들만 속이 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부처 조정기능을 가지고 총리를 보좌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 역시 그 책임이 있지 않은가. 노무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따로 국밥식”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참여정부가 국민을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 위원님 지적대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정책이 혼선으로 비취짐으로써 경제주체들에게 일부 혼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정에서 혼선방지 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장·차관회의와 관련부처와의 현안보고를 활성화하여 정책의 사전협의·조정을 강화하고 특히 혼선 가능성이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철저히 사전 점검하여 혼선사례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장기표류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약 10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에 대해 부처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작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정부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바 있으며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원이 지난해에 감사를 통해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이견 조정을 완료한 것이 무려 17건이나 됩니다. 도대체 본연의 업무가 부처간 조정업무인 국무조정실장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은 17건의 기관간 이견 사례를 조정하여 관계기관에 통보(02.12.4)한 바 있습니다.
- 감사원에서 작성한 동보고서에는 국무조정실에서도 46건을 조정하는 등 정책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정부정책 조정의 중심기관으로서 조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조정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높다고 생각하는지. 규개위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과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규제개혁은 규제의 질 즉,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그 동안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규제수를 크게 감축하는 등 양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공장설립·입지, 금융, 물류·유통 등 기업활동과 밀접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핵심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혁이 미흡하고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여 엄위원께서 지적하였듯이 체감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활동 촉진에 역점을 두고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방향과 세부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등 규제의 질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북핵사태, 이라크전쟁 탓으로만 돌리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 최근의 경제불안은 북핵문제, 미·이라크 전쟁 등 불확실성의 증대뿐 아니라 SK그룹 분식회계 및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합니다.
-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

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을 마련·시행하는 등 경제불안 요인 해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정책보좌와 부처간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별로 국민들의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중요 현안사항을 챙겨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정부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국내유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금년중 총 50만호 주택 건설) 및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소득세 경감(금년중 소득세법 개정)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 및 부처간 이견 조정 등에 있어 국무조정실장으로서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지난 '01년 11월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하여 청소년 종합실업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의 청소년 실업은 ① 신규 대졸자 증가, ② 산업수요와 학교 교육간 괴리, ③ 경력직 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④ 대기업 선호경향 등 주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합니다.
- ※ 대학진학률 : ('90) 33.2% → ('95) 51.4% → ('01) 88.9%
- ※ '95년 이후 최근 7년동안 대졸자수 16만명 증가(32만명(95)→48만명(02))
- ※ 신규 대졸채용 ('96)65%→('00)26%, 경력자채용('96)35%→('00)74%
- 정부는 일자리 제공 등의 단기대책과 함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05년까지 400여개 세부직업별로 인력수급전망이 가능한 인력수급전망체제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다만 '03년도 관련예산이 '02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03년 예산 편성 당시 실업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안정적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 당분간 현재의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되 청년실업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노동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업무보고서에 청년실업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 지난 3월 19일 청와대에 보고한 노동부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대책도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현”이란 핵심전략 과제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 내용에 의하면 청소년 중점시책으로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 기회 확충, 고용정보 제공 등 “재학 시부터 졸업 후까지”의 종합고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기업·교육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이 필요한데 대한 견해

-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종합·조정되고 있습니다.
- 향후 청년실업을 추이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범국가적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고위직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참여정부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보는 데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현 정부 들어 고위직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주로 대통령비서실의 개편과정에서 고위직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 이번 대통령비서실 개편의 특징은
  - 12대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실이나 국민참여수석실 설치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데 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앞으로 업무수행 절차와 직무 분석을 통하여 기구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여정부는 앞으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해 나가되,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기구 및 인력 증원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국민에 대한 보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관련하여 동 결정이 민주적 절차없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 복지행정구조를 양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부처의 본질과 불일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 향후 보육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보육사업은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최근의 저출산문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등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보육사업의 주관부처 이관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국의 복지행정체계, 부처의 업무 및 기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유아교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관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관련단체와 전문가, 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이관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중고 예·체능과목 평가방식 관련
  - ①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체능과목의 평가방식을 비서열식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예·체능 교육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② 예·체능과목 평가방식을 변경하더라도 이들로부터 줄어드는 사교육비가 국·영·수 등 주요과목 과외에 더 많이 투자하는 현상을 빚어 절대 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예·체능 교과목의 평가방식 전환 검토는 교육본질적 측면에서 서열식이 아닌, 예·체능 교과목의 본래 목적에 맞는 평가방법을 도출하여 예·체능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에서는 평가방식의 전환에 따른 예·체능 교과목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우려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예·체능 교과목 평가체제의 개선은 초·중등 교육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사수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중히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 수능시험 체제 반대 논란
  - ①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팀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현 수능시험 운영체제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② 수능시험 체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전면적인 검토를 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수능시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한다는 큰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수능시험 체제 개편은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전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 향후 수능시험의 변화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교육평가원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관계전문가와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공직으로 나간 교수로 인해 대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
  - ① 교수가 공직에 진출함에 따라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② 공직으로 나가게 될 교수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는지?
  - ③ 운영관 외교부장관의 휴직 허용에 대한 의견은
  - ④ 운영관 외교부장관의 휴직 선례로 학문연구풍토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국립대학교수가 공직에 임용될 경우 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3항 : 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 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대학 교수가 공직에 나갈 경우에는 같은 대학 내 타 교수가 수업의 일부를 담당한다거나 시간강사를 임용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직으로 나가게 될 교수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공직 임명일자에 맞추어 교수의 휴직 등을 결정해야 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운영관 교수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서울대는 교수회의에서 휴직 문제를 논의한 결과입니다.
  - 휴직허용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상위법에서 휴직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를 위하여 활동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학교수의 휴직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복무감독권자인 각 대학의 장이 구성원들의 합의 등을 토대로 학생교육이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선임 관련

- ① 이주헌 교수의 선임을 위해 정갑영교수와 노규성 교수에 대한 사퇴압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들은 바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공모결과('03.1.23) 총 4인이 응모하여 이들 중 2명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응모를 철회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② 이주헌 원장의 병역문제, 국적문제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도 원장으로 선임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주헌 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문적 업적이나 능력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자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이 원장은 고교시절 이민후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80년대 초 국내기업의 소련·중국 등 공산권 진출 필요성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이 원장을 초빙하였기 때문에 병역문제가 해소되었으며 국적문제는 '88년 한국외국어대 교수로 임용되면서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③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도 유사한 문제로 논란을 야기한 적이 있고 대통령 주변에 유독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 앞으로 출연(연) 임원 선임 등에 있어 후보자의 연구역량이나 경영능력과 함께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도 '원장후보심사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카드채를 떠안도록 한 <4·3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각 은행들에게 총리훈령 408호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대한 규정> 제5조의 지침대로 문서에 의했는지 밝혀주고, 문서에 의하지 않았다면 동 훈령 위반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월 3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4·3 금융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금융정책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은행장 회의를 소집하고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별 카드채 분담금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 회의에 금감위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금감원 부원장(오갑수) 및 부원장보(김중희)가 은행연합회의 요청으로 카드사 관련대책의 배경과 현황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 또한, 총리훈령에 의하면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금융기관등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이외에 회의개최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이번 경우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보장에 대한 규정」

제5조 (문서 등에 의한 정책집행)

- ①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협조나 지원을 요청(일상적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회의에 의하여야 한다.

지난 4월 3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연합회에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금감위 모 국장이 노란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은행별로 인수해야 하는 카드채가 할당돼 있었다고 하는바 이것은 관치의 정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 바랍니다.

- 금융감독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국장이 노란 봉투를 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은행연합회가 은행장회의를 소집하여 은행별 분담금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대란은 감독당국의 규제강화에 따른 정책실패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는 지난해 카드남발에 따른 연체율 증가등이 예상됨에 따라 부실예방을 위해 과거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카드사의 충당금적립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할 경우 충당금 적립부담의 감소로 카드사의 장부상 당기순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카드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잃을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카드회사의 연체율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고 현 충당금 적립기준도 미흡하다는 지적과 일부 카드사 (엘지·국민카드사)는 스스로 충당금 적립기준보다 초과적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증권전산사장과 코스닥위원장, 증권금융사장, 저축은행연합회장이 연쇄적으로 재정경제부 인사들로 자리바꿈을 했는데 임기가 남아있던 사장들에게 문서로 사퇴해 줄 것을 요구했는지 밝혀 주고, 그렇지 않았다면 총리훈령 위반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위원께서 지적하신 상기 기관들의 최근 인사현황을 보면 허노중 전 증권전산사장이 코스닥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증권금융사장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임기만료에 따라 공석중입니다.
- 한편, 동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임원 선임절차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로서 코스닥위원장의 경우 전임 위원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코스닥위원회 추천을 거쳐 증권업협회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사퇴를 종용하는 등의 인사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기관 인사현황

직 위	성 명	비 고
증권전산사장	(공석)	전 허노중
코스닥위원장	허노중	03. 4. 1 선임
증권금융사장	맹정주	현직유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공석)	전임 문병학, 03. 3.27 임기만료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해당기관의 조직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 바랍니다.

- 최근 산하기관장 인사에 있어 정부가 사퇴를 종용하는 등의 인사개입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다만, 최근 급변하는 시장여건 하에서는 어떠한 기관도 신속히 적응하여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조직내외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적소에 적재를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관 경영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정부는 해당기관의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경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유능한 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가칭)국가인턴십제도 도입 제안을 검토하고  
관련부처 의견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

- 위원님이 제안하신 국가인턴십제도는 국제화·개방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제도는 현재도 정보통신부에서 IT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정보통신부, 교육비 등 총소요비용의 50%(1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
  -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보다 많은 분야에 청년해외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는 해외연수 가능분야, 구체적 프로그램,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청년세대 노동력 수급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이 참여하는 “(가칭)청년세대편입 협의체”를 신설하여 청년실업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한다는 데에 관한 견해

-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현재 재경부 장관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종합·조정하고 있습니다.(별첨 : 청년실업대책)
- 향후 청년실업을 추이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별도의 위원회와 협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별 첨**

청년실업 대책

- 경력자 선호 기업채용 방식에 맞춰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4만 4000명)
  - ※ 인턴채용시 1인당 월 50만 원 3개월 지원,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 지원
-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실시(9만 9000명)
  - 대졸자는 전문자격증 취득, IT분야 등 취업 유망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중점 실시
  - 고졸 이하 청소년은 기능사 양성훈련, 인력 부족직종 훈련, S/W 기술교육 등에 초점

- 청년층 구직자·구인기업간의 효율적 연결체계 구축
  - 대졸예정자(약 48만 명)의 「일제구직등록」을 받아 Work-Net 등을 통해 구인기업과 연결
-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전망체계」를 구축,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일치(mismatch)해소노력 병행
  - 2005년까지 직업세분류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시장 수요와 학교교육간 유기적 연계 도모
- IT, BT 등 신기술 산업육성을 통해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지속적 창출

◇ '03년 중 2374억 원을 투입하여 총 18만 명의 청소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기회 제공

이라크전이 종전 국면을 맞음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국제 이슈로 다시 전면에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향후 미국과 일본간 공조협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 4월 1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조선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형식에는 구애받지 않을 것’ 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정부는 현재의 긍정적인 진전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다자대화와 관련 구체적인 협상방향에 대하여는 한·미·일 3국간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보처내에 ‘오보대응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각 부처로부터 오보와 문제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4월 9일 중앙청사 5개 기자실을 모두 없애고 별관에 ‘통합기자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① 국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지?
  - 알고 있습니다.
  - 특히 통합기자실 설치장소 문제는 관계부처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하던 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②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로부터 일일보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국무조정실장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 별도의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를 총괄·조율하는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제24조의2항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에 근거하여 참여 정부 이전부터 각 부처의 오보대응관련 조치 내용을 파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③ 국정홍보처의 조치가 사전에 고건 총리 및 청와대에 보고되었는지?
  - 「기자실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정홍보처장이 지난 3월 20일, 4월 9일 청와대와 총리께 사전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 4월 14일에는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실 설치위치와 관련한 검토안을 총리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 ④ 지난 4월 10일 청와대에서 신문기사를 5가지로 분류하여 일일보고토록 지시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 언론과의 전쟁은 아닌지?
  - 그동안에도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분류는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왔고, 필요에 따라 부처에 연락을 취해 관련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에 관련양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⑤ 고건 총리가 지난 4월 11일 중앙청사 기자실 폐쇄작업을 재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난 4월 9일 국정홍보처장이 중앙청사내 공간확보가 어려워 별관청사에 통합기자실을 설치하는 안을 총리께 보고한바 있으며 총리께서는 행정자치부 청사관리소장과 국정홍보처장에게 중앙청사내 공간확보 방안과 브리핑실 설치방안 등을 재검토토록 지시한 것입니다.
- ⑥ 현정부의 언론정책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 정부의 금번 ‘기자실운영 개선방안’은 인터넷 발전 등 새로운 언론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개방·공평·정보공개의 원칙에 입각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장·차관이 주 1회 이상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현안 발생시 관련 실·국장이 ‘수시브리핑’을 실시하여 정부행정 및 정책결정과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또한 보다 구체적인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훈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국무회의 규정 관련

- 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민간부문 전문가에 대한 비밀준수조항을 국무회의 규정에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② 민간인 비밀준수조항 하나를 제대로 스크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무회의 상정 안건을 신뢰할 수 있겠는지?
- ③ 대통령 필요에 의해 서둘러 규정을 고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부의 정책들이 엉성하게 입안·집행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 참여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헌법 제89조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국무회의와 국정 의 현안사항 중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테마국무회의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된 국무회의규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참석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테마 국무회의시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계 전문가는 국무회의의 전 과정에 걸쳐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관련되는 사안의 토의에만 참석하게 하는 것이므로 국무회의규정에 비밀준수사항을 신설할 만큼의 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앞으로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지득한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서 보안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국가유공자단체가 법률에 근거한 혜택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9개 국가유공자 단체가 설립되어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등 법률에 근거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다만,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 관련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지원근거규정이 없어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앞으로 관련법률의 개정 등을 통하여 동 단체의 원활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훈대상자들에게 항공할인혜택 편의와 같이 '새마을호'에 대한 할인혜택도 철도청과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열차 할인의 경우, 무궁화호 이하에 대하여 연간 6회 무임이용 하고 이후에는 50%할인 이용할 수 있으며, 새마을호의 경우는 무궁화호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선 항공기의 경우는 민영수송시설로서 이용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항공사 자율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상이 국가유공자는 50%, 선순위 수권유족은 30% 요금할인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 정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할인을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보장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언제쯤 유공자들이 끌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 및 보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우관계 법령상 혜택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광주민주유공자의 경우는 관련 예우법이 2002년 연도 중에 제정되었고 관련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지원에 애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 앞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녹스가 연료첨가제로서 환경부의 허가를 받았고, 솔렉스 역시 석탄액화연료로서 과기부로부터 대체에너지로 인정을 받았으나, 산자부는 검찰에 고발하고 교통세 부과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일사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서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면서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어 휘발유보

다 값싸게(ℓ 당 990원) 판매됨으로써, 인근 주유소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산자부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자부는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 세금부과 요청을 하는 한편 용제 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하여 원료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환경부와 산자부는 각각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첨가제가 사실상 연료로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고 재경부는 휘발유와 동물의 세금을 계속 부과할 방침입니다.

- 석탄액화에너지는 대체에너지 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한 대체에너지이나, 솔렉스 자체가 석탄액화에너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솔렉스는 판매사측은 석탄을 액화한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에 어떤 신청도 하지 않아 정확한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아직 산자부나 과기부로부터 대체에너지로 인정을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 경제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해외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SK분식회계', '가계대출'등으로 야기된 국내경제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로드쇼'등 다양한 대외신인도 개선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분야별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그동안 우리경제는 북핵 문제 및 SK분식회계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등으로 대외신인도가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 다만, 최근 이라크전쟁의 사실상 종전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부각되며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안정 의지를 확고히 표명해 나가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대기업 지배구조와 증시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업·금융구조 조정 및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아울러 신용평가사와의 상시협의채널 가동·국가 홍보활동(IR:Investor Relation)의 정례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런던(4.11)·뉴욕(4.14)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도 정부·전경련 합동으로 「미 주요도시 순회 해외경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이라크전쟁의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위축될 경우 대중동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강화 대책은?

- 대중동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인수 및 금융지원 확대에 기업의 수출활동을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 플랜트수출 등 중·장기 수출보험담보 비율 확대 : (현행) 90~95% → (개선) 100%
  - 경쟁력 있는 중소형 플랜트 수출 품목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03년 : 2000억 원 지원)
- 수출대금 회수지원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에 대한 만기연장, 결제대금 입금지원에 따른 지체료 면제, 수출환어음 부도 유예기간 연장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이 예정된 우리나라로서는 전쟁중은 물론이고 전쟁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테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대비책은 무엇인지?

- 정부는 이라크전으로 고조되는 테러위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02년 하반기부터 정보수집 강화 및 테러위해요소 탐색, 대응기구 즉각 출동태세 유지 등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이라크전 발발후 정부는 국가정보원에 유관기관 합동 「정부종합 대테러 상황실」을 설치하여 국내외 테러위협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각 부처별로 자체계획에 의거 24시간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 해외교민 보호활동, 국가중요·다중이용시설(3798개소) 경비강화, 국제테러분자 출입국 규제 및 공항만 출입국 안보활동 강화
  - 국내체류 이슬람 국가인(7만 7000여명) 동향 주시, 총포·화약류 등 테러위해물질 관리강

화, 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안전확보  
○ 이라크 종전 이후에도 현 상황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보역량을 테러를 위한 첩보수집에 집중, 조기경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 대테러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라크 미수금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 우리업체들은 걸프전 이전까지 이라크에서 65억불의 공사를 수행했으며, 이란-이라크 전쟁에 따른 이라크정부의 재정악화, 걸프전 이후 UN경제제재 등으로 12.7억 불의 건설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 현대건설 11억 불, 삼성물산 1.3억 불, 남광토건 2200만 불, (주)한양 1100만 불, 한진중공업 400만 불, 두산중 40만 불 등
- 이라크전 종결후, 이라크 신정부 수립 및 대외채무 처리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우리업체의 미수금 회수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우리업체 미수금은 주택·도로·항만 등 인프라 시설 공사대금으로서, 무기판매 등 정권유지자금과는 성격이 다름을 강조
- 정부는 또한 이라크 신정부와의 협상채널을 구축하는 등 외교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라크파병결의안을 승인한 상황에서 전후복구사업의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 정부는 복구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미국 등과의 실질적인 대외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이라크복구사업 참여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
  - ※ 재정경제부는 「경제분야」, 외교통상부는 「외교분야」를 담당
- 앞으로 이라크 인접국가에 기구축되어 있는 인력·장비 등을 바탕으로 일반건설분야 및 플랜트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CDMA 등 IT산업, 정보시스템 통합(SI)산업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기업진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
  -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는 대상 국가에 이라크를 신규로 포함시켜 동 자금이 우리업체가 이라크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

더 이상 안전사고가 「관재(官災)」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관련자 뿐 아니라 책임있는 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이루어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신데 대한 의견을 물으시고 지하철이 “서민의 발”인 점을 감안해서 관련예산 확보를 통하여 차량전체에 대한 정밀합동점검과 이에 따른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위법한 관련자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문책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이번 대구지하철 사고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책무성 제고차원에서 대검 강력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편성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의법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지하철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거울삼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지하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와 아울러 건교부에 민간전문가를 단장으로 하는 「지하철안전기획단」을 구성(3.7)하여, 금년 5월말까지 목표로 지하철 안전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차량 내장제 교체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안전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田瑢源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정부는 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을 눈감아 주는 느슨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금융난을 소비자의 과소비행태와 카드업계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는 것은 아닌가?

- 최근의 카드사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이용자와 카드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건전성감독을 수행하는 정부로서도 책임을 느껴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떠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한다는 목적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규제의 기준도 동법 제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규제는 ① 국민의 자유와 창의 존중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②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 등을 실효성있게 보호하되,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관련한 규제심사시에도 이러한 목적과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메일이나 이동전화를 통한 과다경품 제공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형태의 변칙적인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정착시키는 중장기적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며 기존의 규제 대책 중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이나 이동전화 등과 같은 새로운 수단은 비용절감, 경쟁촉진 등 긍정적 요인과 함께 무분별한 청약권유 등 질서교란행위도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업무종사자의 교육 강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업계 자체의 자율대책과 함께 문제 발생시 규제절차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로 현재 입법중인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같이 관계부처는 이용자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불가피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과연 카드사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혹시 걸림돌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닙니까?

-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용카드 발급·사용의 전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처에서 신설·강화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절차의 명확화, 기준의 합리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규제심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예를 들면, 2002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심사 시 사전 동의없는 방문모집 등을 금지하는 외에도, 카드발급기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기본원칙을 제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무분별한 카드발급소지를 줄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용카드회원 가두모집금지 지연을 소비자보호를 저해한 사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 동 규제는 2001년 7월 당시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철회된 것이며 근거규정이 마련된 2002년 6월에는 수용하였습니다.

**(趙在煥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재난관리기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① 지난 3월 3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선진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회의’에서 민방위재난국장만 참석하고, 소방국장은 참석하지 않은데 대한 이유를 물으신데 대하여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수습과 관련, 지난 2월 25일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소방국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 3월 3일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이 관계국장회의에서 논의한 “선진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국무회의(3.4)에 상정하기 전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으며 그 자리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총괄국장으로서 참석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재난관리청 신설방침과 관련, 소방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출발부터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으신데 대하여
  - 소방관련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신설기구’에서 “현장조직인 소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소방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바라는 내용으로 이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설치하게 될 재난관리조직에서는 소방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명칭과 기능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방인력·장비의 획기적 보강과 소방공무원 사기양양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③ 재난관리청 신설에 참여한 소방관련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왜 언론에서는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으신데 대하여 지난 3월 17일 발족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에는 소방공무원 11명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소방조직이 소외될 것이라는 종래의 우려의식이 내재된데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재난관리청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발족시켜 가동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안전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 재난관리 체제 개편을 위하여 각 부처에 분산관리 운영되는 재난관련 기능의 총괄 조정 등 통합기능 확보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난수습 및 복구 등 집행총괄을 위하여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지난 3월 17일 행정자치부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을 설치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⑤ ⑥ ⑦ 화재, 지진, 홍수, 가스폭발 등에 대해서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건축학이나 안전관리학, 토목학, 화학 등을 전공한 인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해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방재계획, 지리학 등도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두 분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 현재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내에는 토목·전기·통신·수자원분야 등의 전문직이



나 박사급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각종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민간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이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학계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조언을 받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재해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방재계획, 지리학 등 특정분야의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도시방재학회 등 특정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⑧ 현재 관련법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각각 있는데 이들 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 이번에 정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가칭)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법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등 재난과 관련된 조항을 통할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⑨ 자연재해대책법 3조에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기본계획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신데 대하여
    - 이번에 정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가칭)안전관리기본법」상에 자연재해대책법 뿐만 아니라 재난과 관련된 제반법령들의 미진한 부분을 대폭 보완하여, 「(가칭)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여 수립·추진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어온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⑩ 예전에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세웠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이 큰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때마다 재난관리 부처의 규모를 확대했지만 단지 행정기구의 확충이라는 양적인 대응 수준이어서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데 대하여
      -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제도개선과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나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가의 재난관리체계를 전반적

으로 재검토,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난관리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사고예방에 두어, 「시설물 개선 및 확인·점검」, 「교육·훈련의 철저한 시행」,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행 「조직체계」도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련의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대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⑪ ⑬ 우리나라 교통사고조사는 소관에 따라 관계 부·처·청(도로교통사고:경찰청, 철도사고:철도청, 항공사고:건교부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사고조사기관이 사고발생과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이어서 객관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 각종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관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향후 관련대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등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책임있는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조사에는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단체)을 직·간접적으로 참여시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⑫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의 경우 사고 수습과 정부지원이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지원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데 대하여
    - 각종 대형재난 발생시 중앙 및 지방에 사고대책본부를 마련하여 즉각적인 수습 및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고대책본부 및 국무조정실 등에서는 수시로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번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⑬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재난관리청은 이름만

그럴싸한 자리를 만들어 전문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는 이들에게 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구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 현재까지 신설기구의 명칭이나 기능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앞으로 신설기구의 개편과정에서 그 명칭과 기능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在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재원 확보 가능성,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 여부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데, 견해는?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기관 선정은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재원확보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기관의 최종 후보지 확정이 일정에 맞춰 추진이 가능한 지 여부

○ 양성자가속기사업은 당초 금년 4월말까지 사업유치기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국가적 현안과제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의 연계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 기한을 3개월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언론정책 관련

- ①② 최근 한국언론재단의 여론조사결과, ‘정부부처 기자실폐지 및 브리핑제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을 지적하시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찬성(10.1%), 찬성(30.2%), 그저그렇다(32.1%), 반대(15.1%), 매우반대(9.5%)’로 중간 선호인 ‘그저그렇다’를 제외하면 찬성 40.3%, 반대 24.6%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번 ‘기자실운영 개선방안’은 인터넷 발달 등 새로운 언론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개방·공평·정보공개 원칙에 입각한 홍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반대 의견(24.6%)이 있긴 하나,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찬성 40.3%)
  - 앞으로 ‘행정정보공개확대, 행정절차의 투명화’ 등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 하겠습니다.
- ③ 브리핑제 도입 등의 정책발표과정에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 ‘기자실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국정홍보처장이 지난 3월 20일, 4월 9일 그리고 4월 14일 세차례에 걸쳐 총리께 진행상황에 관해 사전보고를 드릴 때 관련내용을 파악하였고,
  - 지난 4월 11일 차관회의에서 국정홍보처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 ④ 통합브리핑룸 운영방침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 ‘기자실운영 개선방안’은 개방·공평·정보공개의 원칙에 의한 홍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장·차관이 주 1회 이상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현안 발생시 관련 실·국장이 ‘수시브리핑’을 실시하여 정부행정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또한 보다 구체적인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훈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⑤⑥ 최근 정부의 언론정책은 비판보도에 대해 방어가 쉬운 언론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 정부는 언론과의 대립보다도 제대로 된 정책과 성과를 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참여정부」 언론정책의 기본방향은, 언론과 정부가 상호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 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정부의 기본방향과 인터넷 발달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금번 「기자실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일부 논란이 되고있는 내용 중
    - 「개방형 기자실」 제도 도입은 국정정보를 취재 보도하려는 모든 언론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며
    - 「정례브리핑제 도입」은 행정결정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은 ‘예고없는 수시방문’을 제한하자는 것으로 취재요청을 하면 항상 자유로이 공무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행정정보공개 확대, 행정절차의 투명화’ 등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위원 선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방송위원회의 법정임기는 3년이며, 이미 제1기 방송위원회의 임기는 지난 2월 11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현재 여·야간의 입장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차기 방송위원회가 구성되어 산적한 방송계 현안들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무역협정에서 문화에 대한 개방요구를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문화적 예외의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우리문화 주권과 정체성 문제를 한미투자협정과 흥정하는 문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국제통상협상에서도 스크린쿼터제도가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예외조항으로 인정되고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영화분야의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시청각분야는 WTO, DDA 협상에서도 문화주권의 확보를 위하여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정부는 국회와 영화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한국 영화산업 진흥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

(국무총리비서실)

**○崔在昇 委員**

책임총리제를 지향하며 국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참여정부에서 총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업무행위는 물론 각 부처의 특수한 최소한의 업무성격도 고려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업무추진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고 또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國務總理秘書室長 卓秉侻**

**(崔在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총리의 통제 범위의 업무는 물론 각 부처의 특수한 업무성격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

으로 밀어붙이는 업무추진방식은 지양되고 또 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비서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새정부 출범 초기에 일부 정책들이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나 사전 조율 없이 발표되어서 혼선을 초래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총리께서는 헌법상 주어진 권한에 의거하여 부처간의 정책조정과 내각통할에 한층 더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서 총리께 원만히 국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서)**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공통)

**○李性憲 委員**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제대로 뽑았나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월 24일 있었던 경제사회연구회 임시의 사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 날의 임시이사회는 경제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원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안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날에도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조정관을 대리로 보냈습니다.

1. 경제사회연구회에 소속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산업기술연구회에 소속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책을 다루는 것과 실제 기술을 다루는 것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사회과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연구회에 속하게 한 것이고 전자통신연구원은 실제 정보통신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산업기술연구회에 속하게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원장도 그에 어울리는 분이 기관장으로 선임돼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2. 지난 3월 24일 경제사회연구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에 이주헌 외대 교수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주헌 교수는 이사회 1차 투표에서 6대6, 2차 투표에서 7대5로 과반수 득표가 돼 선임됐습니다. 투표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투표 당일 날 어찌 된 일인지 원장후보자로 추천된 정갑

영 연세대교수가 사퇴를 한 것입니다. 정갑영 교수의 사퇴가 없었다면 이 같은 투표결과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3일에는 이미 선문대학교의 노규성 교수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주헌 교수의 선임에 대해 이들에 대한 사퇴압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국무조정실장은 들은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주헌 교수는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과 경합을 해서 2차 투표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윤창번 원장은 동 연구원을 연구기관 평가시 경제사회연구회 소속기관 14개 중 2년 연속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내실있게 연구원을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경합이 됐다면 누가 봐도 그 공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투표 6대6, 2차투표 7대5 판정이 난 것입니다. 경제 사회연구회 이사님께서 이사들의 이러한 결정에 어떤 힘이 작용했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위원회는 원장 후보자들이 낸 이력서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2002년 4월, 노무현을 위한 정보통신인 모임인 <현정포럼>을 결성하고 8개월 동안 노무현 후보의 정보통신정책공약을 개발하였고 노후보를 직접 자문했으며 공약발표를 위한 연설문도 작성하였습니다. 노 후보의 정보통신정책특보로 임명된 후, 신문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노후보 IT정책을 홍보함은 물론, 1014명의 IT전문가 공개지지 기자회견을 주도했습니다. 당선 후에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정보통신부장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노무현 대통령의 정보통신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이주헌 교수 자신의 주요업적 및 경력 소개서 난에 쓰여진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것이 힘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보통신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는 자신의 철학이 곧 노무현 대통령의 정보통신 철학이라는 만용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사장께서 이런 분을 어떻게 소관기관 원장으로 모실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회는 걱정이 앞섭니다.

5. 이 자리에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나와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1) 군복무는 하셨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목포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으로 돼있고 1983년 12월에야 귀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을 미국에서 보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벨연구소에서 5년을 근무한 후 귀국하여 만 29세에 LG 정보통신과 LG-CNS 연구소장직을 4년간 역임하였으며 1986년 외대 경영정보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후 1992년 37세 최연소로 정교수로 임명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9세에 연구소 소장, 37세에 최연소 정교수의 이면에는 군복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민 징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이력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원장공모에 응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주민등본표(2003년 1월 28일 발행)와 본 위원이 제출받은 주민등본표(2003년 4월 14일 발행)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모시 제출한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원에 대한 변동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은데 오늘 본 위원이 제출받은 주민등록표에는 변동사유가 기재돼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는 그 변동사유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먼저 기재사항이 누락된 주민등록표가 원장공모 서류로 제출된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은폐해야 할 까닭이나 내용이 있었습니까. 누가 기재사항이 누락된 주민등록표를 발급 받았습니까. 무엇인가 은폐할 필요성이었었지요.

(3) 이주헌씨의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1975년 1월 4일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원으로 말소됩니다. 이것은 국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조치로 주민등록 재등록은 89년 7월 1일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보면 1983년 12월에 귀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귀국 후 5년 7개월 동안 국내 주민등록도 복원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80년이 미국 국적 취득 후 88년에 미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왜 국적 포기가 늦었던 것입니까.

(4) 또한 처와 두 딸의 세대주 변경이 89년 7월

10일에 이뤄집니다. 남편의 주민등록이 재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편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판단됩니다. 부인과 두 딸의 의료보험은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5) 더욱 놀라운 것은 79년생인 아들의 주민등록 등록이 올해인 2003년 1월 27일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재등록 다음날 원장공모 서류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주모 면밀함이 있었습니다. 79년생이면 우리나라로 25세입니다. 현재 국적상태는 어떻습니까. 군대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현재 국내에 있습니까.

(6) 국무조정실장과 경제사회이사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학문적 업적이나 능력을 떠나서 본 위원은 이 주헌씨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한 이사회의 이사들의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나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검증하고도 원장으로 선임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7) 얼마전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논란을 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주헌씨의 이력서를 보면 정보통신부장관후보 추천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동병상련으로 장관도 추천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통령 주변에는 유독 왜 이런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安大崙 委員

<경제사회연구회 - 산업연구원>

“반도체 산업 세계대전 중, 대책 시급하다”

우리 한국은 반도체 D램 세계시장에서 45.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총 수출액면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0.2%로 타제품을 제치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말 기준)

1. 그런데 세계는 지금 21세기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원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2. 미국 상무부가 최근 우리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

해 초고율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업체는 물론 IT기술 전문가들도 반도체 최강국다운 범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는데 원장께서는 어떤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도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배려를 병행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등 리스크가 큰 차세대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산·학·연이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재 산업연구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 및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4.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일본·대만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분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장께서도 견해를 같이 하시지요?
5. 산업연구원에서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IT산업 비교·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내셨죠? 중국의 IT 산업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대제 현 정보통신부장관도 삼성전자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1월에 모 강연회에서 “우리가 미래기술분야를 조속히 육성하지 않으면 3년 후인 2006년쯤에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역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 이러한 진 장관의 발언이 원장님의 의견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의 IT산업 비교 분석자료를 중점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도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외형적 화려함과 달리 반도체 후방산업 즉 장비라든가 원자재 산업은 한심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검사 공정장비 및 조립장비의 국산수준은 20%~30%대에 머물고 있고 원자재 역시 절반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이러한 IT산업장비 현대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 연구원이 이러한 국내외 산업·기술 관련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조사하여

국가 정책수립에 반영 되도록 연구에 더욱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책임 총리제 관련  
“책임총리제 공수표 되는 것은 아닌지?”

1.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여러차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 하셨습니다. 이는 곧 책임총리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책임총리의 핵심기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정기획과 외교·통일·안보 등의 업무를 제외한 국정업무에 대해서 총리에게 통합·조정기능 강화시켜 주는 것.

2. 결론적으로 말해서 총리에게 국정업무를 효율적이면서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통합·조정기능을 강화 시켜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지요?

3. 현재까지도 각 부처 업무의 통합·조정은 국무조정실에서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인사권, 예산권 등이 총리에게 어느 정도 주어져야 함.

4. 노 대통령께서는 내각에다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위하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하셨습니다. 또 각부처 장관들 앞에서 “이제 수석 시어머니는 없다” “총리가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고건 총리에게 그러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요즈음 정가 주변에서는 “고건 총리가 책임총리가 아니라 그림자 총리다” “이러다가는 책임총리제가 공수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5. 왜 이런 소리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건 총리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고건 총리만큼 업무에 밝고 경험과 경륜을 갖춘 분도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리의 권한 강화요건인 인사권, 예산권, 정보공유권도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청와대가 사안마다 직접대응하고

나서는 바람에 총리의 입지가 좁아진 때문이라고 봅니다.

6. 중이 자기머리 못 꺾는다고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 고건 총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책임총리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대통령께 건의하십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李訓平 委員

<인문사회연구회-한국교육개발원>

대학 신입생의 학력저하와 인기학과로의 편중현상과 관련

대학신입생들의 수능 평균성적을 분석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정원이 늘면서 대학 신입생들의 수능 평균 성적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능 평균성적 백분율의 분석 결과 서울 지역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의 성적이 1994년에 상위 7.78%에서 2001년에는 10.94%로, 비 수도권 지방대에서는 상위 22.01%에서 38.78로 하락했습니다.

1. 대학정원의 증가로 대학입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 신입생들의 학력저하가 심화되면 대학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우수 학생들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만 몰려서 지방대의 학력저하가 심각합니다. 지방대 육성과 우수 학생의 유인책 마련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3. 전체적인 수험생의 성적이 하락한 반면에 상위 인기학과로 불리는 의대와 법대로 우수 학생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수능성적 평균 백분율이 서울대의대는 1998년 0.16%에서 2001년 0.04%로 경희대 한의대는 0.17%에서 0.07%로, 서울대 법대는 0.2%에서 0.07%로 각각 높아 졌습니다.

우수 고등학생들이 일부 인기학과에만 집중된다면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이 어려워지고 특히 인문계나 이공계의 위기를 심화시켜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사회연구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과 관련

1.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문항당 배점을 정수로 표기한다고 발표하였

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수능성적의 소수점 반올림 표기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학생이 소송까지 했던 혼란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영역의 점수를 정수로 배점함에 따라 문항별 배점 차가 지난해 0.4점에서 2점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난이도 조절 실패시 동점자가 대거 양산되어 대학측의 동점자 처리와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보면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서 최근 2~3년간의 시험결과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난이도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의 시험대비와 선생님들의 진학지도를 위해 구체적인 난이도 수준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난이도 조절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수능에 대한 부담이 무척 큼니다. 또한 1년에 한번 치루어지는 시험으로 평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능의 연 2회 실시, 수능의 자격 고시화와 같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시험의 횟수나 제도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연구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내부 갈등과 관련

직원들이 기술료 인센티브의 파행지급, 기관장 편중인사, 직원의 부당해고 등을 들어 원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설문조사에서 지원들의 86.5%가 원장 교체를 원하였습니다.

연구에만 전념해야 하는 연구원들이 이렇게 원장의 경영과 인사방침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직원들과 갈등이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공계 기피로 과학기술 분야에 인재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럴수록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TRI의 연구원들과 원장 사이의 신뢰 회복과 연구에 사기진작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초기술·공공기술·산업기술연구회>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 현상과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1천개 민간기업 연구소를 조사한 결과 64.1%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과학기술부는 2006년까지 20만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입 수능시험 수험생 중 자연계 응시 비중이 지난 97년 43.3%에서 작년에는 27%로 급감하였고 이과 내에서도 우수학생들이 이공계보다는 의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공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과학기술 인력확보와 과학기술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진출 확대와 관련

사회의 각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연구인력 진출은 미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에 시행했던 「여성 과학인력 채용 목표제」를 국·공립 연구기관에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채용 목표 비율은 지난해까지 10%였고 2010년까지는 20%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내 여성 과학인의 비율은 평균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嚴虎聲 委員

정부출연연구원의 전자입찰구매 과정에 대한 점검 필요하다

- 공공기술연구원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은 2001년도부터 전자입찰 구매제도를 통해 필요로 하는 각종 기기 및 물품을 구매해 오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연구원의 물품구매 담당직원(김종호 행정원)은 연구원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친구와 동업하여 설립한 자신의 회사에 물품구매를 발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또, 그 후 친구와 함께 설립한 회사의 주요 정

보를 빼내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에 물품을 발주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 연구원이 외부에 자신의 형수 명의의 회사를 설립하고, 연구원의 구매물품을 발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런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지요?
  -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자 건설기술연구원은 공공기술연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2001년도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전자입찰 구매와 관련한 이와 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자입찰 구매절차와 구매업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각 연구원의 전자입찰 구매에 대한 점검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그리고 각 연구원의 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외부의 타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답변서)

○經濟社會研究會理事長 文石南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경제사회연구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응모자중 노규성 선문대 교수와 정갑영 교수가 사퇴압력을 받고 사퇴했는지에 대해 들은바가 있는지? 이사장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규성 후보는 3월 3일, 정갑영 후보는 3월 24일 각각 개인 사유로 후보를 사퇴한다는 후보철회서를 연구회로 제출(Fax로 송부)하여 왔습니다.

연구회에서는 공모 절차상 후보자의 사퇴이유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사퇴에 외부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주헌 후보의 병역문제, 국적문제와 관련한 사항과 자녀들의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원장으로 선임한 것인가?

- 원장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이주헌 후보가 제출한 이력서에서 군 관련 사항을 파악하였는 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주헌 후보는 33세까지 미국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징집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법적으로 병역상의 하자가 없

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자녀들의 국적 사항 및 주민등록 등재문제 등은 이주헌 원장이 제출한 서면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9세에 LG정보통신과 LG-GNS 연구소 소장, 37세에 최연소 정교수의 이면에는 군복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렇다면 국민징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이력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70년 8월에 가족이민을 하였고, 80년대 초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 공산권 진출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국적의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LG정보통신에 3호(정보통신분야 1호)로 영입되었고, 당시 수입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국적 유지가 불가피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국내 컴퓨터 산업 발전과 IT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동사유 기재사항이 누락된 주민등록표가 원장공모 서류로 제출된 까닭이 무엇인지, 무엇인가 은폐해야할 까닭이나 내용이 있었는지, 누가 기재사항이 누락된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았는지, 무엇인가 은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 변동사유 기재사항은 주민등록표를 발급받는 자가 임의로 누락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누락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누락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럴 필요성 또한 없었습니다. 원장 공모시 제출한 주민등록표는 아들이 '03년 1월 27일 전입신고를 마친후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 확인용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80년에 미국국적 취득후 '88년에 미국국적을 포기했는데 왜 국적포기가 늦었는지?

- '83년 LG정보통신에 초빙되어 '86년 12월까지



근무할 동안에는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미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86년 12월 외대 교수로 전직한 후 대학교수 신분 등을 고려하여 '88년 12월에 미국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주민등록이 재 등록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인과 두 딸은 누군가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인과 두 딸의 의료보험은 어떻게 유지했는지?

본인의 주민등록 재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 처와 두 딸의 거주상태는 큰딸은 처의 주민등록 작은 딸은 장인의 주민등록에 각각 등재되어 있었으나, 본인이 LG정보통신과 외국어대 재직시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상황과는 별개로 처와 두 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에 가입·유지하고 있었습니다.

79년생인 아들의 현재 국적상태 및 군대문제와 현재 국내 거주여부?

현재 아들은 국적법 제14조에 의한 국적이탈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중국적자 신분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3년 2월 징병검사를 받아 입영 대기상태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산업연구원]

세계는 지금 21세기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전자제품에서부터 군수장비에 이르기까지 쓰이고 있으며,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메모리를 재무장하고, 일본은 비메모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은 파운드리(수탁가공생산)를 세계 최고로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의 공장답게 다국적기업들을 끌어들여 곳곳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 세계 반도체업체들은 소위 “반도체 칩들의 전쟁”으로 표현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있으며, 약자는 퇴출하거나 강자에 흡수되는 극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우리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초고율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

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업체는 물론 IT기술 전문가들도 반도체 최강국다운 범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는데 원장님께서 어떤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리 업체는 선진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메모리 중심에서 벗어나 비메모리분야로 역량 집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을 통한 비메모리의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중소반도체설계기업 육성 등 비메모리산업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반면,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분야는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기술개발, 적기투자 등 기업의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재 산업연구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주시시오.

- 당 연구원은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IT 및 전자산업이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휘되도록 산업의 현안분석 및 정책제안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 우선 산업자원부가 추진한 「2010 산업비전」 보고서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IT 및 전자산업의 발전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IT산업 집적지 활용화방안」보고서를 발간하여 집적지 조성을 통한 산업발전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통신, SK텔레콤 등 핵심 통신업체의 요청으로 매년 통신산업 관련프로젝트를 수행하여 IT산업 발전을 위한 통신전략 수립에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외국기업의 관심제고 및 투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IT산업 발전현황을 외국에 알리는 홍보자료(영문)를 발간하였습니다.
-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한국과 중국 IT산업 비교분석」 보고서도 거대한 IT시장이자 생산공장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협력증대를 통해 한국 IT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과제입니다. 또한 신기술정책포럼(총 4차)을 개최하여 IT산업을 비롯한 신기술산업의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의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와 미국·일본·대만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분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장님께서도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요?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국은 거대한 잠재시장을 무기로 세계 IT산업의 중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세계적 기업들이 앞다투어 중국에 진출하는 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은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로 급성장 하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기업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하므로 갈수록 한국과 중국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한국기업이 값싼 현지 인건비를 활용하는 생산거점으로 인식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성숙기술 정도를 이전해주는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 장관의 발언이 원장님의 의견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의 IT산업 비교 분석자료를 중점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중국 반도체산업의 급성장은 이미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만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중국으로」 물려들고 있고, 반면 「중국을 세계로」 뺏어나가고 있습니다.
- 이에 당 연구원에서도 중국의 산업 전분야에 걸쳐 성장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와 협력가능 분야, 우리의 시장침투분야 등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산업과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4개국간 전자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산업장비 현대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우리 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정보화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상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핵심 정보 인프라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IT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등 IT 강국의 저력을 과시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우리가 확고한 정보화 선진국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축된 선진 정보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운영시스템 혁신과 함께 부가가치 창출로 직결되도록 정보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IT가 국가 생산성 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人文社會研究會理事長 崔松和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난이도에 대해 최근 2~3년간의 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 난이도 수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의 시험 대비와 선생님들의 진학지도를 위해 구체적인 난이도 수준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난이도 조절에 대한 대책은?

가. 난이도 수준 발표에 대해

- 문항의 난이도(시험 결과 나타나는 평균 점수)는 문항 자체가 갖는 절대 난이도와 수험생의 학력 및 수험 전략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문항의 절대 난이도는 출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하지만, 수험생의 정확한 학력 진단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최근에 수험전략의 변화(수시입학 모집의 확대, 대학별 입시에서 미반영 영역 증가, 예를 들면 인문계에서는 과학탐구를 반영하지 않고, 자연계에서는 사회탐구를 반영하지 않지만 시험은 필수로 모두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과목의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됨)로 영역별 예상 평균 점수를 발표하고 그에 맞게 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수능을 쉽게 출제한다고 하면, 다소 심화 내용은 학습에서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고, 어렵게 출제한다고 하면 수험생의 심적 부담 증가와 과외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구체적인 난이도 수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나. 적정 수준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대책

- 상시전담 조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본부(기획분석, 출제연구, 수능관리부)을 설치 운영하여, 대수능 출제·시행·채점 관리, 시험 결과 분석, 새로운 유형 문항 연구개발, 모의평가 실시, 국·내외 각종 대입 및 학력고사 출제문항 자료수집·결과 분석·정리, 문항 DB구축 관리 등을 수행하고, 모의평가 및 본수능 출제에서 기획위원, 평가위원,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여 대수능 연구 개발 결과를 반영하여 난이도 조정 기능 강화
- 출제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교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대체강사료를 지급합니다.
- 수험생들의 능력 및 고등학교 교육 내용을 출제에 반영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의 파견 제도 활용 및 본수능 문항 출제위원에 교사를 20% 정도 참여시켰습니다.
- 출제진에게 출제원칙, 기출문항 분석 결과, 난이도 예측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워크숍 실시
- 검토교사가 문항 검토를 하기 전에 검토 기법에 대한 사전 워크숍과 기출문항 분석 경험을 제공한 후에 검토실시
- 모의평가 및 시도연합학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수험생의 학력을 파악하여 난이도 조정에 이용

수능 연 2회 실시, 수능의 자격고사화 같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의 횟수나 제도 변경에 대한 입장

가. 수능 연 2회 실시 방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 도입·시행된 1994학년도에는 시험을 8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채점 결과는 1차 시험의 평균이 49.2점, 2차 시험의 평균이 44.5점으로 2차 시험이 더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 동일 난이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조절의 실패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 이듬해인 1995학년도 시험부터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입시 과열 현상으로 미루어, 2회 실시할 경우 수험생은 두 시험에 모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수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2회의 실시시기를 2~3개월의 시차를 두어 8월과 11월에 실시한다고 할 때, 출제범위를

동일하게 하는 경우, 8월에 실시하는 1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교과 진도를 앞당겨야 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 아니라 학원 등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출제범위를 다르게 하는 경우, 출제범위의 차이로 인해 1차 수험생과 2차 수험생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05 수능 체제는 시험 과목수가 많아서 현재와 같은 합숙 출제 체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문항 정보가 입력된 문제는행 출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 미국이 대학입학시험인 SAT나 ACT를 일년에 5~6차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문제은행을 충분히 구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은행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배수의 문항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

- 자격고사는 선발시험이 아니므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나 대학별 고사 등 별도의 전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국은 GCE A-level 시험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학입학예비고사’를 실시하던 시기에 대학 본고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우선, ‘자격’의 의미가 고등학교 졸업자격인지 아니면 대학입학자격인지, 아니면 두 가지 자격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의미한다면, 현행 교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대학입학자격을 의미한다면,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많은 상황에서는 자격고사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실효성이 적습니다.
- 또, 대학입학자격을 의미할 경우, 선발을 위한 별도의 전형자료(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 등)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의 고등학교 내신성적은 성적 부풀리기 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며, 대학별 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자율적,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입학자격시험과 선발시험의 두 기능을 갖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현행 수능에서 9등급제를 도입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1. 대학정원의 증가로 대학입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신입생들의 학력저하가 심화되면 대학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2. 우수 학생들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만 몰려서 지방대의 학력저하가 심각합니다. 지방대 육성과 우수 학생의 유인책 마련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3. 우수 고등학생들이 일부 인기학과에만 집중된다면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이 어려워지고 특히 인문계나 이공계의 위기를 심화시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1. 2002년 4월 현재 고등학교 3년생의 74.2%가 고등교육 단계로 진학함으로써 이른바 고등교육 기회가 대중화 단계(진학율 15~50%)는 물론, 보편화 단계(진학율 50% 이상)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보편화 단계에서는 다양한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입학생의 평균 학력 수준의 저하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교수들은 예외 없

이 신입생들의 수학능력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각 대학, 특히 지방대학이 미충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학능력과는 관계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학생의 평균 학력의 저하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미충원율이 확대되고 있는 지방대학에서는 기존 입학생의 타 대학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학점관리를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어 학력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교육의 질은 입학 당시의 학업 성적보다도 교육 여건과 학점관리의 엄격화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의 교육 여건과 엄정한 학사관리를 크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학능력이 절대 부족한 고교졸업자의 진로를 대학이 아닌 타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수요 기반의 불안정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미충원율이 확대되고 있는 대학의 합리적 퇴출을 보장하는 한편, 대학정원의 신축적 조절이 필요합니다.

2. 지방대 육성과 우수 학생의 유인책으로는 첫째 교육 여건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을 대학당국과 정부가 합세하여

<표 1> 4년제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주체별, 소재지별 현황 비교

(단위: 명)

설립별		국 · 공 립													
소재별		수 도 권							지 방						
연도	지표	학교당 학생수	학교당 교원수	학교당 학과수	교원당 학생수	학과당 학생수	학과당 교원수	교원의 주당 시간수	학교당 학생수	학교당 교원수	학교당 학과수	교원당 학생수	학과당 학생수	학과당 교원수	교원의 주당 시간수
		1998	11,913	486	55	24	216	9	9	13,654	421	71	32	192	6
1999	12,309	499	55	24	223	9	8	14,189	424	84	33	169	5	10	
2000	12,348	497	55	24	224	9	8	14,667	426	89	34	164	4	10	
2001	12,717	493	61	25	208	8	9	15,042	430	91	35	165	4	10	
2002	12,743	498	54	25	236	9	9	15,287	438	88	35	173	5	10	

  

설립별		사 립													
소재별		수 도 권							지 방						
연도	지표	학교당 학생수	학교당 교원수	학교당 학과수	교원당 학생수	학과당 학생수	학과당 교원수	교원의 주당 시간수	학교당 학생수	학교당 교원수	학교당 학과수	교원당 학생수	학과당 학생수	학과당 교원수	교원의 주당 시간수
		1998	8,686	218	41	39	211	5	8	8,692	213	47	40	184	4
1999	9,380	224	47	41	199	4	7	9,209	213	55	43	167	3	9	
2000	9,737	227	48	42	202	4	8	9,446	210	57	45	165	3	9	
2001	9,980	232	51	43	195	4	8	9,851	221	58	44	169	3	9	
2002	10,121	254	49	39	206	5	8	10,091	223	59	45	171	3	9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단기간에 수도권 국공립대학의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 「자구노력 + 정부의 지원」 구도 하에 다음과 같은 향후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관 수준(자구 노력)에서는 ①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간의 기능적 역할 분담(예: 수도권 연구중심, 지방대 교육중심 등) ② 각 지역별 거점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전공(학과) 구조 개편(예: 교환, 통폐합 등) 및 특화·전문화 ③ 재원 조달 구조의 다양화(예: 자산 매각, 산학협동체제 등) ④ 새로운 학습 수요의 발굴(예: 평생교육 수요 흡수) ⑤ 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예: 우수교원 확보) ⑥ 정원 규모의 점진적 축소 등을 과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수준(자구노력 지원)에서는 ① 자립기반이 취약한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정보공개 ② 설립별, 지역별 이원적 경쟁체제 구축(예: 지방소재 기관 집단에는 제한적 경쟁체제 도입) 및 교육공급량의 신축적 조절 ③ 기관 수준의 자구노력 수준에 비례하는 지원의 차별화 ④ 기관 및 전공(학과) 퇴출의 자유화 ⑤ 재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예: 자산 처분, 기여 입학제 검토, 수업료 자율화 등) ⑥ 지방소재 기관에 대한 한시적 advantages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예: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⑦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채용 관행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예: 지역 할당제 도입) 및 기업의 채용 관행 변화를 점차적으로 유도 ⑧ 한계효용이 높은 전공(학과)(예: 의약계, 법학계 등)의 지방으로의 이전 및 공급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대학 학생들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방대학 학생들에 대한 해외 유학 기회 및 국내 명문대학에서의 교육 기회를 정부의 지원 하에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대학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관리가 필수적인 바, 국가 수준에서 일정 수의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증제”를 도입하여 질 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그리고 우수한 교수 요원이 지방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고주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방대 출신의 고용기회 확대입니다.

지방대 학생의 고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과(전공) 구조가 노동시장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를 유도하고, 이를 지방대학의 질 평가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턴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우수 기업에서 인턴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인턴 학습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바,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함) 또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지방대학 출신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지방대학의 세계화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 선진 우수 대학과 협동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해외 우수 교원의 지방 유입 및 인사 교류를 적극 장려하며 외국 학생의 지방 대학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대학 재원의 다양화 지원입니다. 등록금 이외의 다양한 재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영리활동을 보장하되, 그 결실을 교육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지방대학의 불필요한 자산, 또는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의 처분권을 대폭 허용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시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3.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은 개인적 수준, 국가적(사회적) 수준에서의 수요를 별개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수준에서는 졸업 후의 진로를 우선 시하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수요는 노동시장의 움직임(즉, 취업 가능성)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국가적) 수준에서의 수요는 이와는 다릅니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수요가 적더라도 사회적(국가적) 수준에서의 수요는 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적(사회적) 수준에서의 수요가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적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을 육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수요에 따라서 별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

인적 수요(노동시장에서의 수요)가 많은 학문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입니다.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학문은 대부분 지식 흡수적 성격을 띠고 있어 노동시장 수준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기능에 맡겨두어도 수급이 자동 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반면 국가적 수준에서는 지식 창출 기능을 학습하는 학문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사회적) 수준에서의 수요가 많은 학문, 즉 지식창출 기능 학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주도하도록 하여 기초과학, 인문학 분야 관련 학과(전공)가 지방국립에 있건, 지방사립에 있건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으로 육성 하되, 공급이 많은 분야(과잉공급)는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수급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수 학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가능성을 비롯한 인센티브(예: 국비 유학 우선권 부여)를 부여하는 것도 한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産業技術研究會理事長 朴元勳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현상과 관련하여  
- 이공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과학기술인력 확보와 과학기술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마련하여 주신 출연(연)연합대학원을 통하여 신생·융합기술분야의 현장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 배출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향후 안정적인 과학기술인력 확보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 또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연구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호순환적으로 과학기술 인력들이 필요한 요소에 적절히 공급되어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진출 확대 관련  
- 지난해 말 현재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내 여성과학인 비율은 평균 6.5%에 그치고 있는데,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과학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확대는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뿐만 아니라 IT, BT, NT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는 더욱 중요해 지리라 판단됩니다.
- 연구회는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책에 소관연구기관이 적극 참여해 나가도록 지도할 것이며, 아울러 우수한 해당 연구분야의 여성과학인력이 소관연구기관에 유입되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 ETRI 내부 갈등과 관련  
- 직원들과 갈등이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ETRI의 연구원들과 원장 사이의 신뢰 회복과 연구에 사기진작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출연연구기관의 경영은 관련 법률에 의거 원장에게 모든 독립권과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어 원장이 직원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체적인 해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구분위기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간이사 3인으로 구성된 「ETRI 경영진단을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안 진단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 연구회에서는 소위원회 활동의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조속히 ETRI의 경영환경이 안정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基礎技術研究會理事長 鄭明世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안정적인 과학기술인력 확보와 과학기술자의 처우개선 대책은?

□ 우리나라가 선진 과학기술국 대열에 차질없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과학기술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가 우수한 청소년들을 이공계로 흡인하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즉,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인력양성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탁월한 교수진과 양질의 장학제도를 제공하고, 졸업 후 그들에게 넓은 취업문호와 월등한 사회적·경제적 보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병역특례 확대 및 복무기간 단축, 해외유

학기회 확대, 취업 등

- 한편, 현재 활동 중인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고용 안정성”, “연구의 자율성”, “안정적 연구환경”을 보장하고, “보수 및 복리후생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 정년연장, 연구연가 활성화, 연금제 도입, 각종 평가부담 완화, PBS 개선 및 정부출연금의 확대 등

□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연구회는 작년 말부터 IT·NT·BT 등 신생 융합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30년 역사의 정부출연(연)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시설·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연구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출연(연) 연합대학원대학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04년 3월 개교 목표), 현직 연구원들의 세계적 경쟁력 배양을 위해서 소관 연구기관에 ‘연구연가제도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여성과학자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나 탁월성이 생명인 연구분야의 특성상 강제할당을 강행할 경우 국가과학기술력의 전반적인 저하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여성채용목표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연구현장에서 여성과학자들이 부작용 없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차분한 여성의 장점이 최대한 살려질 수 있는 분야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 좋겠고, 여성의 육아활동이나 신체조건 등을 배려하는 정부차원의 복지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기관도 인력채용시 학맥이나 성별이 아닌 실력본위로 공개 채용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가야하며, 연구회 차원에서는 연구기관이 신규직원 채용시 여성과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독려하고 그 채용실적을 매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안정적인 과학기술 인력확보와 과학기술자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

-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공계 기피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되어온 사회적 환경에 기인된 것으로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과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개선시책 등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시행됨으로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가과학기술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서는 「신생융합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실무형 전문연구 및 기술 인력의 육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과학기술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적 지위향상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단기적 조치로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기반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영년제 도입, 연구연가 및 연구원 재교육 프로그램, 우수연구원에 대한 성과급, 복리후생제도 활성화 등이 확대 실시되어야 하며, 연구회에서는 이같은 여건 조성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고급여성과학기술인력의 육성과 활용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공공기술연구분야의 특성(해양, 지질자원, 건설, 철도 등 현장 중심연구)상 박사급 여성과학자 전공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채용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 정부출연(연)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확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우수 여성연구인력 발굴 및 상시 채용정보 게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여성과학자의 출연(연) 근무여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채용기회 확대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소관연구기관별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과학기술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에 반영토록 하여 '03년 3월 현재 74명(전체연구원의 4.3%)으로 '02년도 대비 17명의 여성과학자 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 연구회에서는 여성과학자 채용 확대와 병행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실질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 DB를 구축하고 유망 여

성과학자 지원연구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嚴虎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전자입찰 구매 과정에 대한 점검 필요

- 연구회에서는 전자입찰 구매업무와 관련한 부적절한 사례를 소관연구기관에 알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입찰 구매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였음
  - 아울러 향후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 출연(연) 직원의 타업종사는 각 연구기관별 관련 규정에 의거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본래의 제도 운영 취지에 적합치 않은 사례 등이 발생치 않도록 경영협의회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지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林鎮出 委員**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 강화해야

(문제점)

- ① 위원장의 비상임화 : 조직원리상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립적 운영 불가능
- ② 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의 사기의 문제
  - :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장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국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음.
  - : 신중한 절차등으로 인해 조사관들의 특별한 노력 요구
    - 따라서 인사상 가산평점, 특별조사수당 등의 방법과 같은 사기 진작책 필요
    - 1996년 6월 30일부터 파견공무원에 대한 가산평점제도 폐지
    - 유능한 조사관의 확보와 사기진작에 어려움
    - 고충민원 전담업무의 특수성을 무시한 조치

(질 의)

우수한 조사관 확보와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오래된 숙제인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된 것이 있는가?

(대안 제시)

- ① 가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이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위원회운영규정 등도

음부즈만제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정합니다.

- 위원회의 시정조치등에 대해 위법 처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형사고발권 등 최소한의 강제력을 갖추도록 함.
- 위원장의 지위를 국무위원급 또는 대법관 정도의 지위로 법정화 함.
- 위원장이 행정관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② 유능한 조사관을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상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 우수한 조사관을 확보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 ③ 또한, 우수한 전담조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법률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판사를 파견 받아야 합니다.
  - 변화사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특채
  - 해당 관련분야의 박사급 전문가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이고 신속적으로 채용,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인사운용과 조직개편에 대한 위원장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張泰玩 委員**

홈페이지 관리 문제

본 위원은 위원회의 홈페이지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음브즈만의 활동 인원이 40명(4월 1일 현재)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살펴본 결과 43명이었습니다. 3명(김택, 이창근, 강민국씨)의 누락은 바로 해촉자로, 이들은 본인이 탈퇴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 활동 중인 것으로 인터넷 상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음브즈만제도를 위원회 자체에서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게 합니다.

지역행정 상담위원의 경우는 상담위원들의 상담실적이 98년부터 지난해 5년동안 총 6만 7660건을 상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고충민원의 안내역할을 하고 있는 상담사례 게시는 지난 4월 8일 현재, '01년도 상담사례로 68건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깐, '01년 12월 4일 68건 이후 한번도 게시



되지 않았던 상담사례가 '02년 12건, '03년 8건이 하루사이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도 인터넷 이용이 '99년 12.8%에서

'02년에는 49.2%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인터넷 접수가 과반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위원회의 홈페이지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 미흡해서 되겠습니까?

<고충민원 접수경로별 통계>

(단위 : %)

구 분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대비실이관 (문서, 인터넷)	총리실 이관접수	PC통신 접수	기 타
99년	62.5	12.8	12.3	3.33	2.2	2.8	3.9
00년	47.6	30.8	10.8	5.13	1.1	1.1	3.9
01년	38.7	43.4	9.7	3.9	1	0.03	3
02년	34.9	49.2	7.3	3.35	0.06	0	4.2

(질 의)

동일한 민원의 중복접수로 인한 행정적 손실을 막고, 민원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는 디지털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한 이유와 향후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상담체계 구축과 관련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위 1급 공무원의 일괄사표 제출과 관련하여

역대 위원장들이 임기 3년을 지킨 경우는 4대 주광일 위원장 한명뿐이었으며, 역대 상임위원 10명 중 1명만이 임기를 지켰으며, 상임위원 중 최단기간 근무는 김범일 전 상임위원으로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3월 18일 행자부 1급 공무원 인사과정에서 고충처리위원 1급 3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과 행자부 인사요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나 지적되는 사안으로 위원장의 비상임으로 위원회의 공무원 임용권을 행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고충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위원장이 상임화 됨으로써 인사권을 확보하는 것이라 봅니다.

(질 의)

업무의 전문성이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위원회 1급 공무원의 전원 사표제출은 위원장님으로서도 부담이 있으시리라 보는데, 이번 연두업무보고시 인사권 확보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富謙 委員

정부기관 간 법령해석 아전인수

○민원처리 현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민원처리 건수가 1만 5707건인데 이중 단순안대가 8324건으로 53.6%로서 절반을 넘는데 민원인들이 단순안대만으로도 만족하는가?
- 민원처리 중에서 이송건수가 1387건으로 8.8%에 이르는데 보통 어디로 이송하는가?

○시정조치권고 불수용 사유 중 법령해석상의 차이가 절반이 넘어 정부기관간 법령해석이 아전인수격이 아닌가?

- 200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은 건수 150건
- 불수용 사유를 보면 법령해석상의 차이가 77건으로 불수용 사유의 절반이 넘는 51.3%나 됩니다.
- 이렇게 된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령해석이 너무 안이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법령해석이 너무 고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는가?
- 이에 대한 대책은?

○崔在昇 委員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극대화할 위원회 차원의 자체 계획과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

- 행자부 인사에 따른 위원회 인사 공백의 문제점은 없는가 -

-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극대화할 위원회 차원의 대책은 -

먼저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검토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위원회 간부급 2명(조사2국장, 민원관리관)이 공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것은 이번 행정자치부 인사에 따른 후속 인사가 늦어져서 생긴 결원입니까? 간부급 인원 공석이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지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sup>1)</sup> 아울러 조속한 인사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위원회가 3무(三無)3불(不)의 고충을 안고<sup>2)</sup>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간부 직책 공석을 바라보는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 약 2주 동안의 업무 공백도 문제입니다만, 행자부의 후속인사만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 공석 중인 조사 2국과 민원관리관은 산술적으로 볼 때, 3국 12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조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입니다.

특히 민원관리관은 국회업무,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 위원회 권고사항 점검, 민원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 그야말로 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조사 2국은 도시계획, 주택, 건설, 도로교통 등 집단 민원 등 위원회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부서입니다.

인사가 앞으로 계속 늦어질 경우, 업무 공백이 생기고 또 조직 차원에서도 정책수립 및 집행에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인사권한이 없습니다. 고충위의 인사권은 행정자치부에 있으며, 이번에 공석이 된 간부의 결원 사유는 민원관리관의 경우, 행자부 승진 복귀, 조직 2국장은 4월 1일 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되었습니다.

2) 3무(無) : 옴브즈만제도에 걸맞은 위원회 독립법이 없고, 위원장 인사권이 없고, 전속조사관이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하며,

3불(不) : 3무에서 비롯되는 기능상의 약점으로, 직권조사가 어렵고 신속한 조사가 힘들고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행정기관이 잘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고충위의 인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는 국가 정책수립 및 민원해결과 관련하여 국민의 참여를 크게 장려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의 참여 열기 또한 대단합니다.

국민의 고충을 직접 처리하고, 민원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고충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국민참여수석실을 신설하여, 인터넷과 기타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민원과 국민제안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중재 조율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현재 국민들이 청와대 및 국민참여수석실을 통해서 제기하는 민원 및 국민제안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해결된 민원이 일시에 제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청와대를 경유하여 위원회로 이관되는 민원의 숫자는 더욱 늘어 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약 한달 동안 청와대를 통해서 위원회로 접수되는 민원이 약 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서 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이 총 586건으로 위원회 전체 접수 민원의 3.8%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이는 매우 큰 증가 수치입니다.<sup>3)</sup>

특히, 청와대가 자체 조사인력이나 인원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고충위로 접수되는 민원이 늘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청와대 접수 민

3) 2002년 고충위 민원접수는 총 1만 5551건으로 이중 청와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586건으로 전체의 3.8%, 2001년에는 전체민원의 3.9%를 차지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3년, <2002년 운영상황 보고서>, 29쪽

원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자체 인력 보장이거나, 또는 국민참여수석실과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이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위원회 차원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는 현재 국민참여수석실 민원비서관 주재로 토요일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당사자는 물론 관련기관과 전문가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위원이 위원회 관계자와 전화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토요일간담회에 고충위는 장소 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만을 할 뿐 공식적인 참여나 의견 개진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주 업무가 정부 행정정책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정책권고 기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위원회가 이러한 자리에 어떠한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자체조사 인력과 산적인 민원을 해결해 온 위원회 고유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참여정부의 국민참여 정신을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수석실 온라인 토론, 국민제안, 그리고 토요일간담회 등에 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적인 실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제선정, 민원 해결 및 자문과 관련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이러한 민원과 국민제안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울러 향후 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安大崙 委員

옴부즈만 제도 관련

언론보도나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자세로 일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국정을 함께 고민하는 본 위원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1. 고충처리위원회가 언론을 통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청와대 국민참여 수석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민원 업무의 효율적 시스템을 완비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2. 그리고 업무보고서(5쪽)를 보면 안방 민원처리 시대에 대비한 사이버 상담체제 구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인터넷시대에 참 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화상채팅을 통해 민원상담도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3. 이 제도를 잘 운영만하면 원거리 또는 농촌이나 도서지역 민원인들의 고충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전문 인터넷화상 상담원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시민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면서 2002년도에 367건의 상담안내 실적을 올렸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이 시민 옴부즈만제도가 현재 특정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지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 상담안내제도라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 어떻게 확대시켜나갈 계획이십니까?
5. 고충처리위원회가 추진한 금년도 1/4분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업무보고서 6쪽) 민원접수가 전년동기 대비 13%나 증가했고 민원처리는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6. 이원형 위원장께서는 최근 「선진 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을 발간하셨지요? 그 자료집을 만드시면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수준이 솔직히 어느 정도나 됩니까?
7. 위원장께서는 언론을 통해 선진국의 경우, 옴부즈만이 내린 결정과 그 권위가 법률이나 의회 결정보다 더 존중되는 소위 옴부즈만 문화(Ombudsman Culture)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어떤 문제부터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委員

소속은 국무총리 산하, 인사는 행자부 산하, 업무는 청와대 참여수석실 산하?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현재 고충위 인사는 행정자치부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고충위 직원의 절대다수는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관

런없이 행자부 인사로 채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번 행자부 1급 공무원의 용퇴에 따라 1년 11개월, 1년 8개월, 2년 4개월의 임기를 남긴 고층위 상임위원 전원이 용퇴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큰 문제입니다.
- 아울러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조사2국장 과 민원관리관 등의 고층위 요직 두 곳이 2 주 넘게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조사2국은 고층위 민원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로·교통·도시계획·토지 관련 민원을 집중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관리관실은 민·형사 등 법률관련 민원을 포함한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인사상의 공백이 곧 업무상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사 공백이 빠른 시일내에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참여정부에서 신설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 소관부처로 넘겨져 법 규정의 틀 안에서 처리되고 제도개선은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맡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 민원과 불합리한 규정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즉 행정부처로 넘기는 것보다 청와대와 고층위가 조사하는 민원의 비율을 높이고 법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청와대 제도개선비서실로 넘겨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재 30명 안팎의 참여수석실 인력으로 폭주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원에 청와대가 개입하면 관련 부처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으며, △고층위 역시 참여수석실의 외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합리적인 참여수석실과의 업무조율 시스템을 개발하여 민원해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위원장의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訓平 委員

시민옴부즈만제도와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옴

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옴부즈만제도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시민옴부즈만제도의 운영현황을 보니 현재 40명의 옴부즈만이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29명이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편중된 것은 위원회가 지방에 있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에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답변바랍니다.

2. 시민옴부즈만의 상담 안내 실적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67건이고 그 중 법률 상담이 154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와 법무사는 각각 1명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것은 대부분 법률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고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법률 전문가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민옴부즈만은 본인이 직업을 가진 채 무보수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은 부진해지고 형식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옴부즈만이 명예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정부 포상을 받은 옴부즈만은 어느 정도이고 포상 이외에 다른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국민참여수석실과의 업무 중복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달간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 8482건인데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약 6개월 분량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참여수석실이 신설되었고 청와대에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민원업무 해결에 청와대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접수나 국민제안제도의 업무가 국민참여수석실과 중복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와대의 국민참여수석실과의 민원 업무를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서)

○國民苦衷處理委員長 李沅衡

(林鎮出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우수한 조사관 확보와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위원장의 상임화와 유능한 조사관의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상임화와 관련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동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행정자치위원님들에 대해 위원회의 실상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의 상임화 필요성에 대한 기관간의 견해차이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위원회는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예정이며,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위원회 파견 조사관의 경우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시 다소 불이익이 있어 우수한 조사관을 파견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회는 파견공무원들이 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 경력평정시 위원회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가점(최고 2점)을 부여하고 있고, 소속부처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우대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파견공무원의 처우향상을 위해 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우수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2회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및 우수한 조사관 유치를 통한 민원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

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張泰玩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동일한 민원의 중복접수로 인한 행정적 손실을 막고 민원인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는 디지털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한 이유와 향후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상담체계 구축과 관련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홈페이지 일부 자료의 최신화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분야별 담당자의 교육 및 수시 점검 강화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으로써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의 현행화 및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특히, 디지털시대에 맞추어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금년도 홈페이지의 개선·보완시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완벽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1급 공무원의 전원사표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인사권 확보의 진행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현재 상임위원 임명제청권은 행자부장관이 행사하고 있고 임명제청 전에 위원회에 임명동의에 대한 협의를 하여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성·중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옴부즈만 기관임을 감안한다면 상임위원의 임명제청권은 위원장이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중인 상임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어 위원회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시민옴부즈만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약 73%인 29명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지방전문가들의 참여 등 전국적으로 확대계획이 있는지와 동 제도가 시민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무보수 자원봉사제도이기 때문에 상담이 형식적일 수 있는바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40명의 각계 전문가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사이버로 상담·안내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보수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 위원회에서는 '01년 3월 제도시행 초기에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옴부즈만을 모집, 위촉한 결과 관련분야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활동하게 되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 분야별·지역별로 다소 편중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회에서는 시민옴부즈만의 지역별·분야별 편중문제 해결 및 시민옴부즈만의 신속·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 보상금 지급, 실적우수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시민옴부즈만의 처우개선 대책(인센티브)을 수립 추진하고
  - 수도권(29명, 73%)에 편중된 시민옴부즈만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지역별·세대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예정이며,
  - 또한 상담분야의 다양화를 위하여 법률전문가, 전직공무원, 시민단체활동가 등을 골고루 선발,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로의 민원증가와 국민참여수석실의 신설로 인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참여수석실과의 업무 중복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업무 협조 및 분담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국민참여수석실은 국민참여정책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 국정운영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운영하는 업무를 기획하고, 국민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 및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여,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 보다 정책적·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반면에, 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와, 행정절차 및 제도에 대한 각종 생활 민원 상담·안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어, 참여수석실과 우리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첩되는 민원을 포함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동시에, 국민제안,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수석실과 협조하여 국민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富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작년 민원처리건수 1만 5707건 중 단순안내가 53.6%로 절반이 넘는데 민원인들이 단순안내만으로도 만족하는지, 또한 이송건수가 8.8%에 이르는데 보통 어디로 이송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안내회신하는 사안은 민원내용이 법령·제도에 대한 내용 또는 행정절차나 기준에 대한 문의사안으로
  -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의 자료가 필요한 사안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민원인에게 친절히 내용을 안내 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회에서 이송처리하는 민원은 수사·재판사항이나 소비자분쟁·채불임금과 같은 사 인간의 법률관계 등과 같이 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사안으로
  - 행정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 직접 처리하기 곤란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관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할외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처리가능한 사안은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 이송할 경우에는 민원사안에 따라 법원·검찰청 등 관계기관외에 법률관계는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문제는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유관 전문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사건 중 불수용건수가 150건이고, 이중 법령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불수용이 절반이 넘는 51.3%를 차지한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법리적 검토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법령해석이 너무 고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이기 때문이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옴부즈만 기관의 성격상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안도 관할 대상으로 하고 있어
  -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의 법령적합성 외에 합리성도 고려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 감사 등을 의식하여 가능한 법령의 적합성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권고 불수용 사유로서 법령 해석상의 차이는 이러한 기관의 입장에 기인한 것으로,
  - 위원회의 안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결과는 아니며, 관계기관에서도 위원회의 입장을 사실상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崔在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관리관과 조사2국장의 공식으로 업무 공백과 조직차원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이 비상임인 관계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타 위원회와 달리 공무원임용령상 소속장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이 없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금년 4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1급 및 일부 국장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회 인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그 후속인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후임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상임화에 대한 법률 개정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로의 민원증가와 고충위로의 민원이송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인력을 보강할 의사가 없는 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 3월말 현재 청와대 접수 민원은 1만 726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30%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서 우리 위원회로 이송되는

-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와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도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전년도 동기대비 약 15%(526건)가 늘어난 4442건임.
- 앞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민원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보강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에서 개최하는 토요민원간담회에 대해 위원회가 행정실무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민원해결과 관련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국민참여수석실에서 개최하는 토요민원조정간담회는,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민원 중 장기미해결 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중요한 민원사안에 대하여 소관기관 담당자와 민원인을 한자리에 모아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29일에 1차, 4월 11일에 2차 간담회를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행정절차 및 제도에 대한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안내하고 있는데 반해,
  -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에서 개최하는 토요민원간담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수렴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보다 거시적인 차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국민참여수석실과 협조하여 국민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효율적인 민원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참여수석실간의 업무협조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국정참여와 권리구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지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우리 위원회와 청와대 국민참여 수석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참여수석실은 국민의 민원이나 제안을 제도개선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시적인 국민참여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첩되는 민원을 포함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동시에, 국민제안·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참여수석실과 협조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사이버 상담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화상상담으로 민원상담도 가능한 것 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서울상담센터와 대전상담센터간에 「화상상담 시스템」을 설치하여 인터넷 화상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 화상상담 안내를 실시하게 된 것은 대전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각 분야 전문 조사관들과 연결, 화상으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컴퓨터 화상장비를 이용하여 고충위의 IP주소(서울 211.218.38.173, 대전 61.85.87.110)에 접속한 뒤 위원회 조사관과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1대 1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 사무실, PC방 등 전국 어디서나 화상장비를 갖춘 컴퓨터만 있으면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화상상담 안내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고충위 소속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각 분야 전문조사관이 관련분야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화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상담센터에서 직접 1대 1로 상담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 인터넷 문화 확산에 병행하여 화상상담 실적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화상상담 시스템」을 추가로 확보하여 인터넷 화상 상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 상담안내 제도라면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40명의 각계 전문가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사이버로 상담·안내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보수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 위원회에서는 '01월 3월 제도시행 초기에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옴부즈만을 모집, 위촉한 결과 관련분야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활동하게 되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 분야별·지역별로 다소 편중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회에서는 시민옴부즈만의 지역별·분야별 편중문제 해결 및 시민옴부즈만의 신속·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 보상금 지급, 실적우수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시민옴부즈만의 처우개선 대책(인센티브)을 수립 추진하고
  - 수도권(29명, 73%)에 편중된 시민옴부즈만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지역별·세대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예정이며,
  - 또한 상담분야의 다양화를 위하여 법률전문가, 전직공무원, 시민단체활동가 등을 골고루 선발,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중 민원접수가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하고 민원처리도 21% 증가한 요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1/4분기에 접수된 민원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 분야별로 보면, 주택건축분야·보건복지분야·재정세무분야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 민원제출 경로로는 인터넷이 52%, 우편이 30%로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제출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따라서 금년에 민원이 증가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 우선 인터넷이 보편화됨으로써 국민의 민원제출이 용이하여 졌다는 점과
  -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주택·세무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고충의 증가와 함께
  -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민원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 민원처리



체제를 강화하고 장기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처리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고충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써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진 옴부즈만 제도와 우리 나라 옴부즈만 제도를 비교·평가하였을 때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옴부즈만제도는 선진 옴부즈만과 비교하여 볼 때 기본적인 역할은 대동소이하다고 볼수 있으나, 행정환경과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권한과 위상 등의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상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선진 옴부즈만은 헌법 또는 독립법에 의해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옴부즈만의 상임화, 독립된 인사권, 규칙제정권 등을 부여받아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고, 독립법이 아닌 작용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권한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회는 대부분의 선진 옴부즈만과 같이 관계 기관에 대한 문서제출, 설명 요구권, 출석요구권, 시정권고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선진 옴부즈만 국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사 처리를 위해 직권조사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선진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서 위원회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위원회가 국민과 행정의 조정·중재자로서 옴부즈만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옴부즈만 문화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어떤 문제부터 해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특히 옴부즈만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권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옴부즈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일부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도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옴부즈만으로의 권위를 세우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 옴부즈만 문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옴부즈만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통한 법적 위상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文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이번 행자부 1급 공무원의 용퇴에 따라 고충위 상임위원 전원이 용퇴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큰 문제임을 지적하시면서, 아울러 민원관리관과 조사2국장의 공백이 업무상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인사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이 비상임인 관계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타 위원회와 달리 공무원임용령상 소속장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이 없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금년 4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1급 및 일부 국장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회 인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그 후 속인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후임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상임화에 대한 법률 개정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에서 신설된 국민참여수석실과 관련하여 민원해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참여수석실간의 업무조율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국정참여와 권리구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지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우리 위원회와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참여수석실은 국민의 민원이나 제안을 제도개선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시적인 국민참여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첩되는 민원을 포함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동시에, 국민제안·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참여수석실과 협조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서)**

(비상기획위원회)

○李訓平 委員

국가 위기 관리와 관련하여

1. 전·평시 일원화된 국가 위기관리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사항이었는데도 그동안 실시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난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최근 재난관리청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비상기획위원회와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라크전의 종결 이후 북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한반도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전보다 훨씬 약화되었습니다. 한 대학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대가 모병 제일 경우 약 80%가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외국으로 피신하거나 미리 가 있겠다는 의견이 38%였습니다. 위기에 대한 국민반응이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안보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안보의식 강화나 비상대비 행동요령의 교육 및 모의훈련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비상대비 대국민 홍보와 관련하여

전시뿐만 아니라 테러나 화재 등 최근 비상사태 대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의 예방 못지 않게 대처능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그러나 비상기획위원회의 홍보담당 인원이 겨우 1명이고 2003년도 홍보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한 1억 81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원과 예산으로는 국민들이 비상사태시 대처하는 요령을 홍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증가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2.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홍보 강화를 위해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이라는 책자를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책자에 대해 모르거나 본 적은 있지만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책자보다는 방송 홍보나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통해 비상대비 요령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允式 委員

위원회 발간 자료,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한반도의 전쟁 발생 위기감과 이라크전을 계기로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평상시 대비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시행동요령 등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을 비상기획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교육·홍보 목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26만 8000부가 발간되어 배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 2008년까지 94여억 원을 투입하여 각 세대당 1부씩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비상기획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람한 결과, 많은 국민들이 <비상대비 국민

행동 요령> 책자의 발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처럼 배포를 요구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추가배포를 일정한 수량 안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보관수량의 한정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추가배포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국가 비상시의 행동요령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를 추가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함과 동시에 2008년까지 각 세대당 배포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비업무에 재난대비 방안 포함해야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상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에 이에 대한 대비방안들을 마련하여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191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아직도 50여 명의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대형참사로 인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3월 26일 천안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8명의 꽃다운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서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로 생각되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훈련 등을 통해 습득함으로써 그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선 비상기획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충무훈련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훈련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비상대비방안 마련도 필수적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를 사실상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앞으로 휴전선 일대에서 주한미군이 수행해 오던 '특정임무'를 한국군이 맡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던 인계철선이 사실상 폐지된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반드시 북핵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이후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감축과 연계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반대모임'을 구성하여 주한미군 2사단 후방배치를 반대하기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한 비상기획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그리고 북한의 화생방 공격 가능성 등 모든 주객관적 상황 등을 비상대비훈련방안에 포함하여 이를 철저하게 연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大崙 委員

비상시 주민통제시스템 구축 관련  
“비상시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교육 대책 세워야”

1. 지난해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위기 발생시 수도권 주민의 심리진 공황현상과 대비책」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본 위원은 그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중 위기 발생시 수도권 주민 행동요령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부분을 보고 느낀 바 있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서울 시민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위기 발생시 시민 의식조사를 해본 결과 비상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알고 있다가 35%, 모르고 있다가 65%, 그리고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4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통계수치라면 서울 시민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3. 전쟁이란 단 1%의 가능성에도 처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으로부터 장사거리 포가 서울시 어딘가에 날아 들어와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비상시 행동요령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누가 통제하고 대피시킬 계획입니까?

재난 심리학에서 인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15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15분이 지나면 패닉(panic) 즉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본능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5일 평양 전역에서 약 10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방공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100만 명이 경보음이 울리자 15분내에 소개 지도원의 지휘로 질서있게 지하 방공호와 벙커로 피신하더라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4. 따라서 위기 발생시 주민들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주민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의 주민통제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에 일어날지 모르는 전시공황을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교육을 확대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학교교육에 전시대비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정부의 재난관리청 신설과 관련 비기위의 업무 협조 방안

○저희 위원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전·평시 비상 및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전시와 평시가 일원화된 통합관리체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집행업무의 효율

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시 재해·재난 업무만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국무회의 토론(3.4)을 통해 결정하였고, 현재 행자부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신설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시업무와 재난관리업무의 유사성을 감안, 전시와 평시가 유기적으로 협조 및 연계될 수 있도록 실무요원을 기획단에 파견하여 합동 연구토록 조치하였고, 위원장을 비롯하여 관계국장 등이 수시 방문하여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과 업무협조 내용 : 별첨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위원회 의견

1. 전·평시 연계된 재난훈련 실시

○비기위 주관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시 평시 재해·재난 훈련 등을 통합 실시함으로써 훈련 효과 극대화

○내용

- 비상대비 훈련의 종류

• 을지연습 : 전국적인 규모로 연1회 실시하는 도상연습 위주의 전시 대비 종합연습

• 충무훈련 : 시·도 단위 규모로 년 1~2회 실시하는 실제훈련 위주의 지역별 자원동원 훈련

- 훈련방법

• 분야별 실시되는 재난대비 훈련, 테러 훈련, 기타 평시 훈련을 전·평시 종합훈련으로 통합 실시

• 복합적인 재난상황에 대비한 집중적인 훈련 유도

• 훈련은 실제훈련과 도상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

- 훈련실시 기간 :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기간중

2. 대규모 재난시 인력·물자 등 동원체제 구축

○현행 충무계획은 전시법령에 의거, 전시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대규모 재난시 필요 자원 지원 곤란

○대형 피해시 필요 자원을 신속히 동원 지원할 수 있도록 동원의 법적 근거 마련

3. 전시 재난관리청의 역할과 비기위와의 관계 정립 및 전·평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

- 4. 기타 평시 재난관리계획 수립시 비축물자, 긴급복구계획 등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

비상대비 홍보인력과 예산을 증가할 계획

- 위원회의 홍보담당 요원 및 예산의 절대 부족으로 그동안 대국민 계도홍보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 비상대비의 핵심은 국민의 참여와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국민전체에 대한 안보의식을 제고시키는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홍보 담당인원(6급)을 2~3명 더 증원시켜 담당관으로 편성하고 예산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 책자 보급보다는 방송홍보나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교육·홍보 방안 및 훈련의 필요성

- 저희 위원회에서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현재까지 총 27만부의 책자를 발간, 정부기관과 교육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였으며,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원님 지적과 같이 더 큰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방송과 인터넷에 널리 홍보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자 홍보대책 T/F를 구성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을지연습 등을 통한 모의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金允式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책자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2008년까지 배포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견해

-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와 비상대비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 책자발간과 안보영상물을 제작·배포하여 왔으며 홍보책자는 2000년부터 발간하여 행정관서와 공공기관 및 동원업체,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26만 8000부를 배부하였고 안보

영상물은 1998년부터 5년간 4130개를 제작하여 을지연습전에 행정기관 및 동원업체, 교육기관 등에 배부하여 각종 교육·민방위훈련·을지연습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위원회 홈페이지에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와 안보영상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홍보 책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세대당 1부씩 보급할 계획이지만 이를 추진하는데는 많은 예산(약 100억 원)이 소요되어 예산확득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활용방안 등 노력을 경주하여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무훈련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훈련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 을지연습은 전국적 규모로 실시하는 연습인 반면에 충무훈련은 지역단위의 지리적·전략적 특수성에 따른 안보적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실제훈련 위주의 훈련입니다.
- 훈련내용으로는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동원절차훈련으로 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를 동원하여 군부대에 인계하고, 국민생활 안정분야는 가스, 전력, 통신, 전재민수용구호 등의 훈련을 실천감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재난에 대비한 인명구조, 긴급복구,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합재난대비훈련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복합재난대비훈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민불편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03년도 충무훈련시에는 복합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하여 충무훈련이 전·평시를 대비한 종합훈련이 되도록 행정자치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과 전·평시 연계된 훈련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북한의 화생방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한 비상대비 훈련 방안

- 비상기획위원회는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통하여 국가비상대비계획을 검토하고 절차숙달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화생방공격 능력을 감안하여 을지연습 기간 중 화생방공격 시나리오를 사건계

획(30여건)화하여 이에 대한 대비연습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방 주한 미군이 재배치된다면 우리의 군사작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시 군사작전 지원을 주된 임무로 하는 비상대비 업무와 비상대비훈련도 이에 부응토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군의 작전개념의 변화에 적합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수도권 주민통제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

- 수도권은 비상시 전쟁지도, 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을 위한 핵심지역으로 수도권 안정은 전쟁승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으나 수도권이 휴전선과 근접되어 있고 인구, 차량, 중요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개전 초 대량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6·25전쟁 경험으로 인한 불안심리와 전쟁에 대한 공포감 등으로 주민의 대량유동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 유사시 효율적인 수도권 통제를 위해서 정부는
  - 군작전로, 행정로의 우선확보와 주민 및 차량의 유동방지, 수도권 북방지역 주민의 수도권 유입통제를 위하여 충무사태 발령시부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시주민이동통제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 충무2중사태시부터 검문소, 교통통제소 등 2만여 개소의 통제소에 군병력, 예비군, 경찰력, 민방위대원 등 통제요원을 배치하여 주민 및 차량을 통제합니다.
  - 전쟁초기에는 비방위목적 주민과 차량을 전면통제하여 군작전로와 행정로를 원활히 소통시키고, 전황에 따라 통제를 완화하여 생업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전시에도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통제계획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을지연습을 통하여 수도권 문제를 집중검토 보완하여 왔으며,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과 현지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시 수도권 대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정부의 확고한 수도권고수 의지와 신뢰를 심어주는 한편 항전의식 및 올바른 전시행동요령 등을 국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와 안보영상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수도권 통제와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계획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은 물론 비상대비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시 공황예방을 위하여 비상대비에 대한 국민 홍보교육 확대 및 학교 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

- 전시에는 주민들의 심리적 패닉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 책자 발간과 안보영상물을 제작·배포하여 국민들에게 교육·홍보해 왔습니다.
  - 홍보책자는 2000년부터 발간하여 행정관서와 공공기관 및 동원업체, 초·중·고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26만 8000부를 배부하였고
  - 안보영상물은 1998년부터 5년간 4130개를 제작하여 을지연습전에 행정기관 및 동원업체, 교육기관 등에 배부하여 각종 교육·민방위 훈련·을지연습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 위원회 홈페이지에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와 안보영상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2002년부터는 서울시 및 경기북부 지역 시·군·구 교육청을 통하여 초·중·고 대상 학급당 1부씩 배포·교육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체질화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수도권 등 6개 시·도 초·중·고에 배포하고 2004년까지 전국의 초·중·고에 학급당 1부씩 배포토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민홍보교육 확대를 위해 2008년까지 세대당 1부씩 보급할 계획이고, 방송매체나 언론 등을 통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서)**

(청소년보호위원회)

**○金文洙 委員**

인터넷 검색사이트 성인인증제도 도입필요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섹스, 자위, 음란, 포

르노, 야사(야한 사진), 야설(야한 소설) 등의 검색어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사이트가 검색되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 일부 검색사이트(야후, 네이버)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을 자체적으로 적용하여, 성인인증을 통해서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자체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기준중 음란물 관련 기준

제15조(선량한 풍속 등 보호)

심의대상 정보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
  2. 음란, 폭력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
  3.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4호 이하 생략)
- 그러나 기타 검색사이트(다음, 드림위즈 등)에서는 성인사이트 검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접근이 용이한 상태임.

○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성인인증을 받은 회원가입자만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검색에 의한 목록 접근 자체가 유해한 것임을 위원회 스스로도 인지하고 취한 조치로 보여지며 타당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검색사이트에서는 손쉽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전까지는 검색포탈사이트의 협조를 구하여 자체적으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 시급히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모든 검색사이트에서 위원회 홈페이지와 같은 시스템과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金允式 委員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지난 9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643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사실과 신상의 일부를 공개하였으며, 특히 죄질이 나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향후 신상공개시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8월부터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친 발표 시마다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청소년대상 범죄 신상공개 논쟁이 금번 얼굴 공개 추진방안을 계기로 다시금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1차 169명 △제2차 443명 △제3차 671명 △금번 제4차 643명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서 지금까지 총 1926명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제5차 신상공개부터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의없이 전원공개하되, 재범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공개 등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재범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면 신상공개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금번 공개에 이미 2, 3차 때 신상이 공개되었던 성범죄자 4명이 다시금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만으로는 성범죄를 줄이는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얼굴공개 등 신상공개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공개되었을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물질적 고통 및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데다가 과연 얼굴공개로 인한 범죄 근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위헌법률심판이 아직 심의중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위헌논쟁의 소지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신상공개 이전에 피의자에 대한 교정교육 강화 등 근본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8년 한국여성개발원이 발표한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른바 ‘사창가’

를 제외한 이발소·룸싸롱·단란주점 등 본래 서비스 외에 2차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종사자 수를 54만 명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경기도 지역의 성매매 실태조사를 벌여온 성매매 여성지원단체 새움터는 경기도 지역의 성매매 여성 수만 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회전반에 걸쳐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8 긴급전화,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와 청소년의 고민상담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1388 청소년 긴급전화의 효과적인 운영은 현장에서 청소년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1388 청소년 긴급전화는 2002년 12월말 현재 시·군·구 지방자치 단체 직영이 88개 기관 100회선이며, 청소년상담실 등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72개 기관 72회선으로 총 160개 기관에서 172회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한해 동안 접수된 3886건의 1388긴급전화 유형을 분석해보면 청소년 고민상담이 1219건

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청소년 폭력상담이 694건 △가출청소년 신고·상담이 52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상담이 418건 등입니다.

이같은 수치는 1388긴급전화가 학교폭력·가출상담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고민상담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전국의 상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운용상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1999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던 통화건수가 2001년 4787건에서 2002년도에는 20%가 감소한 38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혹시 1388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위원장께서는 현재 1388긴급전화에 대한 홍보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원들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1388긴급전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경우, 주간에는 청소년보호 담당과에서 운영하지만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위원회에서 상담지침서를 제작배포하였다고는 하지만 청소년업무와 무관한 일선 공무원들이 다양한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연 도	계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상담	가출청소년 신고·상담	학교·청소년 폭력신고·상담	청소년 지도· 고민상담	기타 상담
1998	3,837	1,186	288	219	859	1,285
1999	3,442	885	425	345	1,062	725
2000	3,973	718	348	263	1,284	1,360
2001	4,787	440	614	614	1,700	1,419
2002	3,866	418	521	694	1,219	1,014
합 계	19,095	3,647	2,196	2,135	6,124	5,803



얼마전부터 모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1588-0924 청소년가출 상담 전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상담내용이 폭증하여 방송 이전인 2월 한달 동안 478건에 불과하던 상담전화 시도 건수가 방송이후인 3월 한달 동안만 무려 1만 826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접속률 집계를 살펴보면,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속된 1만 516건 중 53.58%인 5635건이 밤 9시부터 12시까지 접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담전화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88-0924 시간대별 접속률

(03년 1월~3월 기준)

접속 시간대	00~03시	03~06시	06~09시	09~12시	12~15시	15~18시	18~21시	21~24시	종합
접속량(건)	130	26	305	994	1,139	1,408	879	5,635	10,516
접속률(%)	1.23	0.24	2.90	9.45	10.83	13.38	8.35	53.58	100

1588-0924의 경우 전국의 188개 청소년 상담소 및 센터 등에 착신으로 연결되어 전문적인 상담원들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1388긴급전화와 1588-0924를 분리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홍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야간에 집중되는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性憲 委員

포르노 스팸 메일로부터 청소년 보호문제

대부분의 우리 국민이 그렇겠지만 본 위원 또한 이제는 전자메일을 꺼내 보는 일이 아침의 중요한 일과가 됐습니다. 편지읽기를 위해 클릭하는 순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스팸메일 지우는 일에 5분 이상을 할애해야 할 정도로 스팸메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스팸메일 중 특히 포르노 사이트를 알리는 스팸메일은 갈수록 기승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아침마다 스팸메일을 지우면서 이러한 메일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개

정안>이 발효되면서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이 같은 음란메일을 발송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방지장치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스팸메일이 전달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인터넷 매체속에서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성인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한 때 이 프로그램의 보급운동이 전개되기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메일이 원천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메일 추출기라는 프로그램으로 메일 주소를 인터넷 상에서 추출하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스팸메일은 사실상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주소목록으로 스팸메일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선 어떤 주소가 청소년의 것인지 구별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무조정실장이라도 나서서 19세 미만이 가입해서 쓸 수 있는 메일주소에는 청소년임을 표기할 수 있는 기호나 문자를 처리해 비록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업자들이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에겐 메일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발본색원하고 국민적 관심으로 고조시켜 신상공개 대상에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서 시행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보통신부와 정보위가 이와 관련, 사전에 논의한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林鎮出 委員

현행 신상공개 제도 예방효과 적어

(문제점)

- ① 정보위의 청소년 성범죄자 4차 신상명단 공개 결과
  - 2차와 3차때 각각 공개됐던 4명이 다시 들어가 있음.
  - 2차, 3차 공개후에도 똑 같은 범행 저질러
- ② 성범죄는 상습적 범죄가 많아 예방의 중요성이 큼니다.
  - 성범죄 중 58.3%가 2회 이상 상습범
  - 성매수 범죄 중 89.0%가 상습범
  - 성매수 때 범죄자가 청소년에게 가학적, 변태적 방법 요구 : 27.3%
- ③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포르노 등의 음란물 제작 갈수록 증가
- ④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 확산 심각
  - 4차 공개 통계결과 성매수의 56.1%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짐(3차 공개 : 42.7%)
  - 3차 공개때에 비해 15% 가량 증가

(질의 1)

4차 신상공개 결과 이전에 공개되었던 범죄자가 4명이나 속해있다는 것은 현행제도의 예방효과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질의 2)

이름과 직업만을 공개하여 동명이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예방 효과는 감소시키는 현행제도를, 중 범죄자에 한해 얼굴도 공개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질의 3)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의 확산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정보위의 예방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질의 4)

성매수 범죄의 대다수가 상습범일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대부분 적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보위는 대규모 채팅 사이트와 연계하여 채팅 감시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생각은 없는가?

(질의 5)

또한,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공개가 강화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애당초의 청소년 성매매 유혹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위원장의 견해는?

○李訓平 委員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

지난 4월 9일 제4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상공개된 성범죄자를 보면 2, 3차때 공개됐던 4명이 또 포함되었고 1, 2, 3차 신상 공개자 중 1.9%가 또 다시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58.3%와 성매수 범죄자의 89%가 상습범이었습니다.

1.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는데도 상습범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상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 강화와 같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신상공개시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고 법의 근거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또 다시 위헌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범죄 예방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공개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성범죄의 모방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청소년 유해매체와 관련

1.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조사한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음란사이트 접속 경험이 1999년에 30.7%에서 2002년 52.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음란사이트를 광고하는 불법스팸메일의 범람으로 청소년의 음란사이트 접근은 더

육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유해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음란성 스팸메일에 대한 차단대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메일 발송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청소년들은 메신저와 P2P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개인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인인증과 같이 청소년을 보호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매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고 규제할 만한 법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비해 행정기관의 대응이 뒤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泰玩 委員

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항 삭제 권고안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性)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청소년 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성적 지향을 결정할 만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상의 동성애 사이트 접근을 허용한다면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왜곡된 성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질 의)

이에 본 위원은 인터넷상의 동성애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선정적이고 변태적인 사이트는 선별하여 차단하는 등 정통부 등 관련부서와 협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성 정체성을 확립하

고 바람직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한 성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趙在煥 委員

“제4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다음 제4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위원장께 질문합니다.

4차에 걸친 ‘성범죄자 신상공개’이어서인지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한 그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싶은지, 이번 공개대상자 643명이 지난 3차 671명보다 28명이 적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차 공개가 2001년 8월 30일에 있었으니까, 그 전후의 범행의 유형과 인원수를 비교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643명 중, 범행일자가 1차 공개일 후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며 그 비율은 몇%인지? 그리고 그 비율을 신상공개제의 효과로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성범죄자 신상공개시 범죄 유형을 크게 5가지(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로 나누어 공개되는데, 매차마다 ‘음란물 제작 등’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형확정자 전원이 2차 심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0% 공개 대상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음란물 제작 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들을 일컫는지요?

다음 5차 공개부터는 성폭행 등 고위험군 범죄자와 성매수 등 저위험군 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 및 방법을 달리하여, 본 제도의 목적인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신다죠?

그 방법으로 ‘고위험군’ 대상자는 사진까지 공개하고, ‘저위험군’에 속하는 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저위험군 대상자들에게 취할 방안은 무엇이며, 이 보완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 ‘청소년성보호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가능한지, 고쳐야 한다면 법령 중 몇조항을 고쳐야 하는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으로 제청된 헌법재판소의 최종 위헌판결이 확실히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더 강화된 공개안을 미리 피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번 개선안에 대한 여론은 어떻다고 평가하시는지?

○崔在昇 委員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서 본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중간 평가와 공개 범위 확대

- 국민 90.5%, 신상공개제도 청소년 성범죄 예방 효과 -
- 신상공개심의기준표에 위원회의 정책 의지와 관점을 담아야 한다 -
- 피해 청소년과 신상공개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
- 성 범죄자 얼굴, 세부 주소 공개, 게시 장소 전국확대 90% 찬성 -
- 신상공개제도 모르는 국민 64.9%, 향후 공개자료 확인 의향 -
- 11.8% 자신의 주변 사람 신상공개 명단 포함 직접, 간접 경험 -

그 동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는 시행 초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보호와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큰 공헌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상공개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고, 위원회가 역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새로운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겸하여 본 위원 사무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sup>4)</sup> 몇 가지를 인용하면서 향후 동 제도의 정책적인 실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행 초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응답자의 1114명 중, 무려 1008명(90.5%, 남 : 89.6%, 여 : 91.4%)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직업, 지역, 연령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90%의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1114명중, 71.8%(800명), 특히 20대 여성 응답자의 86.5%가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50대는 62.5%, 60대 이상은 52.3%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신상공개제도 자체를 매우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정부의 일상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상공개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800명)의 28.9%(231명)만이 신상공개자료(계도문)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직은 신상공개제도가 심리적 처방의 효과가 큰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형성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고 국민이 이를 정부의 일상적인 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상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제도의 본래 취지, 즉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643명의 신상을 제4차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sup>5)</sup> 맞습니까?

위원회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넘겨 받은 1차 자료는 애초에 확정판결이 난 약 1221명의 범죄사실 및 신상 자료였지만, 4차 최종공개 당시에는 643명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제외된 당사자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1항에 규정된 ‘신상공개심의기준표’ 때문입니다.<sup>6)</sup>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는 신상공개심의기준표에 의거한 각 항목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배점을 통해서 60점 이상을 기록한 성범죄자만을 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5) 청소년 대상 성범죄관련 자료를 관계기관(대검찰청, 국방부)으로부터 접수하여 (02. 9. 26. 총 1221명),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1차심의(02. 10. 21)→당사자의견접수(02. 10. 24~11. 6)→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재심의(02. 11. 22~23)→공개결정(청소년보호위원회, 02. 12. 2)→공개결정 사실 당사자 통지(02. 12. 3~12. 30)→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02. 12. 31~03. 31) 권리구제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9일 총 643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6) 운영규정 제9조 1항 관련, 신상공개심의기준표에 의하면 역량(40점), 범죄유형(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20점), 범행동기, 죄질, 결과, 수단(10점), 범행전력(10점) 등 필요적 합산항목(100점)과 기타고려항목(총득점의 10%가감)을 합산하여 60점 이상이면 신상공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4) 새천년민주당 정세분석국과 공동으로 2003년 4월 12일, 전국 성인남녀 1114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지역별, 직업별 변수를 통제하여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함. 95% 신뢰구간에 오차범위는 ±2.9%

따라서 관계기관에 제출 받은 자료에는 공개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도, 종종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제도 자체가 너무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어 왔고, 역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개 제도 자체의 한계와 정당성을 비판하는 논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당사자들의 현황과 그 제외 사유를 개략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사전심의를 거쳐서 공개대상자를 선별하는 현행제도를 수정하여,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전체를 공개의 대상으로 고려하겠다”고 신상공개제도의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상공개 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과 특히, ‘신상공개심의기준표’는 수정 또는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청소년의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3항7)에 의하면 공개대상자의 인권, 기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신상 공개를 하지만 결국 구체적인 공개 결정은 전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마련한 신상공개심의기준표를 보면 형량, 범죄 유형, 대상 청소년 연령, 범행동기, 수단, 죄질, 결과, 범행 전력 등 공개 자체를 위한 엄격한 기준 마련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점 항목이 성범죄와 관련된 비슷한 유형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결국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만을 뒤쫓거나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즉,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위원회 자체의 정책 판단과 향후 추진계획 및 의지를 담기

에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지(nobless oblige)’의 취지를 반영하는 배점항목을 추가 배점하는 등, 위원회의 향후 정책 의지나 장기적인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능동적이고 소신있는 행보를 펼치실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신상 공개제도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합의를 형성하는데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및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사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성 매수에 어떠한 형태로든 자발적으로 응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책 마련은 시급합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총 1926명의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수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역시 공개 당시의 신상 자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번 4차 공개 당시 위원장님께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sup>8)</sup> 사실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상공개제도를 추진하여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특히 제도의 본래 취지가 청소년을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한다면, 범죄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고려하면서도 강력범 및 상습범, 그리고 기타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후 관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재기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7)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0조 2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

8) 위원회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 특성파악의 연구를 위해 지난 1~3차 공개자 중 전화번호가 파악된 433명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면접을 시도하였으나, 결번, 이사, 부재중, 면접거부 등의 사유로 통화가 불가능하고, 36명의 공개자만이 전화 면접이 가능했음. 위원장 언론과의 일문일답 내용에서 발췌.

현재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향후 위원회 차원의 보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공개제도에서 공개 당사자의 인권과 관련된 논쟁의 이면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단지,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계도문의 범죄 사실 구성요건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익명의 피해 청소년들의 인권’입니다.

현재 강력범죄, 성 매수 및 음란물 제작 범죄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신상과 정보 파악은 물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일원화된 재활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회 차원의 방안이나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상공개 제도의 공개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차 공개가 있고, 현행 제도가 성 범죄자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sup>9)</sup>하고 있어서, 청소년 보호의 실제적인 효과를 낳기가 어렵다며, 약 500명이 서명을 통해서 공개 범위 확대를 건의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최근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청소년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및 음란물 제작, 성 매매 알선 등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강간범 및 강제 추행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한해서는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체에 대해서 주소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얼굴까지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재범의 우려가 있고, 죄질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성 매수범 등과 같이 이중처벌 논란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서 공개를 면제하는 선택적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제도 자체에 대한 또 한번의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을 낳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는 계도문에 “공개대상자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확정판결문 기준 시, 군, 구까지만),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5조 계도문의 게시 배포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에 6월,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성 매매 범죄에 대한 교육과 세부 지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대다수(1114명 중 1004명, 90.2%)는 신상공개자의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하고, 이를 전국 시, 군, 구까지 확대하여 게시할 것에 대해서 매우 찬성하거나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재범의 우려가 있고 죄질이 나쁜 경우에만 하여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매우 찬성하거나,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 1114명 중, 무려 1005명(90.2%)이나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자료가 신상공개제도 범위 확대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바로 신상공개 범위 확대로 이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차에 걸친 공개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 성인남녀(약 3500만 명<sup>10)</sup>)의 약 0.0055%에 불과한 1926명의 신상이 공개되었지만, 자신의 주위 사람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나 조직의 일원이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지한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무려 11.8%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단순 비교이지만, 이러한 사실은 현행 신상 공개제도가 얼마나 커다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응답자 314명 중, 64.9%에 해당하는 209명이 향후 공개자의 신원을 직접 확인해 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서 이러한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신상공개제도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 공청회 등과 같은 자리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10) 2002년, 12월 대선 당시, 유권자 수는 3499만 1529명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국 성인 인구는 약 3500만 정도로 추정됨.

이미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범죄자의 교화 및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무엇보다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교육 역시 부진합니다.

신상공개제도가 향후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느냐의 관건은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비전과 계획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 특히 관계기관과의 공조 및 범 정부 차원의 밑그림이나 청사진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여론조사

- 조사개요 : 2003. 4. 11~4. 12
- 조사표본 : 직업, 연령, 성별, 지역, 학력 별 전국성인남녀 1114명
- 조사방법 : 전화 자동응답 설문조사
- 신뢰구간 : 95% 신뢰구간에 ±2.9%

<주요 설문 요지 및 결과>

문 1. 선생님께서는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줌)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알고 있다	잘 모른다	계
		% (명)	% (명)	
전 체	1,114	71.8(800)	28.2(314)	100.0
남 성	549	75.5(414)	24.5(135)	100.0
여 성	565	68.2(385)	31.8(180)	100.0

문 1-1. 알고 있다면 한번이라도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명)	% (명)	
전 체	(800)	28.9(231)	71.1(569)	100.0
남 성	(415)	30.2(125)	69.8(290)	100.0
여 성	(385)	27.5(106)	72.5(279)	100.0

문 1-2. 잘 모른다면 앞으로 확인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명)	% (명)	
전 체	(314)	64.9(204)	35.1(110)	100.0
남 성	(134)	66.2( 89)	33.8( 45)	100.0
여 성	(180)	64.0(115)	36.0( 65)	100.0

문 2. 지금까지 4차례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의 명단에 자신의 주위 사람,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나 조직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확인하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명)	% (명)	
전 체	(1,114)	11.8(131)	88.2(983)	100.0
남 성	(549)	10.9( 60)	89.1(489)	100.0
여 성	(565)	12.7( 72)	87.3(493)	100.0

문 3.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매우 도움 된다	대체로 도움 된다	대체로 도움이 안된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잘 모름	계
		% (명)	% (명)	% (명)	% (명)		
전 체	(1,114)	61.8(688)	28.7(320)	5.2(58)	1.2(13)	3.1(35)	100.0
남 성	(549)	62.8(345)	26.8(147)	7.0(38)	1.8(10)	1.6(9)	100.0
여 성	(565)	61.0(345)	30.4(172)	3.5(20)	0.6(3)	4.5(25)	100.0

문 4. 시, 군, 구까지만 공개되는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의 주소를 세부 주소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게시 장소를 전국 시, 군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잘 모름	계
		% (명)	% (명)	% (명)	% (명)		
전 체	(1,114)	66.2(737)	24.0(267)	5.4(60)	1.8(20)	2.7(30)	100.0
남 성	(549)	65.4(359)	22.5(124)	6.9(38)	3.2(17)	2.0(11)	100.0
여 성	(565)	66.9(378)	25.4(144)	3.9(22)	0.4(2)	3.4(19)	100.0

문 5. 신상 공개 대상자 중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잘 모름	계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114)	71.6(798)	18.6(207)	5.7(64)	2.1(23)	2.0(22)	100.0
남 성	(549)	71.6(393)	16.1(88)	8.0(44)	3.0(17)	1.3(7)	100.0
여 성	(565)	71.5(404)	21.1(119)	3.5(20)	1.3(7)	2.7(15)	100.0

○安大崙 委員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 범죄 대상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에 앞서 남다른 소신과 집념을 가지고 청소년 보호업무에 전념하고 계신 이승희 위원장님께 격려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1. 지난 9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 643명의 명단을 발표했지요?
2. 그런데 이번 제4차 신상공개는 헌법재판소가 청소년 성 보호법 신상공개 조항 여부를 저울질하는 도중에 취한 두 번째 행정처분 아닙니까?
3. 사회 일각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헌법 제 심판을 기다렸다가 판결 여부에 따라 신상공개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 명단공개를 강행한 까닭이 있습니까?
4.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한발 더 내디디어 제5차 공개 때부터는 죄의 경중을 따져 얼굴까지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실 계획입니까?
5. 현행 법령은 신상공개 사항을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요지 등 5개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얼굴까지 공개한다면 위헌 논란 중에 있는 법령을 또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6. 만약 헌법재판소가 성 범죄자 신상 공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대안을 세울 계획이십니까?
7. 본 위원도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는 피해 청소년의 인성과 그의 미래를 황폐화시키는 죄질이라는데 공감 합니다. 그러나 신상공개 대상자들이 이미 법원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다」라는 논란의 여지가 정리된 다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

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8.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1차는 169명, 제2차는 443명, 제3차는 671명, 제4차는 643명으로 매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상 공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 끝으로 한가지만 더물겠습니다. 혹시 청소년 성범죄 대상자 명단 공개 후 그 가족들이나 당사자들로부터 협박성 전화가 걸려 온다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일은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답변서)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金文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인터넷 검색사이트 성인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전까지는 검색포탈사이트의 협조를 구하여 자체적으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시급히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모든 검색사이트에서 위원회 홈페이지와 같은 시스템과 기준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터넷 검색사이트 성인인증제와 관련하여
    - 대표적인 검색사이트(구글, 네이버, 다음, 드림위즈, 심마니, 야후, 엠파스, 한미르 등)에 대하여
      - 음란 및 폭력사이트에 대한 자율 등급표시
      - 19세 이상 성인물에 대하여는 성인인증제 실시
      - 성인인증 전 초기화면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미수록
- 등에 대하여 준수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에 협조를 유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제도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법률 소관 부처인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允式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첫 번째로 신상공개 이전에 피의자에 대한 교정교육 강화 등 근본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상습성과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는 범죄여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개입을 병행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개입을 병행하였을 때 범죄행위의 재발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시범적으로 교도소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동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확대 발전시키고, 법무부 등 교정당국과 협의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확립해 나가는 ‘청소년 성바로 알기 캠페인’을 여성·청소년 단체 등과 함께 전개하여 왔으며,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 각각 성인용, 남·녀 청소년용 소책자를 제작하여, 청소년용은 학교를 통해 배포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도 청소년 건전 성가치관을 조성하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1388 긴급전화와 관련, 그동안 홍보내용과 향후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부 청소년가출상담전화 1588-0924와의 통합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긴급전화 1388운영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긴급전화가 너무 많아, 긴급전화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영에도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긴급전화의 독자적인 활성화보다는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무조정실 등에 동 내용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 청소년 관련전화만도 1588-2828(검찰, 학원폭력), 1391(복지부, 아동학대), 182(경찰청, 미아가출신고), 1588-0924(문화부, 가출상담), 1366(여성부, 여성위기전화) 588-0998(청예단, 학원폭력)이 있고,
  - 기타, 환경, 의약품, 공직비리 등 다양한 긴급전화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로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동 센터의 운영에 따라 긴급전화 1388 문제도 새로운 수요와 활용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센터 운영계획에 맞춰 1388활용방안을 재정비토록 할 것이며 이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588-0924와의 통합 기타 협력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난 4년간 우리 위원회 1388 홍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신문, 반상회보, 게시판 등 게시(매년 수시)
  -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차원에서도 주요 4대 일간신문 광고 게재(매년 수시)
  - 홍보탑 제작 설치
    - 1999년도 2조 :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 2001년도 2조 : 부산역광장, 광주종합터미널 광장
    - 2002년도 1조 : 서울 강동구 현대백화점 앞
  - 지하철 역사 행선안내 게시기 및 전광판 표출광고(2002. 2~4월)
  - 2002년도 홍보 포스타 제작·배포
    - 전국 초·중·고등학교 : 21만부, 전국 PC방 : 1만5천부
  - 기타 우리 위원회 책자 및 행사브로셔 홍보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첫 번째로 청소년들에게 스팸메일이 전달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방지장치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정보통신부에서는 소관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의 매체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장치로 모든 스팸메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란성 스팸메일 발송자의 단속과 함께 건전한 청소년 인터넷 환경조성 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경등의 단속과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및 ‘유해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자율적인 스팸메일 추방을 유도하고 음란성 스팸메일 대응요령 교육 등 청소년 인터넷환경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세 미만이 가입해서 쓸 수 있는 메일주소에는 청소년임을 표기할 수 있는 기호나 문자를 처리해 비록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업자들이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에겐 메일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발본색원하고 국민적 관심으로 고조시켜 신상공개 대상에도 넣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청소년메일에 청소년임을 나타내는 표시방법 안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란성 스팸메일 무단 전송자의 신상공개대상자 포함여부는 향후 제도개선 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시켰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정보통신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것은 음란성 스팸메일의 청소년 유해요소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대책마련 요청을 정보통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는 이와는 별개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자, 영상 등을 게재할 수 없도록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林鎮出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첫 번째로 제4차 신상공개 결과 이전에 공개되었던 범죄자가 4명이나 속해있다는 것은 현행제도의 예방효과가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행 제도는 공개대상자의 인권침해를 우려 상당히 약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목적인 범죄예방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름과 직업만을 공개하여 동명이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예방효과는 감소시키는 현행 제도를 중범죄자에 한해 얼굴도 공개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차 신상공개 시 앞으로의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는 줄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효과는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밝힌 것입니다.

○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고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보장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세부정보를 공개하며, 저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수강 여부를 신상공개심사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 고위험범죄자에 대해 얼굴 등의 세부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로 법개정 및 신상공개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의 확산이 심각함을 지적하시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예방 프로그램과,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규모 채팅 사이트와 연계하여 채팅 감시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인터넷 채팅이 청소년성매매의 주된 매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의 유해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등의 단속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인터넷사이트 건전화정책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 인터넷 사이트 건전화를 위한 「Cool-net For Youth」란 연중 캠페인을 언론사, 민간단체, 관련업계 등과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채팅사이트의 불건전성에 대하여 집중적인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법·제도적 규제에 의한 단속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바, 가장 효율적인 규제방법인 자율규제를 추진하고자 채팅관련 업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 스스로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공개가 강화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애당초의 청소년 성매매 유혹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대국민 홍보자료를 제작, 전국적으로 배포하여 신상공개제도가 강화된다는 것을 전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첫 번째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는데도 상습범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시면서 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 강화와 같은 보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습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고위험 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폐해와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상공개제도를 도입, 4차까지 시행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상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위원님의 말씀처럼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상공개제도와 연계하여 일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시범교육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장기적으로 전체 성범죄자에 대해 교정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상공개 시 얼굴공개를 포함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범의 근거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위헌논란이 예상됨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차 신상공개 시 앞으로의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는 줄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효과는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도개선방향을 밝힌 것입니다.
-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고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보장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세부정보를 공개하며, 저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수강 여부를 신상공개심사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 고위험범죄자에 대해 얼굴 등의 세부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법개정 및 신상공개

도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범죄사실의 공개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성범죄의 모방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 예방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매우 간략하여 그 내용만으로 모방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안을 감안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 성가치관 조성사업을 전국 30개 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남·녀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성보호 홍보책자를 각급 학교 및 다중 이용시설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의 청소년 성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등 우리사회의 청소년 성보호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범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유해매체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의 이용현황과 음란성 스팸메일에 대한 차단대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메일 발송이 근절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및 ‘유해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용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유해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	비 고
2001년	22,915	-	○ 유해스팸메일차단 프로그램의 경우 2003년도부터 제공
2002년	60,263	-	
2003년 4월 14일 현재	14,309	2,895	
계	97,487	2,895	

-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의 경우 CD로 제작하여 ‘학부모미디어교육’ 실시 때 배포(2001년 : 1만 개, 2002년 : 8000개)하였습니다.
- 음란성 스팸메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소관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의 매체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규제장치로 모든 스팸메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음란성 스팸메일 발송자의 단속과 함께 건전한 청소년 인터넷 환경조성 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경 등의 단속과는 별도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및 ‘유해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자율적으로 스팸메일 추방을 유도하고, 음란성 스팸메일 대응요령 교육 등 청소년인터넷 환경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청소년들은 메신저와 P2P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고 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매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도 없는 등 청소년들에 비해 행정기관의 대응이 뒤처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P2P가 청소년들의 음란물 유통창구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규제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와 관련, 검찰·경찰 등 단속기관에서 P2P 회원 개개인에 대한 음란물 게시 및 유통 대상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경의 단속실시와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 인터넷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시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이에 인터넷사이트 건전화정책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인터넷 사이트 건전화를 위한 「Cool-net For Youth」란 연중 캠페인을 언론사, 민간단체, 관련업계 등과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P2P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집중적인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갈 계획입니다.

**(張泰玩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인권위원회의 ‘동성애’조항 삭제 권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동성애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선정적이고 변태적인 사이트는 선별하여 차단하는 등, 정통부 등 관련부서와 협조방안 강구 및 바람직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한 성교육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동성애’ 삭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동성애’ 표현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등 유통시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성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에게 ‘동성애’ 표현물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모니터’, ‘어머니 모니터단’, ‘청소년 모니터단’을 구성하여(2002. 4~)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동성애사이트 등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유해성 콘텐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며, 특히,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 ‘동성애’ 표현물이 성적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의 개정 내지 새로운 기준 설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토론회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편,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성교육은 청소년이 서로의 성에 대하여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의식과 함께 성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의식을 확립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시킬 것입니다.

**(趙在煥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첫 번째로 이번 제4차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 공개자 643명중, 범행일자가 1차 공개일 후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며 그 비율은 몇%인지와, 그 비율을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로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제4차 공개자 643명의 범행일자를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복수범죄일 경우 최초범행일 기준) 제1차 공개일 이전 60.8%(391명), 제1차 공개일 이후에 39.2%(252명)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근거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건국대학교에 의뢰한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연구」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를 계기로 과반수 이상인 55.6%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신상공개를 계기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66%로 높게 나타나 신상공개를 계기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시 범죄유형을 크게 5가지(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등)로 나누어 공개되는데 ‘음란물제작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들을 일컫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음란물제작등’ 범죄유형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일컬으며,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또는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신상공개 된 사례를 보면, 청소년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음란물을 사진이나 비디오물 등으로 제작하였으며, 그 일부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피해청소년에게 사진과일 등을 전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상공개 제도개선사항을 발표했는데 현행 법령 중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하는

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안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 중 고위험군에 대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은 현행 법률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 개정안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상공개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많이 개진되어 왔기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위원회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할 것입니다.
- 또한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崔在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첫 번째로 신상공개제도 본래의 취지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업그レード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차 신상공개시 앞으로의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는 줄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효과는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도개선방향을 밝힌 것입니다.
-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고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보장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세부정보를 공개하며, 저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수강 여부를 신상공개심사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 고위험범죄자에 대해 얼굴 등의 세부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법개정 및 신상공개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계기관에 제출 받은 자료에는 공개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도 종종 신상공개대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지적하시면서 4차 신상공개에서 제외된 당사자들의 현황과 그 제외 사유를 개략적으로 물으셨습니다.

- 제4차 공개자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미수·방조포함) 235명중 208명(88.5%), 강제추행 223명중 200명(89.7%), 성매수 682명중 155명(22.7%), 성매수 알선 71명중 70명(98.6%), 음란물 제작등 10명(100%)등으로 총 1221명중 643명(52.7%)이 공개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2차례의 사전심의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 성매수알선범, 음란물제작범 등은 공개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성매수범은 특히 죄질이 나쁜 일부 사범만이 공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신상공개 심사과정을 보완하려면 신상공개 심사과정에 ‘노블리스 오블리지(Nobless Oblige)’를 반영하는 항목을 추가 배점하는 등 향후 위원회 차원에서 장기적인 행보를 펼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의 고견은 앞으로 신상공개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총 1926명의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실태조사 여부와 이들에 대한 실태과약 및 사후관리를 위한 보완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나 실태과약의 문제는 당사자 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제도의 효과 등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건국대학교에 의뢰하여 공개대상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사후 실태과약 등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들의 거부로 유의미한 자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 공개대상자들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며, 향후 법 개정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일원화된 재활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대상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차원의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대상 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보호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성매수 대상 청소년 사회복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청소년의 재활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신상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어떠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신상공개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상공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우 관심이 높은 사안이니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게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첫 번째로 지난 9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 643명의 명단을 발표했는지 물으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2001년 8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283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으며 지난 9일 제4차로 643명을 공개하였습니다.
- 이들의 범죄유형은 강간 208명, 강제추행 200명, 성매수 155명, 성매수 알선 70명,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10명 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제4차 신상공개는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성보호법 신상공개 조항 여부를 저울질하는 도중에 취한 두 번째 행정처분으로, 사회 일각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렸다가 판결 여부에 따라 신상공개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 명단 공개를 강행한 까닭을 물으셨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현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범죄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계도 시책으로서 신상공개를 중단하지 않고 시행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합헌추정 하에 우리 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5차 공개 때부터는 죄의 경중을 따져 얼굴까지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방침과 관련하여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차 신상공개시 앞으로의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는 줄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효과는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도개선방향을 밝힌 것입니다.
-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고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보장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세부정보를 공개하며, 저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수강 여부를 신상공개심사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 고위험범죄자에 대해 얼굴 등의 세부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법개정 및 신상공개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로 현행 법령은 신상공개 사항을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요지 등 5개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얼굴까지 공개한다면 위헌 논란 중에 있는 법령을 또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 법률의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본 후 그 의사를 존중하여 개정을 추진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대안을 세울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그 결정취지를 살려 향후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피해 청소년의 인성과 그의 미래를 황폐화시키는 죄질이라는 데는 공감하시면서 신상공개 대상자들이 이미 법원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정리된 다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면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이중처벌 논란은 입법과정에서부터 충분히 논의되어 동 법률에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현 제도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 현 제도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중에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 제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합헌추정 하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신상공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개대상 범죄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제3차, 제4차의 공개결정 숫자가 1차 169명, 2차 443명보다 많은 것은 성범죄의 증가에도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는 신상공개가 법원의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범죄발생과 형 확정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3차까지는 공개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제4차 공개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어 공개대상이 643명으로 3차보다 오히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3차 공개 심사대상자 1244명은 2001.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형 확정을 받았으나 이 기간 중에 발생된 범죄는 17.8% 수준인 221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범죄는 그 이전에 발생되었습니다.

제3차 신상공개 심사 대상자의 범죄시기

(단위 : 건)

총계	2000년		2001년		비 고
	7~12월	1~6월	7~12월		
1,244	396	627	221		

- 마지막으로 신상공개 이후 그 가족들이나 당사자들로부터 협박성 전화가 걸려 온다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일은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신상공개 대상자 중 극소수가 우리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위원장과의 대화’란에 글을 올리거나 담당 실무자에게 항의전화 등을 한 사례는 일부 있었습니다.
    - 향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